
2017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

2018. 5.

관계부처 합동

국무조정실
농림축산식품부
식품의약품안전처

교
환
관

육
경
세

부
부
청

법
해
농

양
촌

무
수
진

산
홍

부
부
청

목 차

I . 2017년도 추진실적 총평	1
II . 2017년도 추진실적 요약	3
III . 세부과제별 추진실적	12

I . 2017년도 추진실적 총평

① 추진계획 및 실적

- (추진계획)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('15~'17)에 따라, '17년에는 4대 분야 122개 과제를 수립하여 시행

- ① 위해요소 사전예방 : 33개 ②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: 20개
- ③ 상시 안전관리 강화 : 47개 ④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: 22개

* 식약처 69, 농식품부 21, 해수부 17, 농진청 6, 교육부 3, 환경부 3, 관세청 2, 법무부 1
(식약처·해수부 공통과제 1개 과제 포함)

- (추진결과) 118개 과제 이행완료, 4개 과제 미흡 또는 지연*

*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성과목표 달성율이 90%이하인 경우

- 미흡 또는 지연과제는 △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실적 미흡, △ 완전 배합사료업체 HACCP 확대 미흡, △ 학교 영양·식생활 교육 미흡, △ 건강기능식품 기준 개정 지연

② 과제별 미흡·지연 사유 및 대책

과제	사유 및 대책
2-3-1-① (식약처) 대국민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	○ (추진결과)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인원 실적 미흡 * (목표) 1,000명 / (실적) 244명 ○ (미흡사유) 소비자 참여 저조 및 식품위생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을 점검에 동행할 경우 제대로 된 위생 점검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지자체 등에서 기피 ○ (향후대책) 동 제도의 실효성 낮은 점을 고려,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*을 활용하여 위생점검 과정에 참여토록 개선할 계획 *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지식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촉하고, 위생점검 및 검사 등 지원 수행('17년 8,421명)

과제	사유 및 대책
3-1-7-① (농식품부) 사료 품질·안전 관리 강화	○ (추진결과) 완전배합사료(TMR) 업체의 HACCP 확대 미흡 * (목표) 95개소('16년 대비 13개소 증) / (실적) 88개소('16년 대비 6개소 증) ○ (미흡사유) 사료공장 HACCP 지정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용 사항이며, 최근 TMR사료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렵고, HACCP 적용을 위한 컨설팅 및 시설개선 비용도 부담해야하므로 자발적 참여 부진 * TMR사료 생산량 : ('15) 1,213 → ('16) 1,146 → ('17) 1,109천톤 * 경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정서 반납 발생 : 2개소 ○ (향후대책) HACCP적용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및 희망 공장에 찾아가는 1:1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
4-1-6-① (교육부) 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 교육 강화	○ (추진결과) 학교 영양·식생활교육 실시율 미흡 * (목표) 영양교사 배치학교(5,044개교)의 90% / (실적) 81% ○ (미흡사유) 교육부 정책에 따라 식품안전 및 영양 등 식생활 교육을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, 다양한 교과를 다루어야 하는 학교 교육과정 형편상 일부 일선 학교에서는 편성의 어려움이 있음 ○ (향후대책) 시·도 교육청 관계관 회의, 영양교사 직무연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추진 실적도 점검 - 아울러, 영양·식생활 교육 자료를 개발·보급하는 등('18.하)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을 지원할 계획
4-3-1-① (식약처)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	○ (추진결과) 비타민·무기질 최대함량기준 개선 지연 ○ (지연사유) 연구용역 등을 통해 '17.6월까지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었으나, 전문가 자문 등 추가검토에 따라 지연 ○ (향후대책) '18년 내 기준개정 완료 추진 * 진행현황 : 전문가 자문회의('18.2.9.), 행정예고('18.3.~5)

Ⅱ. 2017년도 과제별 추진실적 요약

1 과제 현황

구 분	과제	세부과제
총 괄	60	122
1. 위해요소 사전예방	15	33
1-1.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	6	15
1-2.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	3	7
1-3.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·분석 강화	3	3
1-4. 농·축·수산물 안전성 강화	3	8
♣ 식약처 15, 농식품부 9, 해수부 9		
2.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	11	20
2-1. 위기대응 역량 강화	2	2
2-2. 미래대비 선제 대응	3	5
2-3. 국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	4	8
2-4. 식품안전관리 국제경쟁력 제고	3	5
♣ 식약처 14, 농식품부 4, 해수부 2		
3. 상시 안전관리 강화	20	47
3-1. 생산·제조단계 안전관리	8	26
3-2. 유통·소비단계 안전관리	4	11
3-3. 불량식품 근절	4	5
3-4. 식습관 반영 식품 기준·규격 재평가	4	5
♣ 식약처 24, 농식품부 11, 해수부 6, 환경부 3, 관세청 2, 법무부 1		
4.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	13	22
4-1.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	6	9
4-2.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	5	10
4-3.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	2	3
♣ 식약처 16, 농식품부 3, 교육부 3		

2 과제별 추진결과

과제명	세부과제명		추진부처	추진상황
1. 위해요소 사전예방				
1-1.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				
1-1-1	농산물우수관리제도(GAP) 활성화	① 농산물 우수관리제도(GAP) 활성화	농식품부	이행완료
1-1-2	친환경 농업 및 양식어업 시스템 구축	① 친환경농업 생산·유통시스템 구축	농식품부	이행완료
		② 친환경양식어업 시스템 구축	해수부	이행완료
1-1-3	안전관리인증(HACCP)확대	① HACCP 적용업체 인증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HACCP 적용업체 재정·기술지원 확대	식약처	이행완료
		③ HACCP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	농식품부	이행완료
		④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	해수부	이행완료
1-1-4	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	① 식품 이력추적제 활성화 및 기반 조성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축산물 이력관리 강화 방안	농식품부	이행완료
		③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활성화	농식품부	이행완료
		④ 수산물 이력제 확대	해수부	이행완료
		⑤ 국산 천일염 이력관리 강화	해수부	이행완료
1-1-5	주류 안전 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	① 주류 안전기준·법규 재정비 및 건강한 소비·섭취 홍보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주류 제조업체 기술지원 및 제조·유통 안전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1-1-6	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적용 확대	①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	식약처	이행완료

과제명		세부과제명	추진부처	추진상황
1-2.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				
1-2-1	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출국 위생평가	① 수입 전(前) 해외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축산물 수출신청국에 대한 위생평가 절차 및 기준 마련	식약처	이행완료
1-2-2	수입식품 현지실사 및 위생협력 강화	①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및 우수 수입업소 등록 확대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및 현지실사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		③ 수입 수산물 해외수출국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점검	해수부 식약처	이행완료
1-2-3	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자 책임강화	① 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입 식품 수입	식약처	이행완료
1-3. 위해정보 수집·분석 및 조치 강화				
1-3-1	통합식품안전 정보망 구축	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활성화	식약처	이행완료
1-3-2	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·분석 강화	①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1-3-3	수산물 안전 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	①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	해수부	이행완료
1-4. 농·축·수산물 안전성 강화				
1-4-1	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강화	① 분석인력의 교육·훈련 강화	농식품부	이행완료
		② 농산물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	농진청	이행완료
		③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 안전성 연구 강화	농진청	이행완료
1-4-2	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 강화	① 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강화	농진청	이행완료
1-4-3	축·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강화	① 축수산물 안전관리 과학화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수산물의 과학적·효율적 안전관리 강화	해수부	이행완료
		③ 수산물의 위해성 평가 연구·강화	해수부	이행완료
		④ 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	해수부	이행완료
15개 과제		33개 세부과제(식약처·해수부 중복과제 1)		이행완료

과제명	세부과제명	추진부처	추진상황
2.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			
2-1. 위기대응 역량 강화			
2-1-1	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및 지속 정비	① 식품안전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제·개정	식약처 이행완료
2-1-2	위기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·훈련 강화	① 위기대응 역량 강화	식약처 이행완료
2-2. 미래대비 선제 대응			
2-2-1	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	①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	식약처 이행완료
		②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	식약처 이행완료
		③ 유전자변형식품 소비자 정보교류 강화	식약처 이행완료
2-2-2	나노식품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	① 나노기술응용식품 안전성평가 기반 마련	식약처 이행완료
2-2-3	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	①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전 관리 체계마련	식약처 이행완료
2-3. 국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			
2-3-1	대국민 소통 강화 및 소비자 참여확대	① 대국민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	식약처 미흡
		② 소비자 정보 교류 강화	농식품부 이행완료
		③ 수산물 위해정보 소통 강화	해수부 이행완료
2-3-2	식품등 표시제도 개선, 홍보 강화	①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 및 홍보 강화	식약처 이행완료
2-3-3	원산지표시 제도개선 및 단속 효율화	①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	농식품부 이행완료
		② 수산물 원산지제도 관리 강화	해수부 이행완료
2-3-4	농수산물인증·표시제도개선	① 농산물 인증·표시제도 개선	농식품부 이행완료
		②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	농식품부 이행완료

과제명		세부과제명	추진부처	추진상황
2-4.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				
2-4-1	국제적 수준의 시험·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	① 시험·검사능력 선진화 단계 진입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시험 검사기관 사후관리 및 지원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2-4-2	식품안전관리 국제협력 강화	①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한아세안 위생협력	식약처	이행완료
2-4-3	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	① 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	식약처	이행완료
12개 과제		20개 세부과제		이행완료
3. 상시 안전관리 강화				
3-1. 생산·제조단계 안전관리				
3-1-1	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	①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	농식품부	이행완료
		② 농산물 재배환경 안전관리	농식품부	이행완료
		③ 국내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	농식품부	이행완료
		④ 가축사육환경 개선	농식품부	이행완료
		⑤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	농식품부	이행완료
		⑥ 오염우려지역 농산물 등 안전관리	식약처	이행완료
		⑦ 축산물 유통 전(前)단계 안전성 검사 지속 관리	식약처	이행완료
3-1-2	수산물 안전관리 강화	①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	해수부	이행완료
		② 수산물 생산해역 안전관리 강화	해수부	이행완료
		③ 국내 생산 천일염 안전관리 강화	해수부	이행완료
		④ 수산물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 강화	해수부	이행완료
		⑤ 수산물 안전성 조사	식약처	이행완료
3-1-3	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·점검 강화	① 위생취약분야 선제적 지도·점검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단순가공 농·수산물 관리 체계 구축 및 위생수준 개선	식약처	이행완료

과제명		세부과제명	추진부처	추진상황
3-1-4	제조단계 이물 등 위생관리 강화	① 제조단계 이물 저감화를 위한 업계 지원	식약처	이행완료
3-1-5	농약 안전관리 강화	① 부정·불량 농약에 대한 유통단속 및 교육강화	농진청	이행완료
		② 농약직권등록 및 직권그룹화 적용방안	농진청	이행완료
		③ 농약 위해성 재평가	농진청	이행완료
3-1-6	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	①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·유효성 관리 강화	농식품부	이행완료
		② 우수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	농식품부	이행완료
		③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	해수부	이행완료
3-1-7	사료안전관리 강화	① 사료 품질·안전관리 강화	농식품부	미흡
		② 친환경 실용 배합사료 개발 및 품질관리 연구	해수부	이행완료
3-1-8	먹는물 안전관리 강화	① 수돗물 중 미량 유해물질 관리 강화	환경부	이행완료
		②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감시	환경부	이행완료
		③ 먹는샘물 수질 안전성 강화	환경부	이행완료
3-2. 유통·소비단계 안전관리				
3-2-1	유통식품의 수거·검사 강화	① 유통단계 가공식품 및 축산물 수거·검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농수산물식품 선제적 안전관리	식약처	이행완료
		③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3-2-2	식품등의 허위·과대광고단속 강화	① 식품 등 허위·과대광고 안전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3-2-3	위해식품 회수체계 강화	① 위해식품 회수제도 개선	식약처	이행완료

과제명		세부과제명	추진부처	추진상황
3-2-4	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	① 위해정보 수집·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수입식품 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에 따른 축수산물 정밀검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		③ 해외 원전사고에 의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	식약처	이행완료
		④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	식약처	이행완료
		⑤ 수입물품검사 강화로 불법식품류 반입차단	관세청	이행완료
		⑥ 수입식품의 원산지 조작행위 차단	관세청	이행완료
3-3. 불량식품 근절				
3-3-1	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 지속 강화	①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3-3-2	범정부 합동 기획감시 및 제도개선	①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	식약처	이행완료
3-3-3	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과학적 분석법 개발	① 불량식품 과학적 감시체계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3-3-4	식품위해사범 단속 강화	① 식품 위해사범 단속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식품 위해사범 단속	법무부	이행완료
3-4. 식습관 반영 기준·규격 재평가				
3-4-1	농약·중금속· 미생물·첨가물 등 기준·규격 재평가	① 농약·첨가물 등 기준·규격 재평가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오염물질·미생물 기준·규격 재평가	식약처	이행완료
3-4-2	기구·용기·포장 기준·규격 재평가	① 기구·용기·포장 기준·규격 재평가	식약처	이행완료

과제명		세부과제명	추진부처	추진상황
3-4-3	인체모니터링 기반 통합 위해평가	① 유해물질 노출 수준 확인 및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	식약처	이행완료
3-4-4	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연구	①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공전 간 조화를 위한 시험법 마련	식약처	이행완료
20개 과제		47개 세부과제		이행완료

4.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

4-1.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

4-1-1	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환자용 영양식품관리	①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확대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개발·보급 기반 마련	식약처	이행완료
4-1-2	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확대 및 내실화	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지원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4-1-3	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	① 영양표시 확대·개선 및 교육·홍보	식약처	이행완료
4-1-4	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	①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·판매환경 개선	식약처	이행완료
		②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별 식생활 안전· 영양 교육 지원 확대	식약처	이행완료
		③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·공표	식약처	이행완료
4-1-5	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	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	농식품부	이행완료
4-1-6	학교 식생활 교육 및 영양 관리 강화	① 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 교육 강화	교육부	미흡

과제명	세부과제명	추진부처	추진상황
4-2.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			
4-2-1	식중독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	①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	식약처 이행완료
		② 식중독 예방 홍보·교육 강화	식약처 이행완료
		③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강화	식약처 이행완료
		④ 식중독균 추적관리	식약처 이행완료
4-2-2	음식점주방문화 개선	① 주방문화 개선	식약처 이행완료
4-2-3	나트륨 및 당류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	① 나트륨 저감 실천 확산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	식약처 이행완료
		② 당류 섭취 저감화 추진	식약처 이행완료
4-2-4	학교급식 위생·안전관리 강화	① 학교급식 점검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	교육부 이행완료
		② 식재료 납품전 안전성 조사체계 강화	농식품부 이행완료
4-2-5	학교 식중독 대응 체계 확립	①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	교육부 이행완료
4-3.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			
4-3-1	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	①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	식약처 지연
		② 건강기능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	식약처 이행완료
4-3-2	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	① 기능성평가센터 건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	농식품부 이행완료
13개	22개 세부과제		
60개 과제	총 122개 세부과제 (식약처 69, 농식품부 27, 해수부 17, 교육부 3, 환경부 3, 관세청 2, 법무부 1)		

Ⅲ. 분야별 추진 실적

1. 위해요소 사전예방

1-1. 위해식품 사전 관리체계 구축

1-1-1	농산물 우수관리제도(GAP) 활성화
①	농산물 우수관리제도(GAP) 활성화

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이원형 사무관 T.044-201-2278

1. 과제내용

□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인 GAP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

○ 농산물 생산·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위해요소 적정 관리

□ 농업인, 소비자 지향적 제도·교육·홍보를 통해 GAP 인증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소비자 신뢰제고

* 소비자 GAP 인지도: '12) 35% → '13) 43 → '14) 57 → '15) 61 → '16) 66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주산지 토양·용수분석(135개소) 등 기반을 확충하고 GAP 농산물 판로 확대	○ 기반 확충 및 GAP 농산물 판로 확대 - 토양·용수 분석 프리존* 조성 * 총 229,544ha, 전체 농경지의 13.9% - 유통실무협의체 구성·운영 등을 통해 GAP 판촉전 및 캠페인 개최 * 4, 8, 11월 3회실시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경진대회, 팜투어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및 교육·컨설팅 확대	○ 제3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(9.21.) 및 학교관계자 대상 팜투어 실시(10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GAP 인증 농가 비율(% , 전체 농가 대비)	8.1	8.1

* 정책여건 등을 반영하여 '17년도 성과목표를 8.1% 수정('17.2월)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(성과) 정부의 GAP 제도 확대 정책, 민간업체의 참여 등으로 '17년도 목표치(전체농가 대비 GAP 농가 8.1%) 달성
 - '16년 대비 GAP 인증농가는 10천호(13.7%), 재배면적은 14천ha (16.2% ↑) 증가하여 17년도 목표 달성
- ☐ (한계) GAP 인증농가 및 인지도는 상승 추세이나 GAP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으로 보편적 확산, 구매로 연계에는 한계
 - (생산) GAP 인증이 단기적인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, 컨설팅 지원 부족, 인증비용 지불 부담 등으로 GAP 인증 참여에 소극적
 - (유통) 쌀·과일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연간 안정적인 물량 확보·공급 애로 등으로 적극적인 GAP 농산물 취급에 부담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주산지 GAP 토양·용수 안전성분석 지역 확대, 연계 컨설팅 지원 등으로 GAP 인증 농산물 생산량 제고

- 주산지 GAP 토양·용수 안전성 분석 사업('18년 국비 55억원)을
통해 GAP 인증 비용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공
 - * ('17. 누적) 전체 경지면적의 13.9% → ('18) 27%까지 확대
- GAP 인증 참여 의지가 높거나 과채류 등 유통·급식업체 수요가
높은 품목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GAP 컨설팅 실시(5,000농가)
 - * 유통·급식업체 계약농가,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받은 지역 농가 등
- GAP 농산물 사용 신규수요처 발굴, 기존 민간업체와의 협업 강화 등을
통해 GAP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산물 가격 지지
 - 학교 과일간식 제공 프로그램*의 과일 공급기준에 GAP를 명시
하고 영양(교)사·학교장 대상 교육 등으로 GAP 가치전파
 - 유통업체와 MOU,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관련 정책과 연계, 등을
통해 GAP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

1-1-2	친환경 농업 및 양식어업 시스템 구축
①	친환경농업 생산·유통시스템 구축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최병인 사무관 T.044-201-2443
 농기자재정책팀 안치홍 사무관 T.044-201-1892

1. 과제내용

- ☐ 지속가능한 전문화·집단화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 추진
- ☐ 유기질비료,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지력 증진 및 농산물 품질제고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친환경농업지구·단지 인센티브 사업 지원(1개소, 4억원) ○ 친환경농업지구조성지원 (20개소, 73억원) ○ 친환경농자재 지원 - 유기질비료 : 320만톤, 1,600억원 -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: 62만톤, 599억원 ○ 유기농업자재 지원(31억원)	○ 친환경농업지구·단지 인센티브 사업 지원(3개소, 14억원) ○ 친환경농업지구조성지원 (13개소, 63억원) ○ 친환경농자재 지원 - 유기질비료 : 320만톤, 1,600억원 -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: 62만톤, 599억원 ○ 유기농업자재 지원(31억원)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친환경인증면적 비율(% , 총 경지면적 대비)	5.2	5.0
○ 유기물 함량(%)	2~3	2.5

3. 성과 및 한계

- 친환경농산물 생산·유통·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 기반 마련

* 친환경인증면적(16개소) : (선정당시) 2284.4ha →
(’17년말) 2502.8ha(218.4ha증가)

- 친환경농업지구·단지 내 인증면적 및 비율 증가

- 친환경농업지구·단지 내 인증면적은 32.8%로 전체 친환경인증면적 비율(5%) 대비 6.6배이며, 지구·단지 내 친환경 인증면적은 27,011ha로 전체 친환경인증면적(80,114ha)의 33.7% 차지

* 지구·단지 내 친환경농업 이행률: (’15) 29.9% → (’16) 32.0 → (’17) 32.8%

-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

-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토양의 적절한 유기물 함량 유지
- 토양검정에 따른 토양개량제 적정량 공급으로 토양 산성화 방지

*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함량 2.5%, 발토양 산성도(pH) 6.3으로 적정함

-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신규 수요 감소 추세

- 그동안 광역단지 48개소(’06~’16), 친환경농업지구 1,186(’05~’17) 육성함에 따라 사업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’22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8% 달성에 애로

4. 향후 추진계획

- 사업의 내실화 및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이행 실적 중점관리

-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·분석하여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 대책 강구

- 사업 수요 및 인증면적 확대 기존 사업 지침 변경 추진
 - 사업대상, 자격·요건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농업 지구를 육성하여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 확대
- 토양에 우수한 유기물을 공급을 위해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강화
 - 비료 품질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비료업체의 원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판매까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강화
- 토양개량제 적정량 살포를 위한 지자체, 농협 공동살포 확대 유도
 -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토양개량제 살포 감소에 대응하여 공동 살포가 용이하도록 톤백 공급 확대 및 우수사례 전파,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 추진

1-1-2	친환경 농업 및 양식어업 시스템 구축
②	친환경양식어업 시스템 구축
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박승희 사무관 T.044-200-5635

1. 과제내용

- ☐ 깨끗한 환경에서 무항생제, 무병의 건강한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보급 및 배합사료 활성화
 - 질병감염,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양식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, 안전한 양식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신규 친환경 양식기술·시스템 보급을 위한 공모 추진(3월)	○ 친환경 사업 공모 사전 설명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(2.16)
	○ 친환경 양식기술·시스템 보급을 위한 공모 추진(1차, 4.12~5.15 / 2차, 9.20~10.20)
○ 공모 신청 사업의 평가 및 선정(5월)	○ 사업 평가(6.8~9/11.16) 및 선정(42개 사업 중 22개)
	○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현지 점검(10.26~11.9) 및 사업 활성화 회의(11.29) 개최
○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장 구축 지원(12월)	○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장 구축 지원 및 컨설팅 실시(6~12월, 5개소)
○ 배합사료 순회교육 실시(1~12월)	○ 배합사료 순회교육 실시(1~12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친환경 양식 생산시스템 구축(개소)	5	5
○ 배합사료 순회교육 실시(횟수)	5	5

3. 성과 및 한계

- 친환경 양식시스템 확대 및 배합사료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수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
- 친환경 양식시스템 기술 난이도 및 설치에 필요한 사업부지 확보, 설계, 계약 등 행정절차 문제로 사업추진 취소, 지연 등 문제 발생
 - 생사료 대비 사료효율, 가격 등의 문제로 배합사료 사용 기피

4. 향후 추진계획

-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지속 및 사업자 관리 등 컨설팅 제공하고, 배합사료 인식개선을 위한 고품질 사료개발 지속
- 친환경 양식시스템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,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추진
 - 배합사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배합사료 품질 개발 및 활성화 로드맵 마련 추진('18.上)

1-1-3	안전관리인증(HACCP) 확대
①	HACCP 적용업체 인증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강승극 사무관 T.043-719-2854

1. 과제내용

- HACCP적용 확대를 통한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 마련 및 증가하는 HACCP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 - 서민기호식품(순대 등), 매출액 100억원 이상 HACCP의무적용 추진
 - * 순대(종업원 2명 미만) 및 떡류(매출액 1억이상이면서 종업원 10명 이상)
 -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단계별 HACCP의무적용 추진('14~'20)
 - 식육가공업 단계별 HACCP의무적용 추진('18~'21)
 - HACCP적용 시 영업자 부담 해소를 위한 「HACCP관리 전산 기준서」 개발·운영 등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서민기호식품, 어린이기호식품 및 식육가공업 등 HACCP 의무화 확대	○ 서민기호식품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 HACCP 인증(105개소) ○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한 단계별 HACCP 의무적용 추진('14~'20) - HACCP 인증 확대를 위한 재정 및 현장 기술지원 실시 * (재정지원) 660개소, (기술지원) 3,129개소 * HACCP제품 인증률: 20.2%(목표 19.9%) ○ 식육가공업 단계별 HACCP의무 적용 추진('18~'21) *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12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「HACCP 관리 전산 기준서」 개발·운영 ○ HACCP 미인증업체 위해예방 관리계획(HACCP Plan) 적용(~'17) ○ HACCP 인증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연장심사 추진(8월) ○ HACCP 업체 계절별·성수기별 수시·기획 불시평가 실시(연중) ○ HACCP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(연중)	○ 「HACCP 관리 전산 기준서」 개발·운영(2월, 234개소 등록) ○ HACCP 미인증업체 위해예방관리 계획 적용 완료 * 18,168개소('16년 5,208, '17년 12,960) ○ HACCP 인증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연장심사 완료(8월) * 1,971개소 심사(적합 1,677, 유예 9, 부적합 15, 인증서 반납 등 270) ○ 수시·기획 불시평가 45.5% 실시 * 목표 36% 대비 126.4% 달성 ○ HACCP 광고 및 우수사례 소개 등 홍보 영상 송출(9~11월) * TV, KTX, SRT, 영화관 등 ○ 초등학생 대상 HACCP 교육(26회, 901명) 및 소비자 캠페인(8~11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HACCP인증율(%)	19.9	20.2

3. 성과 및 한계

- HACCP의무적용 단계적 추진에 따라 영세 소규모(5억미만, 21명미만) 대상 업체 증가에 따라 업계 부담으로 HACCP 의무화 추진 애로
- HACCP의무대상 총 7,698개소 중 소규모 업체 6,399개소(83%)

4. 향후 추진계획

- 소규모 HACCP의무 대상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및 현장 기술 지원 실시 및 대국민 대상 HACCP제도 홍보
 - 시설개선비 및 컨설팅비 지원 : ('17) 660개소 → ('18) 576
 - 현장 기술지원 : ('17) 3,129개소 → ('18) 4,300

1-1-3	안전 관리인증(HACCP) 확대
②	HACCP 적용업체 재정·기술지원 확대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강승극 사무관 T.043-719-2854

1. 과제내용

- ☐ HACCP적용 희망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기술 및 재정지원 지속
 - 영세업체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HACCP적용 유도로 식품업체 전반의 위생수준 향상
 - 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기술 및 재정지원 지속 추진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HACCP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및 컨설팅비 지원(연중) * 재정지원 : ('16) 46.05억원 → ('17) 53.07 ○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(연중) * HACCP 인증 전 : ('17) 900개소 이상 * HACCP 인증 후 : ('17) 900개소 이상	○ HACCP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및 컨설팅비 지원(연중) - 순대, 떡류 등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품목 시설개선자금 지원 * 재정지원 : ('16) 46.05억원 → ('17) 51.26 ○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(연중) * HACCP 인증 전 : ('17) 1,982개소 * HACCP 인증 후 : ('17) 1,147개소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HACCP의무적용 단계적 추진에 따라 영세 소규모(5억미만, 21명미만) 대상 업체 증가에 따라 업계 부담으로 HACCP의무화 추진 애로
 - HACCP의무대상 총 7,698개소 중 소규모 업체 6,399개소로 (83%)

4. 향후 추진계획

- 소규모 HACCP의무 대상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및 현장 기술 지원 실시 및 대국민 대상 HACCP제도 홍보
 - 시설개선비 및 컨설팅비 지원 : ('17) 660개소 → ('18) 576
 - 현장 기술지원 : ('17) 3,129개소 → ('18) 4,300

1-1-3	안전관리인증(HACCP) 확대
③	HACCP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이동식 서기관 T. 044-201-2526

1. 과제내용

- ☐ HACCP 인증확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인증농가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HACCP 컨설팅 및 HACCP 인증 이후 사후관리 미흡농가 기술지원 ○ 소규모 농장 표준지원서 제작·배포	○ HACCP 컨설팅 추진 목표대비 100% 완료(목표 335/실적 336) ○ 5개 축종* 총 400부 기준서 제작 * 한우, 젓소, 돼지, 산란계, 육계(오리)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생산단계(농장) HACCP 인증 개소	7,740	7,487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HACCP 컨설팅 및 소규모 농장 표준지원서 제작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, 조류인플루엔자 발생,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HACCP 인증 축산농가 확대에 한계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대규모 축산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의무화 추진

1-1-3	안전 관리인증(HACCP) 확대
④	양식장 HACCP 등록 확대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.044-200-5622

1. 과제내용

- ☐ 육상양식장의 잠재적 위해요소에 대해 사전 예방·관리 지속 강화
 - 항생제·용수 등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·관리하도록 위생·안전 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HACCP 등록 양식장 지속 확대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'17년도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(2월) - 사업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실시(3월~) ○ '17년도 육상양식장 위생관리 실태조사 실시(3월) - 실태조사를 통해 HACCP 등록 가능 양식장 지속적으로 발굴	○ '17년도 양식장 HACCP 등록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수립('17.2.9) - 사업대상자 선정('17.3.30) - 컨설팅 105개소 실시, 42개소 등록완료 ○ 육상양식장 200개소 실태조사 실시 - 차년도 컨설팅 우선 실시 가능 50개소 양식장 발굴(3~11월)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양식장 HACCP 등록(개소)	140	154

3. 성과 및 한계

□ 성과

- '17년 42개소 등록, 전년 대비(35개소) 20% 증가
 - * ('05~'14) 43개소 → ('15) 35개소 → ('16) 35개소 → ('17) 42개소
- 등록가능 양식장 약1,000여 개소 중 154개소 등록 (15.4%)

□ 한계

- 등록 이행 양식장 정부정책 지원 등 참여 유인책에 한계
- 출하 수산물에 대해 가격우대 등 시장 경쟁력 부족
- 정책 등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수준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2018년도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('18.2)

- 컨설팅 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실시('18.2~)
- 육상양식장 위생관리 실태조사 실시('18.3~)
- 설명회·워크숍 및 등록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 홍보 실시

1-1-4	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
①	식품 이력추적제 활성화 및 기반 조성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강승극 사무관 043-719-2854

1. 과제내용

- ☐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도입에 따른 운영지원
- ☐ 식품이력추적관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확산
- ☐ 생산·가공·판매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반조성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제품 등록 추진(연중) * (영유아) 매출 1억미만, (건기식) 매출 10억이상 (조제유류) 매출액 1억이상 ○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등록을 위한 설명회, 교육 등 영업자 지원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(연중)	○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제품 등록 추진 완료 - 식품이력추적 등록(592개소), 성과 목표(500개소) 대비 118.4% 달성 * 등록업체(개소):('16) 5,901 → ('17) 6,493 * 등록품목(개):('16) 11,592 → ('17) 21,094 ○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교육, 현장 기술지원 및 홍보 등 실시(연중) -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대상 설명회·교육(41회, 총 1,365명, 1,167개 업소), 맞춤형 현장기술지원(2,324회) - 식품이력제도 대국민 홍보(4회) * 식품안전의 날(5월), 서울국제식품산업 대전(5월), 국제식품소재기술전(9월),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(11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이력추적시스템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(2회/년)	○ 식품이력추적시스템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(2회) - 식품 원재료(농·축·수산물)까지 이력 정보 연계를 위한 '이력추적실무 협의체' 개최(2회, 6·12월) * 식약처(식품이력), 농식품부(농산물·국내/수입축산물 이력), 해수부(수산물이력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식품이력추적등록업소수(누계)	6,400	6,493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'17년도 목표치(의무등록 대상업체 500개소) 대비 592개 업체가 등록되어 로드맵상의 의무화 성공적 수행(목표달성도 118.4%)
- 현 등록업소는 정상 등록·운영 중이나, 적용품목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점진적인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
- * 식품 전체 생산량 대비 식품이력 적용품목은 영유아식·건기·조제유류에 한정되고 0.7% 수준(208/29,075MT, '16년 생산실적 기준)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4단계 시행을 위한 지원 지속추진
- 의무 및 자율업소를 대상 제도설명, 교육 및 현장기술지원 추진
- * (건기식) 연 매출액 1억 이상, (조제유류) 연 매출액 1억 미만인 제조·수입업체
- ☐ 식품이력 적용 활성화를 위한 품목확대
- 환자식·임산부 대상 식품으로 의무적용확대(식품위생법 시행규칙, '18.12)
- 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추적관리 연계추진
- 식품, 농·축·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및 시스템 보완

1-1-4	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
②	축산물 이력관리 강화 방안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소병록 사무관 T.044-201-2346

1. 과제내용

- ☐ 축산물의 생산·유통·소비단계별 수집정보에 대한 품질을 강화하고 타 부처(기관) 식품(축산) 정보와의 융·복합으로 축산물 이력정보를 활용한 식품 등 안전관리 지원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축산물이력법 하위법령 개정* 추진(6월) * 이력제 이행 대상에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소 추가(약 9,972개소) ○ 축산물이력정보 생산기반 강화 - 유통표준코드 연구용역 - 사육단계 이력정보 정확도 향상 * 오류검증 연구용역 수행 ○ 이력관리 이행여부 정기 모니터링 - 시도별 식육유통업소 월별 점검 - 사육단계 이행실태 평가	○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개정 완료(6월) ○ 축산물 유통코드 표준화 연구(12월) * 유통코드실태파악→표준화→업계확산 ○ 돼지 사육단계 이력정보 정확성 검증(10월) * 사육현황집계결과 정확성 97%입증 ○ 소 이력자료 가축동향조사 대체 ('17.3분기~, 30억원 절감효과) * (기존) 통계청 조사 → (개선) 소 이력자료 ○ 유통단계 월별 모니터링 결과(1~12월) * (소) 포장처리99.8%, 판매업소93.9% * (돼지) 포장처리99.7%, 판매업소92% ○ 축평원·농협 교차점검(상·하반기) * 소 사육현황 일치율 99.3%('16_99.1%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축산물이력제 인지도 제고 - 워크숍 추진, 정책만족도 조사 등 ○ 이력자료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- 민간기관(시스템) 정보 교류 - 구제역 발생·확산 모니터링	○ 축산물이력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(7월,12월) 및 빅데이터 경진대회(5월) 개최 등 추진 ○ 축산물이력제 정책만족도 조사 실시(12월) * 소 : ('16) 81.4점 → ('17) 87.0점 - 돼지 : ('16) 47.2점 → ('17) 68.2점 ○ 민간보험사 정보연계로 이력정보 활용 확대 * 업무간소화 및 보험금 지출 정확성 확보 ○ 백신접종 및 이동·폐사정보 제공 * 홈페이지·모바일앱 제공 서비스(11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돼지고기 이력정보 활용률(%)	409.2	414.9
○ 육우 이동신고 체결률(%)	90.1	91.2

3. 성과 및 한계

☐ 축산물이력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제도 실효성 확보

- (내용)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(약 9,972개소) 이행대상 추가

☐ '17.3분기부터 소 이력자료 가축동향조사 대체

- 소 이력제 시행('08.12.)후 신뢰성과 정확성이 검증되어 국가통계승인
 - * (효과) ① 통계품질 향상, ② 피조사자 응답부담 경감, ③ 예산 절감(약 30억원)

☐ 축산물 유통코드 표준화 및 시범운영 방안 도출(연구용역 완료)

☐ 돼지고기이력제 이력정보(사육·유통) 활용을 위한 연구 완료

- 돼지 이력정보(사육현황, 거래정보 등) 정확도 및 활용 강화 기반 확보
 - * (결과) 현 사육현황신고 정확도 97%, (현장점검 표본수 제시) 농장 274개소, 유통업소 445

☐ 가축의 사육·유통·소비 전 과정에서 이력관리제도 이행 정착

* (사육) 기한내 귀표부착율 : ('15) 99.2% → ('16) 99.3 → ('17) 99.2

* (도축) 100%, (포장처리) ('16) 89.2 → ('17.11) 96.2,

(식육판매업) ('16) 93.0 → ('17.11) 97.8

* (소비자 이력정보 조회, 소/돼지) ('16) 44,243/1,677 → ('17) 45,655/1,728

☐ 축산물이력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대국민 인지도 향상

* 대국민 인지도 : (소) 87.0점('16년 81.4), (돼지) 68.2('16년 47.2)

☐ 축산물이력정보시스템과 민간보험사 정보 연계로 이력정보 활용 확대

○ 정보시스템 협업체계 구축으로 업무간소화 및 보험금 지출 정확성 확보

☐ 소 사육단계 이력관리 지도·단속으로 이력정보 정확성 제고

○ 시·도(지도단속), 축평원·농협·위탁기관 협업 지도단속 체계 구축

* 소 사육농가 3,492호 지도단속 실시, 107건 과태료 처분(위반율 3.06%)

☐ 소 위탁기관 및 사육농가 이력관리 이행실태평가를 통한 이력정보 관리 강화

○ 사육현황 일치율 99.3%로 전년대비 0.2%p 향상('16년 99.1%)

☐ 제도 이행주체가 신고한 자료를 우편·SMS 등의 방법으로 환류

○ 양도·양수 등 신고 SMS안내(1,091,586건), 우편안내(120,293)

☐ 가축시장 거래 시 기한 내 거래내역(신고율 71.0%) 전산등록 관리 미흡

☐ 돼지 사육단계 사육현황 미신고 등 이행결과 피드백 등 미흡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가축시장 전산시스템과 이력관리시스템 전산등록 편리성 개선으로 기한내 신고율 향상 노력

☐ '18년부터 소 농장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돼지 농장 점검·단속 실시

1-1-4	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
③	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활성화

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문경숙 사무관 T.054-912-0380

1. 과제내용

- ☐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 영업장 관리를 통한 제도 정착
 - 전자적 거래신고, 이력번호 표시 등 제도 준수사항 지도·점검
 -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 영업자·소비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대상 영업장 지도·점검(1,000개소) ○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- 영업자 대상 제도 안내 및 거래 내역 전산신고 방법 등 교육(12회) - 취약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및 이력관리시스템 교육·홍보(연중) - 주부 대상 이력정보 설명 및 이력정보 조회 교육 행사(3회) - 수입쇠고기 유통관리제 인터넷·대중매체 홍보	○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대상 영업장 지도·점검(1,550개소) - 123건 위반(위반율 7.9%) ○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- 영업자 대상 권역별(집합) 순회 교육(30회, 3,740명) - 전자적 거래 대상업소 방문 교육 및 원격지원(233개소) - 소비자단체 현장체험행사 운영(5회) - 우수급식·외식산업전, 서울국제 식품산업전 홍보관 운영 - 지하철 PDV 및 KTX열차 광고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: 해당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□ (성과)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관련 현장점검 및 홍보 강화

- 영업장 지도점검 및 교육·홍보를 통한 제도 안정화 기반 마련

* 영업장 1,510개소 점검(위반 119건), 소비자 현장체험 등 교육·홍보 3,900명

□ (한계) 이력관리 대상품목 및 대상업종 확대에 따른 이력관리제도 운영 강화 요구 증대

-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('18.12.28)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보강 등 운영기반 마련 필요

- 수입돼지고기 전문 취급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 대상업종 추가에 따른 관리 강화방안 마련

* 이력관리제 대상업체 : (종전) 77,011개소→(확대) 115,266개소(50% ↑)

4. 향후 추진계획

◆ 대상별 맞춤형 교육(영업자·소비자·공무원)을 통한 제도 안정화

◆ 제도 준수율 제고를 위해 취약업소 대상 지도·점검 강화

□ 제도 정착을 위한 이력제 의무대상 영업장 교육·홍보 강화

- 수입쇠고기·돼지고기 취급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(3~11월, 20회)

- 수입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추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·홍보

* 영업자규정안내서·거래내역서식집 및 축산물이력제 안내문 제작·발송

□ 이력관리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맞춤형 홍보 추진

- 소비자단체 이력제 설명회(4회, 3~11월), 대중매체 활용 홍보 등

- 우수급식대전,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이력관리제 교육홍보관 운영(2회)

1-1-4	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
④	수산물 이력제 확대
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안치국 서기관 T.044-200-5449

1. 과제내용

- ☐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산물 정보기록·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시 원인 규명 및 신속한 회수 등 공중보건 확보 필요
 -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방사능 등에 대한 과도한 소비자 반응 완화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산물이력제 추진계획수립(1월)	○ 수산물이력제 추진계획수립(1월)
○ 관련 업계와의 업무협약식 개최(7~10월)	○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식 개최(7월) - 해수부와 제주도 6개 수협간 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
○ 수산물이력제 홍보추진(3~12월)	○ 수산물이력제 홍보추진(5~12월) - KBS 생생정보통(7월), MBC오늘저녁(8월),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(9월), KBS2 살림하는 남자(10월) 등 방송홍보 및 기고(11월), 라디오 캠페인(CBS, 7~12월), SNS 이벤트(9~11월) 실시
○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(12월)	○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('17.12) - 수산물이력제 개선방안 논의 등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이력제 여론조사 실시(10~12월)	○ 이력제 여론조사 실시(10~12월) - 소비자인지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1%p 상승한 39.2% 달성
○ 지원사업 중간(7월) 및 최종보고회 개최(12월)	○ 지원사업 중간(8월) 및 최종보고회 개최(12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실적(%)	14.1	16.2

3. 성과 및 한계

☐ 수산물이력제 인지도 제고

- 수산물이력제 인지도 조사 결과 '14년 27.3%에서 '17년 39.2%로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는 추세임

☐ 수산물이력제 지원사업 협력체계 강화

- 컨설팅, 물품지원, 홍보, 전산시스템 관리 등 이력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·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수산물이력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

- 수산물이력제 지원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·단체와 업무협의를체를 구성·운영('18)

1-1-4	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
⑤	국산 천일염 이력관리 강화
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안치국 서기관 T.044-200-5449

1. 과제내용

- ☐ 천일염 생산, 가공,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천일염이력제 확충
-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값싼 수입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을 막아 천일염 생산자 보호
 - 국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선택권 보장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천일염이력제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(1월)	○ 천일염이력제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(1월) - 라벨관리 및 활성화, 이력제 대국민 홍보, 이력제시스템 개선 등 3개 분야 계획수립
○ 천일염이력제 사업자 선정(2월)	○ 천일염이력제 사업자 선정 * 총괄·홍보('17.4), 시스템(5월)
○ 천일염이력제 사업자 세부실천 계획 수립 및 운영(3월)	○ 천일염이력제 사업자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운영(5월)
○ 천일염 이력관리제 협의체 운영 (3월~)	○ 이력 총괄집행기관 및 생산자 단체 간 업무 협약 체결(5월)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(2회)
○ 이력제 실적 중간점검 및 분기별 회의 개최(매 분기말)	○ 이력제 중간보고회 개최(8월) - 천일염 소분업체(CJ, 대상) 참여 추진(8~12월) - 천일염 생산자 이력등록 추진(5~12월, 1000여명) - 천일염이력제 현장홍보(8~11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천일염이력제사업 최종보고회 개최('17.12)	-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(2회), 소금박람회(8월), 광전새우젓·김축제(10월), 해양수산양식박람회(11월) - 천일염이력제 대국민 홍보 * (온라인)온라인 매체(블로그, 페이스북) 운영, 파워블로거 운영, 키워드·브랜드 검색 광고 등 * (오프라인) 케이블 TV, 전광판, 마트 DID 광고, 방송프로그램 협찬, 언론기사 등 - 천일염이력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('17.5월~12월) ○ 천일염이력제 홍보, 시스템 최종보고회 개최(12월) * 총괄: '18.3.월 중 최종보고회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	목표	실적
○ 천일염이력제 구축율(%)	59.5	75.7

3. 성과 및 한계

☐ 천일염 이력제 사업자 및 소금품질검사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구축율이 당초 목표 59.5%보다 16.2p 초과 달성

☐ 천일염 이력제 활성화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단순가공(소분) 단계로 이력제 확대 추진 필요

* 소비자 대상 이력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27%만 이력제 인지(574명 대상)

** 대용량 위주의 천일염 이력제를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소용량 제품으로 확대 적용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단순가공(소분)업체 이력제 참여를 위한 간담회 추진('18. 5~)

1-1-5	주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
①	주류 안전기준·법규 재정비 및 건강한 소비·섭취 홍보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정책과 김승환 연구관 T.043-719-6053

1. 과제내용

- ☐ 주류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재정비를 위한 조사 추진
 - 주류 제조업체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준·규격 등 조사
 - 주종별 제조·생산·유통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 확인
- ☐ 안전하고 건강한 주류 소비·섭취를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
 - 안전한 주류 제조 및 건강한 주류 소비를 위한 홍보콘텐츠 개발
 - 주류 소비·섭취 실태조사 실시로 새로운 주류환경에 신속 대응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주류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재정비를 위한 조사 - 주류 생산공정 중 발생 가능 유해 물질 조사 등 기준·규격 근거 마련 - 국내 유통 주종별 원료, 제조공정 모니터링 조사 등 ○ 건강한 주류 소비·섭취를 위한 주류안전관리 강화 - 주류 소비·섭취 실태조사 실시 및 대응책 마련(9~12월)	○ 주류 주종별 기준·규격 개선 조사·연구 수행(1~11월) -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종별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 관리 대상 우선 순위 도출 - 주류 중 이산화황 등 시험법 마련 및 주종별 모니터링 수행(400건) ○ 주류안전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주류 소비문화 확산 - 주종별 음주량, 고위험 음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류 소비경향 보도자료 배포(11~12월) * 연합뉴스 등 46개 언론 매체보도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새로운 주류 소비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주류 안전 정보 제공 및 홍보 확산 - 안전하고 건강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이벤트 실시	- 혼술 건강하게 즐기는 법, 올바른 담금주 선택요령, 안전한 홈브루잉 방법 등 정보제공 및 홍보 (5~11월) - 주류의 안전한 생산·소비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* 및 홍보물품 제작·배포로 국민 참여 유도(10~11월) * 다음스토리펀딩,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 등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유해물질 선행조사 및 시험법 마련 등 과학적 주류안전관리 기반 마련
- ☐ 생활밀착형 주류 안전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주류 소비·섭취 문화 확산 및 국민 안심 확보
 -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온라인 홍보에 집중되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홍보 미흡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주류안전 홍보 방안 다각화를 통한 홍보 효과 제고
 - 타 부처의 전광판, 지자체 반상회보 활용 등 부처협업을 통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온·오프라인으로 홍보 확산

1-1-5	주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
②	주류 제조업체 기술지원 및 제조·유통 안전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정책과 김성근 사무관 T.043-719-6052

1. 과제내용

- ☐ 주류 제조업체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
 - 거점형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영세업체 지원 확대
 - 주류 제조업체 이물 저감화 유도 및 HACCP 적용 확대 등 집중 지원
- ☐ 주류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조·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
 - 전 주류제조업체의 위생관리수준 재평가 실시
 - 맥주 자율 이취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주류 생산
 - 안전한 주류 유통을 위한 주류의 사각지대 집중 점검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맞춤형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을 통한 주류제조업체 종합적 지원 -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(4개소) 지정·운영을 통한 현장 맞춤형 지원 실시(5~11월) - 업체별 컨설팅, 유해물질 분석 지원 제공(5~11월) - 위생등급 하위 그룹과 소규모 주류제조업체 등 중점관리(연중)	○ 소규모 주류제조업체 대상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시 -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(4개소)에서 영세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·교육 실시(5~11월, 142개소) - 위생·안전관리 정보 제공, 관련 법령 교육 및 분석 실습 등 지원(5~11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주류제조업체 이물 저감화 유도 및 HACCP 적용 확대 - 이물 저감화 우수사례 공유 및 교육 등 주류 이물관리 강화(연중) - HACCP 기술지원 및 견학, 위해 예방관리계획 보급 및 활성화 추진(연중) ○ 주류 각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-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을 위한 주류제조업체 정기평가 실시(연중) - 맥주 자율 이취관리 가이드라인 개발(6월) 및 맥주 제조업체 자율이취 관리제 실시(6~12월) - 주류업체의 안전관리 등을 수행할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제 운영(12월) ○ 안전한 주류 유통을 위한 주류의 사각지대 집중 점검 - 위해우려제품(연중) 및 여름철 대비 생맥주(6월) 등 수거·검사 - 주류의 보관 및 취급기준에 대한 자율점검제 지속 운영(연중) - 연중 소비량이 많은 주류 제조업체 등 특별점검 실시(10월)	○ 주류제조업체 안전관리 지원 확대 - 이물 저감화 간담회 및 교육(4, 11월), 이물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(9월) - HACCP 견학프로그램 운영(5회, 5~11월), 위해예방관리계획 보급(684개소) ○ 주류 제조·유통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- 전체 주류제조업체(1,117개소) 대상 위생·안전관리 수준 평가(2~12월) - 맥주 이취 자율관리매뉴얼 마련(5월) 및 자율 이취관리제 운영(6~12월) - 소주, 맥주, 탁주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 인력 양성(4회, 120개소 143명) ○ 주류의 사각지대 집중점검으로 주류안전사고 사전예방 - 소주, 맥주, 전통주 등 국민 다소비 주류 1,364건 수거·검사 실시(연중) - 편의점, 마트 등 주류 판매업체 자율점검제 운영(929개소 참여) - 계절별 다소비 주류와 주류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365개소 기획점검(연중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중점관리업체 위생관리 준수율(%)	90	90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위생수준이 미흡한 업체는 교육 및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향상 등 안전하고 고품질의 주류 제조기반 마련
 - 영세주류업체 영업자 의식낙후 및 시설관리 미흡 등 개선 노력 필요
- ☐ 주류안전관리인 도입, 맥주 이취관리 등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주류제조업체 위생관리등급제 지속적인 운영 및 소규모 업체 안전관리 지원
 - 지하수 사용 주류업체 관리 및 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 기술지원 강화

1-1-6	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
①	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성준현 연구관 T.043-719-2055

1. 과제내용

- ☐ 소비자 구매시점에서 위해식품의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‘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’ 설치 확대(계속)

* 현재 7만개소 적용 중, 매년 1만개소씩 설치 확대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대형 식품 유통·판매업소 대상 시스템 자발적 설치·확대(연중) - 집단급식소·프랜차이즈 식자재 공급업체까지 시스템 확대 적용 ○ 중·소규모 식품판매점 대상 무상 설치 지원(연중) - 무상설치 위탁사업 추진	○ 대형 식품 유통·판매업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스템 설치 완료 (8,021개소) -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간담회 실시(2월) - 아워홈, 동원홈푸드 대형 식자재 공급업체 등 자율설치 * 설치업소(누계): ('16) 78,151 → ('17) 88,722 ○ 무상설치 지원을 통한 중·소식품 판매점 2,550개소 추가 설치 완료 - 중·소매장 무상설치 위탁사업(예산 425백만원) 수행(5~11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매장 수(누계)	80,000	88,722

3. 성과 및 한계

□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로 소비자에게 안심쇼핑 환경 확산

- 시스템 설치 매장에 대하여 위해정보의 정상 수신 여부 등 확인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

* 시스템 설치 업소수(누계): ('16) 78,151개 → ('17) 88,722개
('17년 누적 8만개소 설치 목표 대비 111% 초과 달성)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위해식품판매차단 종합관제시스템 구축

- 위해식품 정보가 정상 수신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후 관리 할 수 있는 종합관제시스템 구축

1-2	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1-2-1	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출국 위생평가
①	수입 전(前) 해외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와 오은숙 사무관 T.043-719-6221

1. 과제내용

- ☐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체 관리 기반 마련
 - 등록된 해외제조업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복업체 정비, 위생수준별 구분 및 현지실사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수입식품 도모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해외제조업소 평가 및 현지실사 관리 기반 마련 - 해외제조업소 등록대장 기능 보강 및 자동평가기능 마련 ○ 현지실사 관리시스템 구축 ○ 해외제조업체 등록 정비 및 정보 활용	○ 해외제조업소 평가 및 현지실사 관리 기반 마련 - 영업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증빙 서류 첨부 기능 마련 -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에 현지실사 결과 반영 및 현지실사 관리대장 전산화 모델 완료 * 고시 개정에 따른 평가표 현행화 ○ 현지실사 관리시스템 구축(12월) * 「현지실사 등록평가 등 통합수입 검사시스템 개선사업」('17.10~'18.3월) 중 '현지실사 등록시스템' 구축 완료('17.12월) ○ 해외제조업체 등록 정비 및 정보 활용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해외제조업소 중복 제거 등 코드 단일화 추진 - 각 국 주소체계 조사	- 해외제조업소 중복 코드 정비완료 * 11,372건 정비('16~17등록업체) - 각 국 주소체계 조사 * 주요 39개국에 대한 주소체계 조사완료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해외제조업체 등록	등록	13,496개소

3. 성과 및 한계

□ 해외제조업소 등록 중복 정비

- 총 11,372개소 중복업소 정비로 수입신고 시 동일한 제조업체가 난립하는 인한 혼란을 예방
- 해외 무자격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제조업체가 불분명한 식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신고 전 관리
- 세계 각국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수출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정확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도모

-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공장 등록증 등 관련서류 첨부 도모

□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추진

- '16년 등록된 제조업소의 유효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갱신등록 추진
 - 기간 내 갱신등록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등록업체에 문자 발송

1-2-1	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출국 위생평가
②	축산물 수출신청국에 대한 위생평가 절차 및 기준 마련

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와 최충렬 사무관 T.043-719-6202

수입식품정책과 기용기 사무관 T.043-719-2162

1. 과제내용

□ 수출국가 위생관리체계 평가를 통한 사전안전관리 강화

- 신규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 국가의 유형별로 위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취약요소를 사전 관리함으로서 위해발생요인 최소화

2. 추진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농식품부 질병평가 및 식약처 위생평가 간 평가절차 개선(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) * (현행) 농식품부 수입허용 결정 후 위생평가 개시 → (개정) 농식품부와 동시에 위생평가 개시 ○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하여 수입 위생평가 절차의 객관성 확보	○ 농식품부와 협의, 위생평가절차를 동시 시행하고 근거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 추진(7월 입법예고, 국회 심사 중) ○ 수입위생평가 절차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용역 실시 - '수입위생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' 용역 실시(8~12월) * 선진국 제도 비교 조사, 설문서 및 위생평가 대상 개선방향 마련 - 신규 축산물 수입허용 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(3회) * 덴마크, 네덜란드, 아일랜드 쇠고기 수입 위생평가 보고서(안) 외부자문실시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입위생평가 관련 규정 개선·보완 -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	○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 위생요건 고시 개정(12월) - 국내 규정 제·개정 사항 및 신규 허용 국가/품목 등 반영 * 축산물·식품 기준·규격 통폐합에 따라 변경된 품목 유형 반영 등

☐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☐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단계별 차질 없는 진행

- 철저한 수입위생평가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성 제고 및 통상 분쟁 사전 방지(연중)

* (설문서 송부) 27개국 44품목, (답변서 검토) 19개국 24품목, (수입허용여부 결정) 4개국 4품목, 평가절차 완료(2개국 2품목) 등

☐ 축산물 수입허용절차 지연에 따른 통상문제 발생 우려

- 수입식품법에 따라 축산물위생에 대한 수입허가절차가 신설되고 평가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입요청 증가

* '17년에 21개국 32건이 신규로 수입요청 되었고, 현재 총 48개국 95건에 대해 수입위생평가 진행

** (설문서 송부) 27개국 44품목, (답변서 검토) 19개국 24품목, (수입허용여부 결정) 4개국 4품목, 평가절차 완료(2개국 2품목) 등

- 수입허용 요청이 증가에 비하여 평가인력 및 표준 매뉴얼 등 기반 환경 부족으로 평가절차 지연 우려

* ('13.3~'16.2) 연 약 7건(19개국 21건) → ('16.2~'17.12) 연 약 23건(29개국 47건)

4. 향후 추진계획

-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 개선을 위한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개정 지속

*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개정 완료('18.12.) 및 시행('19)

- 업무 효율성을 위한 평가대상 개선 및 표준 평가 기준 마련

- 축산물의 유사유형의 그룹별 평가 및 단계적으로 주요 품목별 국가 동등성 등 위생평가 메뉴얼 마련

* ('18) 식육(소, 돼지, 닭) → ('19) 유가공품 → ('20) 알가공품, 식육가공품

1-2-2	수입식품 현지실사 및 위생협력 강화
①	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및 우수 수입업소 등록 확대

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정영애 사무관 T.043-719-6210

1. 과제내용

- 수입 전 단계 현지실사 강화를 통한 위해 수입식품 사전 차단
 - 수출국 제조시설과 제품의 관리현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입하는 '우수수입업소 등'의 관리
 - 부적합·수입건수 상위 제조업체 및 해외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지 위생관리 강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해외제조업소 100개소 현지실사 및 위탁(3월~) ○ 사전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홍보 - OEM제조업체 「위생점검 검사기관」 대상 교육 실시(2월) - 주한외국대사관 및 관련자 대상 설명회 개최(5월)	○ '17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현지실사 실시(자체 102개소, 위탁 132개소) ○ 위해발생 제조업소 제품 수입 중단 등 조치 * 234개소 점검결과 15개소 부적합 27개소 시정요청 ○ 사전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홍보 - OEM제조업체 「위생점검 검사기관」 대상 의견수렴(이해관계자 등 15명) - 주한외국대사관 및 관련자 대상 설명회 개최(6월, 39개국 재외공관 45명)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하위규정 관리 및 개선(6월~) - 우수수입업소 확대를 위해 수입 식품 수입·판매업자(업체) 대상 설명회 개최(3월, 9월) -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를 위한 실사 점검관 양성(4월, 10월)	-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관련 하위규정 관리 및 개선 * 「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 실사 방법 및 기준」 고시 제정(10월) * 「우수수입업소·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」 고시 개정(11월) * 「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」 고시 제정(6월) - 우수수입영업자 확대 위한 설명회 개최(4·10월, 154명) * OEM제품 등의 수입·판매업자 대상 - 현지실사 점검관 실무과정 교육 실시(4·10월, 52명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(%)	2.72	2.84

3. 성과 및 한계

☐ 위해발생 제조업소 제품의 국내 유입 사전 차단

○ 현지실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수입중단 등 조치

- * ('16) 199개소 점검결과 부적합 0개소, 시정요청 7개소 → ('17) 234개소 중 부적합 15개소, 시정요청 27개소

☐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된 제품 수입률 제고

○ 우수수입업소·해외우수제조업소 우대혜택 확대(우수영업자 수입제품 구분표시 등) 등을 통한 우수영업자 제품 수입률 증가

- *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 : ('16) 2.30 → ('17) 2.84

□ 제도개선을 통한 현지실사 실효성 제고

- 고위해도 평가항목 1개 이상 위반 시 수입중단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마련 및 식품과 축산물 점검기준 등 통합으로 효율성 제고
 - * 「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」 고시 제정('17.10월)
- 영업자 책임 하에 제품을 관리하는 우수수입영업자 확대를 위한 우대혜택(제품 포장지 도안 표시 등) 추가 및 사후관리 강화
 - * 「우수수입업소·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」 고시 개정('17.11.15)
- 위생평가의 전문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생평가기관 업무 규정의 세부사항 지정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
 - * 「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」 고시 제정(6월)

□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

-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대비 현지실사 수준은 매우 저조
 - * 등록업소수 47,469개소('17.12월 기준) 중 234개소인 0.5% 현지실사 실시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위해도 분석을 통한 과학적이고 선택·집중된 현지실사 수행

- 부적합 및 위해정보 이력 등 위해도 분석을 통해 중점 관리할 국가의 품목을 선정하여 현지실사 계획 수립(1월)
- 국내외 위해정보 및 수입단계별(수입 前, 통관, 유통) 정보*를 취합·분석한 현지실사 대상업소 선별 체계 구축(안) 마련(~12월)
 - * 위해정보, 통관·유통단계 부적합제품 정보(제품유형, 부적합사유, 업체명), 수입량 등

□ 전문적인 현지실사를 위한 제반 환경 구축

- 현지실사 점검관의 점검능력 표준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점검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(3회, 2·3분기)
- 점검관간 표준화된 점검을 위한 업소별(제조업소, 도축장, 선박 등) 현지실사 매뉴얼 제작(12월)

1-2-2	수입식품 현지실사 및 위생협력 강화
②	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및 현지실사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정영애·최충렬·오은숙 사무관 T.043-719-6210·6202·6208

1. 과제내용

- ☐ 위생관리가 우수한 해외작업장만 등록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수입기반을 마련
 -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사전 확인 후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
- ☐ 수출국 현지실사를 통한 수입축산물 사전 안전관리로 위해 우려 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
 - 위생 취약 작업장에 대하여 시정,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통해 수입 축산물의 위생·안전성 확보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해외작업장 등록(연중)	○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위생관리가 우수한 해외작업장 등록(511개소)
○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개선 방안 마련(2, 10월)	○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개선방안 마련 -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합동점검 등 협업 개선방안 마련(2월) -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고시 제정(10월) * 현지실사방법 구체화 및 평가항목 세분화
○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실시(연중)	○ 해외작업장 신규등록 및 사후관리 현지실사 실시(연중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해외작업장 현지실사(개소)	85	87

3. 성과 및 한계

□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개선방안 마련 및 현지실사 실시

- 식품과 축산물을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하는 현지실사 기준 및 방법을 통합하여 고시 제정(10월)
- 실사결과 부적합 작업장에 대하여 수입중단 등 조치로 위해우려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
 - * 12개국 87개소(수입중단1, 미등록1, 개선필요 10)
- 내실있는 현지실사를 위해 위해도* 분석을 통한 현지실사 필요
 - * 최근 부적합이력, 위해가능성, 수입빈도·양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 결정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위해도 분석을 통한 과학적이고 선택·집중된 현지실사 수행

- 부적합 및 위해정보 이력 등 위해도 분석을 통해 중점 관리할 국가의 품목을 선정하여 현지실사 계획 수립(1월)

□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

- 유관기관 합동 실사 등 부처 협업을 위한 협의회 개최(1월)
- 신규 축산물 작업장 합동 현지실사 실시(상시)
 - * (축산물) 합동점검 9개국 72개소, 개별 점검 2개국 14개소

1-2-2	수입식품 현지실사 및 위생협력 강화
③	수입 수산물 해외수출국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점검

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정영애 사무관 T.043-719-6214
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정윤석 주무관 T.044-200-2619

1. 과제내용

- ☐ 수출국 현지실사를 통한 사전 안전관리로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
 - 사전에 안전관리 수준이 확인·등록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 유도로 안전성 제고
 - 주요 교역국과 수산물 위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입수산물 안전관리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*의 가공 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수입 수산물 사전 안전관리(식약처·해수부, 연중) * 6개국 : 중국, 러시아, 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, 에콰도르 ○ 비약정국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(연중) * 수입량이 많은 국가나 부적합 이력 있는 국가 가공시설 현지점검 ○ 수산부산물 수출국 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(식약처, 연중) * 수입실적이 많거나 신규등록 생산 시설	○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의 가공 시설 현지점검 실시(6개국 72개소) - 위생약정 운영 및 현안사항에 대한 위생약정국 실무회의 및 현지실사 대비 해수부와 협의회 등 개최(7회) ○ 비약정국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 * 2개국(스페인, 아르헨티나) 5개소 ○ 수산부산물 수출국 생산시설 현지점검 실시 * 1개국(미국) 8개소

3. 성과 및 한계

□ 수산물 및 수산부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확대로 수출국
가공시설 위생관리 강화 및 수입수산물 사전 안전성 확보

○ 위해 우려 수산물 및 수산부산물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로 통관
단계 부적합률이 점차적으로 감소됨

* 수입수산물 부적합 현황 : ('14) 0.16% → ('15) 0.11% → ('16) 0.07% →
('17) 0.07%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해외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 위생관리 점검 지속 추진(연중)

□ 수산물 위생약정 식약처-해수부간 유기적인 협업 운영(연중)

1-2-3	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자 책임 강화
①	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입식품 수입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기용기 사무관 T.043-719-2162
수입검사관리과 장화중 사무관 T.043-719-2210

1. 과제내용

- ☐ 위해우려 식품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확대 실시
 - 현재 운영 중인 검사명령제 이외,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한 수입단계 검사명령제 적용으로 영업자 책임의식 고취
- ☐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제 확대 시행
 -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피교육자 범위를 확대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온라인 교육 과정 신설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신규 검사명령제 대상 선정(6월) - 위해우려식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검사명령제 운영(연중) ○ 검사명령제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(7월) ○ 영업자뿐 만 아니라 수입식품 위생 책임자 지정 교육 확대 ○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 수입자 중 부적합 식품 수입 영업자도 교육 명령 ○ 영업자 교육방법 개선 접근성 향상 온라인 교육과정 신설 추진	○ 유해물질 함유 식품 등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 검사명령 확대(8월) * (기존) 일본산 훈제건조어육 등 4품목 → (확대) 복어 등 4품목 추가 ○ 검사명령제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 (10회, 566명) ○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 ○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 수입자 포함 교육명령 확대 ○ 온라인 교육과정 플랫폼 구축 착수(9월) 및 교육과정 제공('18 상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교육명령 이수율(%)	78.2	80.6

* 교육명령 대상 1,284명 중 1,035명 교육 이수

3. 성과 및 한계

□ 신규 검사명령제 대상 확대 지정·운영

- 유해물질 함유 식품 등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 검사명령 확대

* ('17) 검사명령 대상 963건 수입신고 수리

□ 부적합 원인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교육명령 대상 확대 시행

- 수입식품 위생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 수입자를 포함시켜 교육명령 확대

* '17년도 교육명령 대상 1,284명 중 교육이수자 1,035명(80.6%)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수입식품 「검사명령제」 확대 시행

- 그간 국가가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'지시검사'를 영업자가 부담하는 '검사명령'으로 확대 추진

□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명령제 시행

-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입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부적합 유형을 분석, 피교육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지속 개선 보급
- 피교육자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교육기관과 지정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대면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 시행

1-3 | 위해정보 수집·분석 및 조치 강화

1-3-1 |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화

① |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활성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황인영 연구관 T.043-719-4052

1. 과제내용

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보 신뢰성 및 만족도 제고

- 관련 부처·지자체간 정보연계 및 통합DB 품질관리 강화
- 대국민(영업자)과 수요자 맞춤형 신규 정보 발굴 및 서비스 개발

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

- 온·오프라인 홍보 수행으로 대국민 인지도 및 활용도 강화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통합망 3단계 고도화사업 추진 - (국민) 전자민원(3종) 등 개발 - (산업체) 우리회사 자율점검 서비스 등 - (공무원) 정보품질관리시스템 등 ○ 범부처 협업체계 및 정보연계 강화 - 통합망 협의회 개최, 사용자교육 및 만족도조사 실시	○ 통합망 3단계 고도화사업 완료(12월) - (국민) 음식점등급제, 모바일, 지도 기반 우리동네 서비스 등 6개 과제 - (산업체) 우리회사 자율점검서비스, 영업자 준수사항 알림 등 3개 과제 - (공무원) 정보품질관리시스템, 추가 정보 연계기능 개발 등 2개 과제 ○ 범부처 협업체계 운영 활성화 - 통합망운영협의회(2회), 실무협의회(2회), 정보품질협의회(2회) 개최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배달업체 등 민간업체와 정보 연계 강화 ○ 통합망 맞춤형 홍보 추진	- 통합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정(12월) * 12개 부처(과장급 40명 이내 위원) 참여 ○ 통합망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(2회) * 공무원(358명, 5월), 식품영업자(1,492명, 9월) ○ 사용자 만족도 조사(11월, 1,250명 대상) * 편의성·신뢰성 등 조사 결과 만족도 75.2점 ○ 정보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 확대 - 축산업 인허가 등 정보 연계 확대(17종, 12월) 및 배달앱 연계 행정처분 정보 등 안전정보 제공(9월) * 배달의 민족, 요기요, 배달통 3개 배달앱 ○ 통합망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·오프라인 홍보 강화 - 통합망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송출 * 네이버 등 민간포털 검색광고(511만회 노출), 옥외전광판(2~8월), 유튜브 등 SNS 송출 - 식품안전의날 등 홍보부스 운영(5회) - 앱 다운받기 등 참여 이벤트(3회) ○ 맞춤형 홍보를 위한 정보 수요조사(2회) - (소비자) 식품 알리지정보 등 66건 발굴 - (산업체) 할랄식품정보 등 14건 발굴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 만족도(%)	75	75.2

3. 성과 및 한계

☐ (주요성과)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활용도 및 만족도 향상

- 통합망 월평균 방문자수 대폭 증가 : ('16) 53만명 → ('17) 97만명

- 통합망 연계 정보 종수 대폭 증가 : ('16) 167종 → ('17) 184종
- 통합망 사용자 만족도 지속 증가 : ('16) 72.6점 → ('17) 75.2점
- 통합망 협업체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* 통합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정('17.12, 식약처 훈령)

- ☐ (한계점)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생산단계 정보연계 및 관계 행정기관 부적합정보 활용체계 미흡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식품안전정보 컨트롤 타워로써 연계·총괄 조정 기능 강화
- ☐ 생산단계 식품안전정보 연계 확대 및 부적합 정보 활용체계 마련
- ☐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·토양 등 타 분야 정보 연계 활용 체계 마련

1-3-2	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
①	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·분석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김기석 사무관 T.043-719-1760

1. 과제내용

- ☐ 국내외 식의약 위해정보 분석관리 역량 강화
 - 식의약 잠재이슈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정보 수집·분석 관리 효율성 제고
- ☐ 식품 위해정보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
 - 식의약 위해정보 조치결과 등 기록관리가 미흡하여 위해정보 제공 이후 해당정보의 조치사항을 시스템적으로 관리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잠재이슈 분석 역량 제고 - 식품 위해정보 분석 전문가 풀(Pool) 확대(2월) - 식품 위해정보 분석 전문과정 개설 운영(9월) - 수집정보의 중요도, 시급성 등을 고려한 정보등급 세분화 ○ 식의약 위해정보 사후관리체계 구축	○ 식품 위해정보 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강화 - 산업체, 학계 등 정보분석 전문가(30명)를 구성, 교육훈련 참여 및 교재개발(1월) - 잠재이슈 분석 역량제고를 위한 중급심화교육과정 운영(9월) - (중전) 긴급, 관심, 참고 등 3등급 분류 → (개선) 관심(즉시조치, 조치), 참고(조치(검토), 일반참고)등으로 등급 세분화 ○ 식의약 사후관리체계 구축·운영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초동조치, 진행사항, 결과확인 등 정보 이력관리 강화('17.)	- 해외 식의약 위해정보 사후관리 (WMQ) 보고제 시행(3월) * 매주(Weekly), 매월(Monthly), 분기별 (Quarterly)로 현안 및 홍보점검회의를 통해 보고 ** 벨기에, '달걀 및 닭고기' 중 피프로닐 함량 등 검사 실시 등 342건 조치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식품 위해정보 조치율(%)	60	82.4

3. 성과 및 한계

☐ 성과

- 식의약 위해정보 관리체계 강화 등으로 위해정보 조치율 제고
 - 수집·분석정보에 따라 해당제품 수입금지 등 342건 조치
 - * 조치건수 : ('16) 293 → ('17) 342(116.7% 증가)
 - ** 위해 식의약품 수입금지(차단) 22, 위해 식의약품 회수조치 124, 허가사항, 기준규격 등 제도개선 27, 검사관리 강화 조치 등 169건
-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 구축·운영 등을 통한 정보 활용성 제고
 - *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(다모아) 1,458건, 관계부처(11개) 및 지자체 34,490건, 산업체(1,740개사) 1,006건, 식약처 홈페이지 3,908건 등 정보공유

☐ 한계

- 국내 식품 위해정보의 경우 개별 관리부서에서 위해정보 수집 조치 등 분산 수행으로 관리 효율성 미흡

4. 향후 추진계획

- 국내외 식품위해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검토 추진

1-3-3	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
①	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

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장옥진 사무관 T.051-400-5620

1. 과제내용

- ☐ 정부3.0 가치실현을 위한 신규 서비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
 - 수산식품 관련 콘텐츠 발굴, 이용 불편사항 및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하여 신속·정확한 수산식품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
- ☐ 수산물 검역정보 및 안전정보의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
 -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등 타 부처(기관)과 연계되어 있는 정보의 안정적 운영·관리를 통한 수산물검역업무 효율성 제고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추진계획 수립 - 위탁사업 추진계획 수립(1월) - 안전정보시스템 위탁사업 계약(3월) - 웹서비스(FSIS) 위탁사업계약(2월 중) ○ 위탁운영·관리 - 유익한 수산정보 앱 콘텐츠 추가 제작 및 업데이트('17.3~12) - 웹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이벤트(상식퀴즈, 설문조사 등) 추진('17.4~12)	○ 추진계획 수립 - 위탁사업 추진계획 수립(2월) - 안전정보시스템 위탁사업 계약(4월) - 웹서비스(FSIS) 위탁사업 계약(2월) ○ 위탁운영·관리 - 핫이슈, 정책정보, 제철수산물 등 특집기사 제작(매월4건) - 퀴즈이벤트(연3회) 및 고객 만족도 조사(연1회) 실시 - 웹취약점(6월) 및 웹접근성(8월) 점검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오픈API 개발 - 원산지 표시단속 및 검역 시행장 정보를 오픈 API로 개발('17.6~12)	○ 오픈API 개발 - 검역 시행장 정보 및 방사능안전성 조사 오픈 API 개발(10월 완료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안전정보망 기능 개선율(%)	74	75

3. 성과 및 한계

☐ 성과

- 대국민 이벤트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수산물안전정보 홍보 효과 강화
- 정보시스템 개선 의견수렴 및 기능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
- 웹 취약점 점검 및 시스템 취약점 진단을 통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

☐ 문제점

-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정보시스템을 2006년 구축한 이후 12년간 일부 기능(시스템) 추가 외에 재구축 추진 이력 없음
 - * 1차 구축(2006.7) : 수산물안전성조사시스템, 수산물표시단속시스템 등
 - * 2차 구축(2007.6) : 수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
 - * 3차 구축(2008.2) : 검역관리시스템 및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(LIMS)
- 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사용자 OS 및 브라우저 지원이 어렵고, 기존 시스템에 액티브엑스(ActiveX) 제거 및 대체 기술 적용 불가
- 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정보 생산의 한계가 있어 웹서비스(FSIS)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고 사용이 불편함

-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서버 이중화와 정보보안 사고·침해 예방을 위한 물리적 대책 마련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(FSIS) 활성화

-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이벤트(상식퀴즈, 설문조사, 만족도 조사 등)을 지속 추진·확대(연중)
- 방문자 분석을 통해 향후 기능개선·운영대책 등에 반영

☐ 정보시스템·웹서비스·모바일앱 취약점 점검 및 개선

-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·분석 및 개선 방안 지속 수행
-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등을 위한 의견 수렴('18.12)

1-4 농·축·수산물 안전성 강화

1-4-1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

① 분석인력의 교육·훈련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김재곤 사무관 T.054-429-4138

1. 과제내용

- ☐ 분석 인력의 교육·훈련을 강화하여 시험·연구 능력 향상
 - 선진국의 분석기술 조사 및 도입을 위한 해외 분석법 연수 등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안전성 분석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(1월) - 유기분석반 등 18개 과정 236명 ○ 국외 선진 분석기관 등 연수계획 수립(1월) - 분석법 연수 등 19회 45명 ○ 분석숙련도 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계획 수립(1월) - 안전성 검사기관 및 검정기관 대상 정도관리 1회 실시 * 안전성검사기관 43개소, 검정기관 3	○ 안전성 분석 인력 교육실시(연중) - 분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* 유기분석 등 17개 과정 237명 ○ 선진 분석기술 및 제도조사를 위한 국외 연수 실시(연중) - 분석법 연수, 국제학회, CODEX 회의 및 선진국 제도 조사 등 * 분석법 연수 등 19회 45명 ○ 안전성검사 및 검정기관 대상 정도관리 실시(1회) -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, 토양 중금속 정도관리 실시 * 잔류농약 분야 41개 기관, 중금속 분야 28개 기관 참여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국외연수 이수 인원(명)	19	20

3. 성과 및 한계

□ 성과

- 선진 분석법 연수, CODEX 회의 및 국제학회 참석 등 국외출장을 통해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인적교류 및 국제적 안목 배양
 - * 안전성 업무 역량제고, 국제수준의 안전관리기술 습득 등 다양한 정보 수집
- 분석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 기간 및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
- 정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위탁을 통해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
 - 농약 분야 41개 기관 및 중금속 분야 28개 기관 중 잔류농약 분야에서 1개 기관이 미흡으로 판정되고, 모두 양호로 판정

□ 한계

- 안전관리에 대한 선진 분석법 연수 등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'14년부터 국외여비가 감액되고 있어 대외적으로 인지도 있는 전문가 육성에 한계
 - * 국외여비 현황: ('15) 126백만원 → ('16) 123 → ('17) 123 → ('18) 120

4. 향후 추진계획

- 안전성 관련 분야별 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체계적인 국외출장 추진 및 사전 준비를 통한 내실화 도모
- 안전성 분야에 대한 국제적 안목을 갖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외여비 증액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

1-4-1	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
②	농산물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

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박병준 연구관 T. 063-238-3238

1. 과제내용

- ☐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 설정 확대
 - 주요 수출 농약품목 추가·변경·삭제 등 보완: 2국가 26작물
 - 신규 아시아 시장 진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
- ☐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작업자 보호를 위한 농약관리기술 개발
 - 부적합 농산물 원인규명 및 환경 중 농약 관리 기준 설정 연구
 - 농업인 농약 노출량 산정모델 및 저감기술 개발
- ☐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 및 관리기술 개발
 - 지표성분 및 분석법 개발 : 백두옹, 차나무, 제충국 등 3종
 - 다사용 식물추출물 유효성분 안정성 검증 : 정향 등 3종
- ☐ 재배환경 및 농산물 중 중금속 안전관리 기술개발
 - 비소 흡수특성 규명 및 저감화 기술개발
 - 비소 우려 농경지 및 쌀 중 중금속 모니터링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 설정 확대	○ 수출대상국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 안전 사용지침 설정 보급 - 일본, 대만 등 11국가 30작물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국내 등록농약의 해외 잔류기준 (Import Tolerance) 설정 ○ 안전 농약관리기술 개발 - 부적합농산물 원인 구명 - 농업인 농약 노출량 산정모델 및 저감기술 개발 ○ 유기농업자재 관리기술개발 - 지표성분 및 분석법 개발 - 유효성분 안정성 검증 ○ 재배환경, 중금속 안전관리기술 개발 - 비소 흡수특성 규명 및 저감화 기술개발 - 비소 우려 농경지 및 쌀 중 중금속 모니터링	○ 수입국 기준 대응 국내 등록농약 해외 잔류기준(Import Tolerance) 설정 - 일본 12작물 48농약, 대만 3작물 22농약 ○ 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유해요인 관리 - 미등록 농약 살포가 주된 원인으로 우선 농약선정 - 신물질 농약 분석법 개발 및 검사기관 보급(정책제안 4건) - 농작업자 농약노출량 산정모델 구축 * 한국형 KOPOEM format 확립 ○ 유기농자재 지표성분 및 분석법 개발 - 백두옹, 차나무, 제충국 ○ 유기농업자재 중 정향 추출물 유효성분의 온도 안정성 검증 - 정향, 잣나무 ○ 중금속 비소 흡수특성 규명 및 저감화 기술개발 - 비소저감 : 토양개량제 석고 3% 추천 * 제거율 : 49.7 ~ 60.1% - 비소 우려 농경지 및 쌀 중 중금속 모니터링 결과 정책건의 (식약처, 농식품부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출대상국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 지침 설정(건, 누적)	11국가 30작물	11국가 30작물
○ 농약 노출량 산정모델 개발(작물, 누적)	4	4 (사과, 포도, 벼, 배추)
○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(종, 누적)	10	11종 29성분

3. 성과 및 한계

□ 국내농산물 수출대상국 맞춤형 농약안전사용 지침 설정 보급

- 일본, 대만 등 11국가 30작물 약 2,000병해충 23,000농약품목

□ 작물에 대한 농작업자 농약노출량 측정 및 예측 모델 현장 접목 미흡

- 농약등록전 평가시 농작업자 농약노출량 산정모델 제도화 미흡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농작업자 농약노출량 측정 및 예측 모델의 보완 및 현장 조기 적용

- 농약평가관련 부서 및 회사의 의견 수렴으로 모델의 기술적인 문제 보완

- 개발된 예측모델의 농약등록전 농작업자 평가를 위한 제도개선

1-4-1	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
③	농산물 중 유해미생물 안전성 연구 강화

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류경열 연구관, T. 063-238-3391

1. 과제내용

- ☐ 유해미생물, 곰팡이독소의 오염여부 신속 진단기술 개발(1~12월)
 - 잡곡(2종)에서 곰팡이 독소(6종) 분석법 확립
- ☐ 농산물의 식중독균·독성곰팡이 오염실태 조사(1~12월)
 - 신선채소류·고추·버섯 식중독균 및 잡곡 독성곰팡이 오염 조사
- ☐ 환경친화적 식중독균 제어물질 활성제고(1~6월) 및 현장적용(1~12월)
 - 유해미생물의 친환경·안전 제어제 현장적용 : 박테리오파지 등 2종 (특허출원 1건)
- ☐ 곰팡이독소 생장저해/독소분해 우수 미생물 발굴 및 현장적용(1~12월)
 - 곡류 독성곰팡이 생장저해/독소분해 우수 미생물 발굴 및 포장실증
- ☐ 작물별 GAP 생산가이드(2~5월) 및 세부실천지침(5~11월) 개발
 - GAP 생산가이드 발간 : 5종(배, 단감, 파프리카, 참외, 인삼)
 - 작물별 GAP 세부실천지침 개발 : 31종(채소 26, 버섯 5)
 - 품목군별 영농기술서 발간·보급 : 베리류, 인과류 등 4종
- ☐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관리지침 개발(7~10월)
 - 농산물 위생관리지침 개발 : 새싹채소 1품목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유해미생물, 독소 신속진단 및 분석법 개발	○ 유해미생물, 독소 신속진단기술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유해미생물 신속진단·기술 개발 - 곰팡이독소 신속분석법 개발 ○ 농산물 식중독균 오염실태조사 - 유해미생물 오염조사 - 곰팡이독소 오염조사 ○ 식중독균 친환경적 제어물질 현장 적용 - 박테리오신 등 2종(특허출원 1건) ○ 독성곰팡이 생장저해/독소분해 미생물 발굴 - 붉은곰팡이병에 대한 생물농약 (JCK-12) 방제효과 현장실증 ○ 작물별 GAP세부실천 지침개발 - GAP생산가이드 개발보급(6월) - GAP영농기술서 개발보급(11월) - GAP 세부실천지침 개발: 31종	- 신선편이 업체류 식중독균 전처리법 개선 - 귀리의 주요 곰팡이독소 6종 분석법 확립 * 평균 회수율 73.4% - NIR 신속검출기술 이용 붉은곰팡이 오염립 판별 * 겉보리 판별 정확도: 99.9% ○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 - 미생물 : 재배환경(퇴비, 용수 등 280점), 농산물(새싹채소 등 4작물 720점) - 곰팡이독소 : 귀리 49점(오염율 0% (AFs, OTA)) ○ 식중독균(황색포도상구균) 제어 박테리오신의 혼합처리 효과 구명 - 박테리오신 생산균주 2종 특허출원 * 박테리오신 2종 혼합처리: 99%제어 ○ 붉은곰팡이병 방제용 발굴 및 생물 농약 포장 방제효과 구명 * 화학농약(디페코나졸 · 프로피코나졸유제) + 생물농약(JCK-12) 처리 : 방제 효과 30% 증대 * 특허: 출원 1, 등록 1 ○ GAP실천지침 9종 개발·보급 완료 - 생산가이드 5종(인삼, 배, 단감, 참외, 파프리카) 및 영농기술서 4종(인과류, 핵과류, 장과류, 베리류) - 세부실천지침 채소 26종, 버섯 5종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확 후 위생관리지침 개발 - 새싹채소 위생관리지침(6~12)	○ 새싹채소·버섯 위생관리지침 개발 - 위생관리기술 동영상(새싹채소) 및 식중독균 오염예방 리후렛(팽이버섯) 개발 및 보급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유해미생물 진단 및 독소 분석법 개발(건, 누적)	10	10
○ 위해성평가 기반구축 유해미생물·독소 모니터링(작물, 누적)	5	5
○ 유해미생물 제어제 개발(건, 누적)	5	6
○ GAP 현장실천 매뉴얼 개발(건, 누적)	30	40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유해미생물 오염 농산물의 사전 예방기술 현장적용 미흡
- 개발된 식중독균 및 곰팡이 독소의 친환경적 제어기술에 대한 현장 실용화가 다소 미흡
 - 현장 활용 가능한 팽이버섯 고갈 세척기술 개발 미흡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한 현장 실용화 기술 조기 개발보급
- ROS, 생물농약(JCK-12) 등 친환경적 제어기술 현장점목 및 실용화
 - 부서 협업을 통한 수출 팽이버섯 오염원인 고갈 세척기 개발보급

1-4-2	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강화
①	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강화

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이희동 연구관 T.063-238-3362

1. 과제내용

- ☐ 농약의 시험기준과 방법 및 평가체계 개선 연구
- ☐ 농약의 활성, 작물안전성 평가 및 관리기준 개선
- ☐ 등록 및 재등록 신청 농약의 안전성종합 평가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농약시험기준·평가 체계개선	○ 이화학, 잔류성 및 독성분야 농약시험기준 및 평가체계 개선 - 농약등록 시험성적서 제출항목, 면제요건 등 관련규정 14건 개선
○ 농약의 활성·안전성 평가관리기술개선	○ 농약의 약효·약해분야 평가관리기술 개선 - 소면적 작물 약효시험 그룹화 대상 추가 및 검토기준과 방법마련 등 관련규정 5건 개선
○ 등록 및 재등록 신청 농약의 안전성 종합평가	○ 등록신청 농약(재등록 농약 포함)의 안전성 종합평가 - 등록신청 농약의 이화학성, 잔류성, 독성 및 생물활성 등 안전성 종합평가 1,238건 * 재등록 농약 안전성 종합평가 : 115품목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농약 안전성 종합평가 건수(건, 누적)	2,173	2,611
○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건수(건, 누적)	893	1,369
○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건수(건, 누적)	10	10

3. 성과 및 한계

□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를 기술(계량적 수치 포함)

- 농약등록신청자료의 안정성 평가 과제로 농약안전성 종합평가 건수,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건수 및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설정건수는 민원인(농약업체)의 농약등록신청건수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, 상기의 성과지표를 정밀하게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- 상기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정도는 평균 129.7% 달성
 - 농약안전성 종합평가 건수는 120.2% 달성
 -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건수는 153.3% 달성
 -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건수는 100.0% 달성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성과 및 한계에서 제시된 한계의 보완방안을 제시

- 상기의 성과지표는 민원인(농약업체)의 농약등록신청건수에 따라 결정됨으로 최근 3년간 민원인의 농약등록신청건수,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건수 및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설정건수 등의 통계자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 추진

1-4-3	축·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
①	축수산물 안전관리 과학화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정지윤 연구관, T.043-719-4203

오염물질과 김신희 연구관, T.043-719-4253

미생물과 김미경 연구관, T.043-719-4304

첨가물포장과 이근영 연구관, T.043-719-4352

영양기능연구팀 허수정 연구관, T.043-719-4402

1. 과제내용

☐ 축수산물 안전관리 기반 및 기준규격 국제조화 연구

- 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 검사기술 개발 및 위해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,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축수산물 중 식중독균 등 기준·규격 개선(안)마련(11월)	○ 알가공품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3건 개정안 근거제시(11월)
○ 조제유류 중 기준 미설정 영양 성분 시험법(12월)	○ 조제유류 중 기준 미설정 영양 성분 시험법 마련(12월, DHA 등 4종)
○ 축수산물 위해요소 시험법 개발	○ 축수산물 위해요소 시험법 개발
- 축산물 중 농약, 동물용의약품 시험법(11월)	-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(69종) 및 축산물 중 농약(55종) 동시분석법(11월)
- 항생제 내성균 내성유전자 신속 검출법(12월)	- ESBL 항생제 내성균 내성유전자 신속 검출법(12월)
- 신규 해양독소 시험법(11월)	- 신규 해양독소(브레베톡신)에 대한 시험법(11월)
○ 방사능 모니터링 감시체계 구축(12월)	○ 방사능(감마핵종) 모니터링 장비 도입 등 15개 시·도 감시체계구축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정책활용률(%)	72	89

3. 성과 및 한계

□ 축·수산물 중 미생물 등 위해요소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기반 마련

-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서의 식중독균 정량기준 마련
- 위·공판장, 단순처리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안전가이드 마련

□ 시험법 선진화를 통한 수입 및 국내 생산 축·수산물 중 위해요소 검사기술강화 (24건)

- 계란, 닭고기 중 살충제 27종 동시시험법 및 아미트라즈 등 3종 개별 정량시험법 등 4건 개발
-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 대비, 축수산물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분석법 및 국내 미등록 동물용의약품 정량시험법 등 15건 개발
- 조제유류 중 EPA, DHA 등 영양성분 시험법 3건 개발
- 항생제 내성균 내성유전자 신속 검출법 개발
- 신규 해양생물독소 중 신경성 패독(브레베톡신) 시험법 개발

4. 향후 추진계획

- 축·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준·규격 현대화(지속)
- 축수산물 검사강화 등 안전관리 기반확대를 위한 시험법 선진화(지속)

1-4-3	축·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
②	수산물의 과학적·효율적 안전관리 강화

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이정선 연구관 T.051-400-5650

1. 과제내용

- ☐ 항생제 사용 증가,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우려 증가로 정밀 분석 체계 강화 필요
- ☐ 연근해의 지속적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위해요소 오염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밀분석 전문성 제고 필요
 - 수산물 종별 주요 위해요소 파악 등 신종 유해물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분석능력 제고 필요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정밀검사장비 도입(연중) - 25종 56대	○ 정밀검사장비 도입 완료 - 37종 74대 * 미생물 2종2대, 항생물질 3종10대 어병 2종2대, 유전자 1종1대, 기타 29종59대
○ 숙련도 평가(연중) - 5개분야 20개항목	○ 숙련도 평가 완료 - 5개분야 20개 항목 * 미생물 2, 중금속 3, 항생물질 5, 금지물질 2, 검역 8
○ 전문 분석인력 양성 교육(연중) - 9개분야 20명	○ 전문 분석인력 양성 교육완료 - 9개분야 20명 * 원산지판별법 2, 노로바이러스 4, 세균 4, 항생물질 3, 기기분석 2, 방사능 1, 기준규격 3, 위해평가 1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정밀검사숙련도평가	20	20
○ 분석전문인력양성교육	20	20

3. 성과 및 한계

☐ 성과

-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밀검사 체계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 추진 계획 목표를 모두 달성(숙련도 100%,양성교육 100%,장비 132%)

☐ 문제점 및 개선대책

- 해당없음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하고 전문 분석인력 양성을 도모

1-4-3	축·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
③	수산물의 위해성 평가 연구·강화

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안전과 목종수 연구관 T.051-720-2630

1. 과제내용

- ☐ 연근해의 지속적인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학적·화학적 위해요소 출현 가능성 상존
- 수산물의 주요 위해요소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해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생산단계 수산물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('17.3 ~'18.2) - 전국 연안 패류생산해역 패류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 * 일반해역(56개소)의 패류 등에 대한 위생지표세균 조사 * 후보해역(8개소)은 수입국 기준에 부합되게 위생조사(위생지표세균·패류독소·이화학적 위해요소) ○ 수산물 유래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('17.1 ~12) - 수산물의 위해물질 기준치 설정을 위한 중금속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	○ 생산단계 수산물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('17.3 ~'18.2) - 전국 연안 패류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 * 전국 연안 패류생산해역(56개소)의 패류에 대한 위생지표세균(대장균군, 분변계 대장균, E. coli) 조사 실시(연 10회) * 주요 패류생산해역(8개소)의 패류에 대한 위생지표세균, 노로바이러스, 패류독소 조사 및 이화학적 위해요소 조사 실시(연 12회) ○ 수산물 유래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('17.1 ~12) - 해조류(김 외 7종)의 중금속 위해도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저감화 연구 완료('17.12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(7개소) 위생조사('17.1~12) -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의 해수 및 패류에 대한 위생지표세균 및 병원성세균 조사 -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및 이화학적 위해요소 조사	○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(7개소) 위생조사('17.1~12) -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의 해수(294점) 및 패류(39점)에 대한 위생지표세균(12회) 및 병원성세균 조사(패류 14점, 12회) -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(37점, 12회) 및 이화학적 위해요소 조사(14점, 2~4회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'17	'18	'19	'20	'21
○ 위해성평가 모니터링(건수)	1,700	1,750	1,750	1,800	1,800

3. 성과 및 한계

□ 성과

- 전국 연안 패류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조사
 - 위생지표세균(1,680건), MSC(448건), 패류독소(96건), 항생제(96건), 다환방향족탄화수소(32건), 농약(16건), 다이옥신(16건), 중금속(72건)
- 해조류 중 무기비소 위해도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비소 화학종 분석법 개선
 - 해조류(김, 다시마, 파래, 매생이, 곰피, 청각, 툇, 모자반) 무기비소 분석(175건)
 - 해조류 중 툇의 무기비소 함량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낮추기 위한 저감화 조건 확립
 - 김제품 중 중금속에 대한 식품안전성 위해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(물김 및 마른김 104건)

-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해수 및 패류에 대한 위생지표세균 및 병원성세균 조사
 - 해수, 패류의 위생지표세균(3,900건) 및 패류의 병원성세균(300건)
-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및 이화학적 위해요소 조사
 - 패류독소: 마비성패독(603건), 기억상실성패독(400건), 설사성패독(326건)
 - 이화학적 위해요소: 항생제(168건), 다환방향족탄화수소(32건), 농약(16건), 다이옥신(14건), 중금속(28건)
 - 조사결과: 수산물 안전정보 시스템(수과원) 전산입력 완료 및 스마트폰 앱(패류독소정보)을 통한 실시간 제공

□ 한계

-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수산물 유래 위해요소 조사가 필요하나, 기존의 연구인력과 예산으로는 조사 빈도 및 항목의 확대 곤란
- ⇒ 연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조사 빈도 및 항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추진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생산단계 수산물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의 위생조사 지속 추진

1-4-3	축·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
④	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

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유통식 연구관 T.051-720-2640

1. 과제내용

- 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의 지속적 발생에 따른 관리 강화 및 패류독소 상시 감시체제 유지
 -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 강화
 - 전국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패류독소 발생실태 파악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안전한 굴 공급 계획*에 따른 남해안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- 6월~10월 : 남해안 패류양식장 15개소(월 1회 조사) - 11월~익년 5월(굴 생산시기) : 격주조사, 검출시 매주검사 - 전국연안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조사(월 1회, 생산시기) ○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패류독소 조사(연중) - 월 2회 이상 연중 모니터링(1~2월, 7~12월) - 매월 1회(검출시 주 1회, 기준 초과시 주 2회, 1~12월)	○ 안전한 굴 공급 계획에 따라 남해안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실시 * 남해안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실시 완료(31회) ○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실시(연중) - 동·서·남해안 연안 패류양식장 97개소(정기조사 55개소, 확대조사 42개소)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29회 실시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‘17	’ 18	‘19	‘20	‘21
○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(건수)	25	25	25	25	25
○ 패류독소 모니터링(건수)	1,800	1,800	1,850	1,850	1,850

3. 성과 및 한계

☐ 성과

-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조사 강화 및 결과 제공
 - 해수부,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노로바이러스 조사결과 제공(31회)
- 패독 발생 상황 홈페이지(수과원) 게재 및 보도자료 제공
 - * 패류독소 속보(29회), 스마트폰 앱 패류독소 정보(29회), 보도자료(5회) 등
- 패류독소 상시 감시체제 가동(패독속보 및 스마트폰 앱) 및 피해대책반 운영(패독검출시기)

☐ 한계

- 해당없음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

☐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한 패류독소 발생실태 파악

2-1 위기대응 역량 강화

2-1-1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및 지속 정비

① 식품안전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제·개정

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임영인 사무관 T.043-719-1718

1. 과제내용

- ☐ 국민 보호, 지자체 지원 등 위기대응체계 정비 및 고도화
 - 위기 발생상황에 따른 소통메시지 구체화 및 국민행동요령 제시
 - 식약처-지자체 간 위기대응 체계 조화 및 협업체계 구성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실무협의체 구성·운영(1월) - 사업부서 위기대응 담당자로 구성, 보완사항 발굴 ○ 식품사고 발생 유형별 대국민 소통메시지 구체성 보완(9월) -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및 국민 행동요령 마련 ○ 지자체 식품사고 위기대응 가이드 라인 제시(4월) - 지자체의 조직·업무 등 실정을 반영한 '위기대응 기본매뉴얼' 배포	○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실무협의체 구성·운영(1월) - 부서별 위기대응 담당자 1:1매칭, 매뉴얼 개정을 위한 협력창구로 활용(총 21명) ○ 최근 식품사고 발생유형을 반영 하여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(5, 12월) - 위기 상황별 대응·조치사항, 위기 커뮤니케이션 보강 및 초동대처를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등 ○ 지자체 식품사고 위기대응 가이드 라인 배포(11월) - 위기대응 기본방향 및 지역사고 대책본부 구성·운영방법 등 제시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식품사고 위기대응 담당자 비상 연락망 지속 현행화(분기별)	○ 인트라넷 활용, 식품사고 위기 대응 담당자 비상연락망 지속 현행화(1, 5, 6, 9, 11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위기대응 매뉴얼 제·개정(회) (위기대응 매뉴얼 운영)	3 (4개)	6 (4개)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최근 발생한 식품사고를 토대로 실제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 체크리스트 마련
 - 매뉴얼에 따라 위기관단, 경보발령 등 핵심 대응·조치사항을 빠짐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순서도 형식으로 작성
- (한계) 식품사고 발생 시마다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어 매뉴얼 체계가 복잡다기(複雜多記)해져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·적용력 저하
 - (개선방안) 국무조정실 「식품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」 제정(안)에 따라 現 40개 대응조치를 8개로 압축·간소화* 필요
 - * 10개 유형, 4단계 위기경보(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) → 4개, 2단계(위기, 평시) 조정

4. 향후 추진계획

- 표준매뉴얼 제정(6월, 국조실)에 따라 식약처 「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」 전면 개정(9월)

2-1-2	위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
①	위기대응 역량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임영인 사무관 T.043-719-1718

1. 과제내용

- ☐ 위기대응 체계의 체질화 및 위기인식·대응역량 강화
 - 사고 시 체계적인 총괄대응을 위한 지자체·유관기관 역량 동반제고
 - 실무자의 전문성 함양으로 선제적 위기대응 및 확산방지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관계기관 합동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실시(하반기) -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 및 위기대응 역량 제고 ○ 실제 사고상황을 가정한 실무자급 '긴급대응 조치훈련' 실시(5, 9월) - 긴급상황 발생시 위기대응 체계가 신속히 작동하도록 실무자급 토론훈련 실시 및 개선방안 도출 ○ 식약처·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(하반기) - 기관별 위기대응시스템(조직, 매뉴얼 등) 구축정보 교류 등	○ 「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」 실시(10~11월) * 식약처, 지자체, 관계기관, 업계 등 9개 기관 참여, 기관장 중심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형 토론 및 현장훈련 실시 ○ 실무자 대상 실습·토론 중심의 '긴급대응 조치훈련' 실시(5, 11월) * 가상 사고발생 시나리오(발생→확산→악화→진정)에 따라 상황별 대응·조치 실습·토론 중심 교육·훈련 * 본부·평가원·지방청 등 총 73명 참여 ○ 식품사고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(11월) * 위기대응의 이해, 지자체 위기관리 방안 및 효율적인 소통전략 교육 * 15개 지자체 식품사고 담당공무원 참여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관·학·연 합동 식의약 위기대응 국제심포지엄 개최(11월) - 국내·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최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국제동향 파악	○ 제4차 식의약품 위기대응 국제심포지엄 개최(10월) * 그간 식약처의 위기대응 사례 및 위해소통에 대한 성과·반성, 소통 원칙·전략에 대한 국내·외 전문가 제언 등 * 국내·외 정부·학계·산업계·유관기관 등 352명 참여(전년대비 2배 증가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모의훈련 횟수(회)	3	3

3. 성과 및 한계

☐ (성과) 기존 일방식·주입식 위기대응 교육·훈련에서 실제상황에 대비하는 실습·참여형 위기대응 교육·훈련으로 전환

- 사고대응에 대한 체(體)화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시 평시 업무체제에서 비상체제로 신속히 전환, 사고 조기수습 및 국민피해 최소화

☐ (한계) 집합식 교육·훈련은 시간적·공간적 제약이 있어, 여러 부서 동시 대응이 필요한 복합적 사고발생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 부족

- (개선방안) 시간·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고 시뮬레이션에 여러 훈련생이 동시에 참여하는 사이버 교육훈련프로그램 마련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상황별 맞춤형 위기대응 가상훈련시스템 개발(중장기)

2-2 미래대비 선제 대응

2-2-1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

①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이우영 연구관 T.043-719-2359
식품위해평가과 문귀임 연구관 T.043-719-4503

1. 과제내용

- ☐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 및 알레르기 검증을 통한 안전성 재확인
- ☐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개발 및 개선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승인 후 10년 경과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 실시(연중) ○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전문 심사관 운영 확대를 위한 수수료 개정(연중) ○ 유전자변형식품 개발사 대상 민원 간담회 개최(5월, 11월) ○ 기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유래 발현 단백질 4종에 대한 알레르기 검증(12월) ○ 유전자변형 콩에 대한 양성대조 물질 검증(8월) ○ 유전자변형 옥수수, 카놀라 등에 대한 정성, 정량시험법 확보(10월)	○ 승인 후 10년 경과 유전자변형 식품 1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 완료(2월) ○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수수료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(12월) ○ 유전자변형식품 개발사 대상 민원 간담회 개최(5월, 11월) ○ 기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유래 발현 단백질 4종에 대한 알레르기 안전성 검증 완료(11월) ○ 유전자변형 콩 17품목에 대한 양성 대조물질 검증 완료(8월) ○ 유전자변형 옥수수, 카놀라 등 정성, 정량시험법 10건 확보(10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 신속검출법 개발(12월)	○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 13품목에 대한 신속검출법 개발 완료(12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GMO 발현 단백질 알레르기 검증	4	4

3. 성과 및 한계

☐ 승인 후 10년 경과 1품목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 재확인

* 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MIR604('17.2.23.)

☐ GMO 발현 단백질 4종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검증을 통해 안전성 재확인

- GMO 발현 단백질 총 44종 중 상업적 생산 중단 등 4종 제외한 40종 완료('17년 4종* 포함)

* 해충저항성 단백질 2종(Cry1Ac, Cry1Fv3) 및 항생제 내성 단백질 2종 (APH4, BLA) 등 4건 완료

☐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개발 및 개선을 통한 수입검사 업무 지원

- 유전자변형 콩 17품목에 대한 양성표준물질 확보
- 유전자변형 옥수수, 카놀라 등에 대한 10건의 시험법 확보를 통한 검사 가능 품목 확대
- 미승인 유전자변형 쌀 등 13품목에 대한 신속검출법 개발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10년 경과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심사 지속('18년)

☐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개발 및 개선 지속('18년)

2-2-1	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
②	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남혜선 연구관 T.043-719-2185

1. 과제내용

- ☐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표시제도 개선
-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개선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○ GMO 표시기준 개정사항 교육·홍보	○ ‘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’ 회의 개최 (2회, ‘17.5월, 12월) ○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제도 정책 토론회(1회, 9월) ○ 「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고시 개정(1월) 및 시행(2월) * 유전자변형 DNA 남아있는 모든 원재료”로 표시 대상 확대, 표시 활자크기확대, Non-GMO 표시기준 신설 ○ 영업자, 공무원 등 대상 GMO 표시기준 개정 사항 교육·홍보 - GMO 표시기준 산업체 설명회 (3회, 2~3월) -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관리 전국 순회 교육(5회, 3월) - 유전자변형식품 담당공무원 워크숍 (1회, 11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유전자변형식품 및 농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지도·점검	○ GMO 취급업체의 표시사항 준수여부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 - (농산물) 지도·점검 3,019건, 수거·검사 373건 - (가공식품) 지도·점검 2,022건, 수거·검사 688건 * 위반 6개 제품(가공식품, 미표시)

3. 성과 및 한계

☐ 성과

-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확대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
 - 표시대상을 유전자변형 DNA 남아 있는 “주요 원재료(함량이 많은 5순위)” 에서 “모든 원재료”로 확대, 활자크기 확대(10→12포인트), Non-GMO 표시기준 신설
 - * 「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고시개정('17.1.25) 및 시행('17.2.4)
- ‘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’ 회의 및 표시제도 정책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표시제도 강화 추진
- 영업자, 공무원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·홍보 실시를 통한 「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개정안에 대한 인식 제고
 - * 산업체 설명회(3회), 순회교육(5회), 워크숍(1회)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소비자,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지속 추진
- ‘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’ 회의 지속 운영(연중)

2-2-1	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
③	유전자변형식품 소비자 정보교류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장미란 연구관 T.043-719-2352

1. 과제내용

- ☐ 대상 맞춤형 교육·홍보 확대로 유전자변형식품 소비자 인식 개선
- ☐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로 안심인식 공감대 확산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「GMO 바로알기」 소비자, 대학생 대상 교육 강화(연중)	○ 「GMO 바로알기」 소비자, 대학생 대상 교육 강화(3월~11월, 91회, 5,147명)
○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 실태 조사(6월)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(12월)	○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 실태 조사(6월)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(12월)
○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설명회 등 개최(반기별)	○ 새로운 식품원료 설명회(5.17) 및 맞춤형 컨설팅 채움토의 개최(1월~9월, 11회)
○ SNS(페이스북, 트위터) 활용 정보 제공(연중) 및 이벤트 실시(5월, 11월)	○ SNS를 활용한 카드뉴스 등 홍보(20회) 및 GMO 바로 알기 이벤트 실시(5.15~21, 9.15~20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소비자 대상 교육 횟수(회)	65	66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중·고·대학생, 주부, 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관리자 등 대상 맞춤형 교육·홍보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

* 교육 전·후 인식도 개선율 : ('16) 38% → ('17) 40%

- ☐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맞춤형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개발

* 책자 1건, 동영상 및 만화(주부, 대학생용 각 2건), 카드뉴스 2건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「GMO 바로알기」 교육 대상자 확대 운영('18년)

2-2-2	나노식품의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
①	나노기술응용식품 안전성평가 기반 마련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문귀임 연구관, T.043-719-4503

1. 과제내용

☐ 나노기술응용식품의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동물대체시험 개념의 나노식품 체내흡수율 평가 시험법 확립 ○ 나노식품의 안전성평가 기법 확립 및 대표 식품에 대한 평가 수행	○ 대표적 나노기술 9개 유형에 대한 제조 및 분석기술 확보(11월) ○ <i>in vitro/ex vivo</i> 모델 연계 나노식품 체내흡수율 스크리닝 시스템 검토 및 확립(11월) ○ 유통식품에 적용된 나노기술 2개 유형에 대한 체내흡수율 평가(11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시험분석법 마련 건수	2	2

3. 성과 및 한계

☐ 나노기술응용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체내흡수율 평가 시스템 개발 및 검증

○ 체내흡수율 평가 대상 나노기술 제조·분리공정 확립

- * 에멀전화, 포접복합체화, 층상자기조립법, 이온겔화, 나노침전, 동결분쇄, 3D 프린팅

○ 나노식품 체내흡수율 스크리닝 시스템 확보

- 나노기술 2개 유형에 대한 체내흡수율 평가 시스템 검증

- * 세포주 시험 등 in vitro 시험법과 장관 시료주입 실시간 흡수율 측정법 등 ex-vivo 시험법을 연계한 나노식품 체내흡수율 스크리닝 시스템 구축
- * 대상나노기술: 유화(emulsification) 및 포접복합체화(inclusion complexation) 기술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나노기술응용식품 안전성평가 기반 마련 지속('18)

○ 나노기술 4개 유형에 대한 체내흡수율 평가 시스템 검증

- * 기술유형: O/W 에멀전, 나노침전, 이온겔, 동결분쇄

2-2-3	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
①	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중유해물질팀 고영호 연구관 T.043-719-4452

1. 과제내용

- ☐ 기후변화 적응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
-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기술 등의 연구성과 적용 및 확산 방안 마련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그간 사업 수행을 통해 도출한 연구성과의 확산 방안 마련(3월) - 식품 산업체, 접객업소 대상 위생 관리 매뉴얼 자료 제작 및 배포 ○ 기 개발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안 마련(4월) - CCFS-DMC(기후변화 대응 데이터 마이팅 시스템), CC-MIMS(기후변화 대응 모니터링 자료 수집시스템) 활용방안 마련	○ 그간 사업 수행을 통해 도출한 연구성과의 확산 방안 마련 - 식품 산업체, 접객업소 등 식품 취급업소 대상 위생관리 방안 마련(3월) - ‘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, 식당의 안전가이드’ 제작 및 홈페이지(식품안전나라) 게재(9월) ○ 기 개발된 시스템 개선 및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마련 - 패독 등 식품위해인자 발생 예측 프로그램 개발(2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환경 변화 대비 인포그래픽(Infographic) 추가 제작 ○ 신종, 변종 식품위해인자의 관리 체계 기반 마련(12월) -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종, 변종 위해인자 거동 및 동태학적 특성 연구	- ‘기후변화 적응 식품안전 실천 방안’, ‘기후변화에 따른 마비성 패독 발생 증가’, ‘기후변화와 곰팡이독소 예측’ 인포그래픽 3종 개발 및 홈페이지(식품안전나라) 게재(9월) ○ 신종, 변종 식품위해인자의 관리 체계 기반 마련 - 국내·외 신종, 변종 식품위해인자 발생 현황 및 연구결과 분석 완료(12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기후변화에 대비한 식품안전관리 매뉴얼, 인포그래픽 제작 및 배포	3	4

3. 성과 및 한계

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비한 매뉴얼, 인포그래픽 제작 및 홈페이지(식품안전나라) 게재

* ‘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, 식당의 안전가이드’, ‘기후변화 적응 식품안전 실천방안’, ‘기후변화에 따른 마비성 패독 발생 증가’, ‘기후변화와 곰팡이독소 예측’ 등 4건('17. 9. 게재)

☐ 마비성 패독 원인 플랑크톤 발생 예측 시스템 지적재산권 등록

* 저작권 등록번호 : 제 C-2017-004675호(2017.2.1.)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해당없음

2-3 국민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

2-3-1 대 국민 소통강화 및 소비자 참여 확대

① 대 국민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

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 백남이 사무관 T.043-719-2553

식품안전표시인증과 강승극 사무관 T.043-719-2854

1. 과제내용

☐ 국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로 식품안전 인식도 향상

- 찾아가는 대면교육으로 식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
- 미래 스마트소비자 양성을 위한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운영
- 식의약 정책공조를 위한 단체, 학계, 관계부처 등과 소통채널 운영

☐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 및 참여제 확대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올바른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국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- 일상생활에서 식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‘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’ 확대·운영 - 미래 진로탐색 기회 및 권역별 소통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‘청소년 참여프로그램’ 운영	○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계층별 현장소통 프로그램 추진·강화 - 7개지역(경기, 충남 등)에서 어르신, 주부 대상 식의약 안전교육 실시 (6~11월, 7,914명 참여) * 교육 만족도 90점, 교육 후 식의약품 사용법 인지도 상승(어르신 46.7%, 주부 34.8%) - (식의약 주니어) 평가원, 지방청, 공공기관* 협업으로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11개 체험프로그램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국민 필요정보 발굴을 위하여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- 국민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양방향 채널 '국민소통단' 운영 - 부처간 정책공유 및 이슈 발생 시 긴밀한 협업체계 유지를 위한 '위해소통 민관협의회' 개최 -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 '소비자포럼' 개최 - 이해하기 쉬운 소통메시지 발굴을 위한 '소통 자문위원회' 운영 ○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 및 참여제 운영(3~11월)	운영·총괄(35회, 815명, 4~12월) - (식의약 영리더) 본부·지방청 협업으로 '당 바로 알고 건강하게 먹기'등 6개 소통주제에 대해 온·오프라인 소통활동(전국 중·고등학생 55팀, 211명, 7~9월) ○ 소비자 니즈 발굴로 양방향 소통 활성화 - 소비자 니즈 발굴(55건), 설문조사(6회) 등 국민소통단 운영 * 니즈별 조치계획을 포함한 식의약 소비자 니즈보고서 마련(4회) - 범정부 식중독 근절체계 확립방안 마련 등 식의약 안전정책 논의를 위한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(2회) - 화장품 표시·광고 안전관리 방안 모색 등 소비자의 관심사항을 의제로 선정하여 소비자포럼 개최(4회) - 식약처를 대표하는 전략적 콘텐츠 논의 등 소통자문위원회 개최(4회) ○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(244명) * 6개 지방청 및 17개 시·도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위해소통 회의 및 소비자 포럼(회)	10	10
○ 소비자위생점검 참여인원(명)	1,000	244

3. 성과 및 한계

☐ 소비자 니즈 발굴로 양방향 소통 활성화

○ 국민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양방향 채널 국민소통단 운영

* 상담사례 분석 등 소비자 관심이슈 발굴(55여건) 및 지도·점검, 정책·생활 정보 제공(63건)

○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

* '17년 7개 지역(경기·충남 등) 어르신·주부 7,914명 교육(교육 만족도 90점, 교육 후 식의약품 사용법 인지도 상승(어르신 46.7%, 주부 34.8%))

☐ 여성·시민단체와의 소통 다소 미흡

○ 소비자단체(소비자연맹)에서 제기한 살충제 계란, 시민단체(여성환경연대)에서 제기한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 선제적 대응 미흡

* 기존 소비자단체와는 소통 강화하고, 다른 단체로 소통확대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식의약 소통거버넌스 구축

○ 국민소통단 지속 운영을 통한 국민 니즈발굴 및 맞춤형 생활·정책 정보 제공(상시)

○ 여성·시민단체로 식의약 안전 소통 네트워크 확대('18.1~)

2-3-1	대국민 소통강화 및 소비자 참여 확대
②	소비자 정보 교류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하미숙 사무관, T.044-201-2274

1. 과제내용

- ☐ 고품질 안전 농식품 소비확대, 농업·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소비자 정보교류 및 교육·홍보 확대
 - 소비자단체 정책포럼·간담회 등을 통해 농식품 소비정책 확산
 -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를 추진하여 합리적 소비자 육성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농사랑알리미(소비자교육 강사) 교육 및 알리미를 통한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·홍보 실시 ○ 소비자단체와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소통채널 강화를 위한 정책 포럼 및 간담회 실시	○ 농사랑알리미('17년 154명 활동) 대상 심화교육 실시 - 농사랑알리미를 통한 소비자 교육 565회 실시(이론 210회, 실습 355) * 교육생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실습 중심 교육 실시 ○ 소비자단체 정책포럼 및 간담회 개최(총5회) - AI·구제역 발생 현황, 학교급식 안전관리, 계란 살충제 검출 이후 안전관리 등 농축산물 안전 현안 공유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소비식생활 소비자 인식도(점)	72	72.8

3. 성과 및 한계

☐ (성과)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학교급식 및 농축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향 공유(정책포럼·간담회 5회)를 통해 소비자 이해도 제고

○ 소비식생활 관련 소비자 인식도 상승('16: 71.3 → '17: 72.8)

☐ (한계) 소비자와 상시 정보 공유가 가능한 채널 운영 미흡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'농식품 소비자 소통 협의체'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안전, 가격 급등 등 문제 발생 시 즉각 정보 교환이 가능한 채널 마련

○ 농식품부-소비자 공동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

2-3-1	대 국민 소통강화 및 소비자 참여 확대
③	수산물 위해정보 소통 강화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.044-200-5622

1. 과제내용

- ☐ 수산식품의 위생·안전 관련 위해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 강화
 - 수산물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·안전관련 정보를 언론 매체 등을 통한 교육·홍보 실시로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산식품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·홍보 등 강화 - 수산물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 계획 수립('17.2) - 수산물의 올바른 조리·섭취요령 등 위생·안전관리에 대해 교육·홍보	○ '17년도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 추진계획 수립('17.2.20) - 수산물 조리·섭취 등 위생·안전 관리 요령 대국민 교육·홍보(연중) * (교육) 수산물 생산·유통·소비 등 취급 관계자에게 위해정보, 안전관련 제도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* (홍보) 대국민 대상 TV·라디오 광고,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기고 등을 통해 올바른 조리·섭취 등 위생관리 요령 정보제공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(성과) 안전한 조리·섭취 등 위생·안전관리 요령 대국민 교육·홍보
 - * (교육) 61회(8,065명, 생산·소비자, 유통종사자, 영양·조리사 등)
 - * (홍보) 포스터 1회, 현장참관 2회, TV 73회, 기고 2회, 온라인 2개사

- (한계) 수산물 위생·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·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식품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소비자의 불안 가중

4. 향후 추진계획

- '18년도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추진계획 수립('18.2)
 - 수산물 위생·안전 관리 등 교육·홍보 지속 실시(연중)

2-3-2	식품 등 표시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
①	식품등 표시기준 개정 및 홍보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대훈 연구관 T.043-719-2853

1. 과제내용

☐ 식품 표시기준 개정 및 홍보 강화

- 소비자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고시 개정
- 식품표시 모델 및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 강화
- 안전한 식품용 기구 선택을 위한 구분표시제도 단계적 확대 시행 및 홍보
-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‘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자문협의체’ 운영
-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대상별 전국 단위 위탁교육
- 표시기준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한 영업자와의 소통 강화
- 표시제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제작·배포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고시 개정	○ 소비자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고시 개정(행정예고 9월, 고시 12월) * 아마씨 사용제품 주의사항 표시 등 5건 - 식품의 일자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('16.11~'17.6)
○ 식품표시 모델 및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연계 시범사업 실시 및 홍보	○ 식품표시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식품표시 모델 및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연계 시범사업 실시(2~10월) * 제품 포장에는 유통기한 등 기본정보만 표시하고, 나머지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안전한 식품용 기구 선택을 위한 구분표시 제도 단계적 확대 시행 및 홍보 ○ ‘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자문 협의체’ 운영 ○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사업 실시 ○ 표시기준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한 표시 이해도 강화 ○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개정판 제작·배포	- 시범사업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 연구 사업 실시(11~12월) ○ 식품용 기구 구분표시 3단계 시행 및 대국민 홍보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(연중) * TV 광고(22회), 영화관(70개소) 및 지하철(50개소) 홍보영상 송출, 지면광고 등 ○ 식품등의 표시기준 자문협의체 운영으로 소비자를 위한 식품표시 개선 사항 도출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(5회, 77명 참석, 19개 안전 검토) ○ 어린이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를 위한 전국 순회교육 실시(4~10월) - 소아청소년 및 학부모, 영양교사 등을 대상, 알레르기 예방교육 및 교육교재 제공 (총95회 4,564명, 교육만족도 4.7/5) ○ 소비자를 위한 표시 개선사항 및 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한 전국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(5회, 1,275명 참석) ○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개정판을 포함한 식품 관련 표시기준(10개 고시) 모음집 제작·배포(12월, 3천부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용건수(건)	3	5

3. 성과 및 한계

- 소비자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식품 표시기준 개정 및 홍보 강화
 - 식품등의 표시기준 자문협의체 회의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으로 합리적인 식품 표시기준 개정(5건)
 - 지상파 TV, 영화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로 식품용기구 구분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 달성
 - 표시모델 시범사업 실시로 식품표시 가독성 향상을 통한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
 - 어린이 식품 알레르기 예방을 위해 어린이 및 이들의 조력자(학부모, 교사 등) 대상 지속적인 대상별 눈높이 교육 실시로 교육만족도 향상
 - * 교육만족도 4.7점/5점, 초등학생·학부모·보건교사 등(총95회 4,564명)
 - 「식품표시규제 운영방안」 지침(국조실, '17.7.14)에 따라 각 부처*의 식품표시관련 법령 개정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을 짝수년도 1월 1일로 통일하기로 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
 - * 식약처, 복지부, 농림부, 해수부, 국세청, 여성가족부 등

4. 향후 추진계획

- 소비자 친화형 식품 표시제도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표시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
2-3-3	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및 단속 효율화
①	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민동명 사무관 T.044-201-2276

1. 과제내용

- ☐ 형령하한제, 의무교육, 과징금 부과 등 원산지 위반자 처벌강화
- ☐ 취약 품목별·시기별 집중 단속 및 원산지표시 교육·홍보 추진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위반자 의무교육 지침 마련	○ 교육지침 제정 및 교육체계 구축 -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
○ 과징금 부과지침 마련	○ 과징금 부과지침 시달 - 농관원, 해수부, 지자체, 관세청 등
○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	○ 농산물 성수기 특별단속 실시 - 설, 추석, 김장철 등 6회
○ 원산지표시 홍보, 교육 강화	○ 개정된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물 제작 배포 - 음식점, 가공업체 집중 홍보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원산지 표시 이행률(%)	96.8	95.4

*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에 따라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낮아졌음

3. 성과 및 한계

- (하위법령 정비) 의무교육, 상습위반자 과징금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
 - 원산지표시 교육시행지침 제정 및 위반자 의무교육 시행 체계 구축
 - * 교육기관 지정(농정원)하고 위반자 의무교육 실시(집합 2시간)
 - 단속실적 관리를 위한 단속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(농관원, 수품원)
 - *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경찰·검찰 등 수사기관 적발실적 통합
- (지도·홍보) 개정 원산지표시 홍보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 강화
 - 개정 원산지표시제 지도·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
 - * 원산지표시방법 주요 개정내용 및 위반시 처벌사항(가공품, 음식점 등)
 -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취약지역 원산지 지도·홍보 강화
 - * 전통시장, 지역 전담 명예감시원 지정으로 취약지역 중점관리(5,446명)
- (관계기관 협업)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및 지역 순회교육 실시
 - 원산지표시 관리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지자체 참여 유도
 - *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및 지역 순회교육 실시('17.10.19~26)
 - 검찰·경찰 단속실적 통합으로 위반자 과징금 부과
 - * 과징금 시행 이후 부정유통 적발정보 제공 및 향후 제공방안 마련

4. 향후 추진계획

- (민간 감시기능) 명예감시원 정예화 및 취약지역 관리 강화
 - 정예 명예감시원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감시에 활용
 - * 명예감시원 확대 : ('17) 3천명 → ('18) 3.4 → ('22) 5.0
 - 취약지역 전담 명예감시원 확대로 원산지표시 이행을 개선
 - * 전통시장, 노점상 및 지역별 전담 명예감시원 확대 지정 운영

□ (과학적 단속) 부정유통 조기경보 및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구축

-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부정유통 정보 제공
 - * 통관·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 정보 제공(매월)
-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구축 완비로 수사·단속의 과학화 추진
 - * 분석장비, 수사인력 등을 추가 확보 후 수사에 본격 활용

□ (지도·홍보) 업체별 맞춤 교육·홍보를 통한 원산지표시 여건 조성

- ‘원산지표시 안내 서비스’ 제공으로 맞춤형 원산지표시 안내
 - * 업종별, 상품별 원산지 표시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
-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포 및 업종별 원산지표시 교육 추진
 - * 식품위생교육 등 관련업체 교육시 원산지표시 교육

2-3-3	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및 단속 효율화
②	수산물 원산지제도 관리 강화
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문미희 사무관 T.044-200-5448

1. 과제내용

- 대외시장 개방에 따라 국산과 가격 차이가 큰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
 - 수산물 원산지 정보제공확대 및 관리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 증대, 공정거래 유도 및 유통질서 확립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'17년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도 홍보·교육 강화(연중)	○ 지도조사원,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 제도 홍보 및 교육 실시 - 전국 86만개 대상업소 중 106,114개소 지도·홍보 실시 - 형량하한제 신설 등 제도 개선사항 홍보 보도자료 배포(5월) - 표시방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원산지 표시판 제작·배부(7만개)
○ 수산물 소비성수기 및 위해 정보 발생 시 특별단속 실시(연중)	○ 명절, 여름휴가철 등 소비성수기 특별 단속 실시(11회) - 단속실적: 12,416회, 106,114개소 점검, 표시위반 677건 적발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표준표시판 도입시장 수	30	30
○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수	12	12

3. 성과 및 한계

□ (성과) 관련 규정 개정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·교육 활동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율* 매년 증가 추세임

* 최근 3년 원산지 표시 이행율 : ('15) 89.1% → ('16) 90.2% → ('17) 90.5%

□ (한계) 지속적인 홍보·교육을 통한 원산지 표시 이행율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둔갑행위가 근절되지 않음

* 최근 3년간 거짓표시 적발실적 : ('15) 160건 → ('16) 152건 → ('17) 163건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 근절을 통한 수산물 신뢰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('18)

2-3-4	농수산물 인증·표시 제도 개선
①	농산물 인증·표시제도 개선

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민동명 사무관 T.044-201-2276

1. 과제내용

- ☐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및 공통표지 홍보
- ☐ 포장 농산물의 권장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 마련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국가인증 홍보 추진 ○ 권장품질표시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	○ 공통 인증마크 홍보 추진 ○ 품질관리법 개정 추진 - 개정안 국회 제출(법사위 계류)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종합인지도(%)	70.0	70.8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공통 인증표시 홍보를 통해 전체 국가인증 인지도 향상
 - TV,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는 향상되었으나 무항생제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등으로 국가인증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졌음
- ☐ 품질관리법 개정을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법사위 계류 중임 : '17.3.13. 법안 상정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권장품질표시제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법 개정 및 실행방안 마련
 - '18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,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실행방안 마련

2-3-4	농수산물 인증·표시 제도 개선
②	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서정우 사무관 T.044-201-2437

1. 과제내용

- ☐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범위 확대
 -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소비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 유기양봉, 애완용동물 유기사료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
- ☐ 유기가공식품 기구·설비의 세척·살균소독제 범위 완화
 -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의 사용 기구·설비에 대해 세척·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추가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범위 확대('17.6.) - 유기양봉제품 및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마련 ○ 유기가공식품 기구·설비의 세척·살균소독제 범위 완화('17.6.) - 사용가능한 세척제의 규격 확대	○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범위 확대('17.6.3.) - 유기양봉제품 및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마련(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) ○ 유기가공식품 기구·설비의 세척·살균소독제 범위 완화('17.6.3.) - 사용가능한 세척제의 규격 확대(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) * (기존) 1종 → (개정) 1~3종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(ha)	83,000	80,114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친환경인증 대상 범위 확대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충족과 친환경 연관 산업 활성화 기대
- ☐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및 유기가공식품 활성화 기대
 - 유기가공식품 인증현황: ('16) 865업체, 6,807제품 → ('17) 870, 6,144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국제기준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불합리한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 개선 추진

2-4 식품안전관리 국제경쟁력 제고

2-4-1 국제적 수준의 시험·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

① 시험·검사능력 선진화 단계 진입

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이현희 사무관 T.043-719-1803

1. 과제내용

- ☐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기관 제도 개선
- ☐ 법정 시험·검사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원
- ☐ 민간 시험·검사기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식의약 시험·검사기관 제도 개선 - 「식품의약품검사법」 및 하위규정 개정 ○ 법정 시험·검사기관 지원 -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- 장비 및 시설의 신속 보강 -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 협업관계 유지	○ 제도 운영에 따른 법령 등 개정 - 검사인력 의무교육 이수시점 개선 - 검사기관 평가방식 개선 - 위생용품 검사기관 지정요건 신설 ○ 법정 시험·검사기관 지원 - 국제공인실험실 8항목 인정 * 벤조피렌, 타다니필, 시부트라민 등 - 살충제 검사용 LC/MSMS 상반기 도입 -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전처리장비 긴급 도입 -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도입 지원 -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 개최(12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민간 시험·검사기관 활성화 - 정책설명회 및 대표자 간담회 - 시험·검사 인력 교육 - 할랄산업 육성을 위한 5개 검사기관 할랄 랩 인정 기술 컨설팅 사업 지원(~5월)	○ 민간 시험·검사기관 활성화 - 정책설명회 1회 및 대표자 간담회 4회 - 시험·검사인력 윤리 교육 제작 등 - 5개 민간기관 대상 할랄 랩 인정 지원 위탁사업(~5월)으로 인프라 구축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제도 운영에 따른 법령 등 개정 건수(건)	4	4
○ 시험장비 고장으로 인한 평균 불가동 시간	52시간 이하	51시간

3. 성과 및 한계

- 시험·검사능력 선진화 단계 진입을 위한 시험·검사 인프라 구축
 - 시험·검사의 신뢰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
 - 시험장비 신속 도입 및 효율적 운영관리로 중단없는 시험·검사 지원
 -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으로 발견된 결함에 대한 당해연도 즉각적인 시설 개·보수 완료
 - 시험·검사기관 공신력 확보 및 민간기관 선도를 위한 국가표준 실험실 구축

4. 향후 추진계획

- 국가표준실험실 구축을 위한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필요
 - 품질관리기준 담당자의 국제기구 훈련 참여 등 기회 제공

2-4-1	국제적 수준의 시험·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
②	시험 검사기관 사후관리 및 지원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와 박좌행 연구관 T.043-719-1821

1. 과제내용

- ☐ 시험·검사기관 시험·검사능력(숙련도 및 품질관리기준) 평가 강화
- ☐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 대한 지도·점검 체계 선진화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시험·검사기관 검사능력평가 강화 - 품질관리기준 평가 확대 - 숙련도 평가 강화 ○ 민간 검사기관 지도·점검 선진화 - 전년도 품질관리기준 평가에 따른 차등 점검제 시범 실시 - 지도점검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실시	○ 시험·검사기관 검사능력평가 강화 - 품질관리기준 평가 전 기관 확대 * ('16년)48개소→('17년)116개소 - 국내외 213개 기관 대상 23항목에 대한 숙련도 평가 실시(6, 9월) ○ 민간 검사기관 지도·점검 선진화 - 전년도 품질관리기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기관 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및 행정력 낭비 감소 - 검사기관 관리지침(3월), 지도점검 매뉴얼(12월) 등 발간 - 전문평가관 교육(3, 9월), 워크숍(2, 7월) 등 실시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개선율(%)	65	73

3. 성과 및 한계

□ 시험·검사 신뢰도 및 분석역량 제고

- 시험·검사기관 지도·점검자 전문성, 눈높이 표준화
 - 지도·점검 매뉴얼, 검사기관 관리지침 등 제작·배포
 - 시험·검사 평가관 교육(2회, 38명) 및 역량강화 워크숍(2회, 49명) 등
- 검사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'시험·검사능력 평가' 실시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시험·검사기관 지도·점검 관점의 다양화 필요

- 지도·점검 관점의 다양화를 위하여 KOLAS 평가사, 지방청 검사인력, 관련분야 전문가, 소비자 단체 등 참여 확대

2-4-2	국제적 수준의 시험·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
①	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이강봉 연구관 T.043-719-2020
 식품기준과 박종석 연구관 T.043-719-2415
 식품위해평가과 황명실 연구관 T.043-719-4503

1. 과제내용

-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의 총회 등 20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의제에 대한 국제동향 사전 검토 및 국가 대응 방안 마련
 - 국가 간 식품안전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당국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CODEX 국제식품규격 설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대응 - 식품 관련 국제 기준 설정에 우리나라의 기준(입장)이 반영되도록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대응 ○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- ‘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’ 의장국으로 선임되어,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○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지속	○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 및 분과위원회 참석(11회) - 식품 관련 국제기준에 우리 기준(입장)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○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제5차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개최(11~12월) ○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지속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한·중 식품 관련 협의체 운영 - 아시아 개도국 대상 식품안전교육 - 제외국 정부와 식품안전협력 약정 확대 - 위해평가 분야 기술교류를 위한 4개국 간 국제심포지엄 공동개최 ('17.11.)	- 제8차 한·중 식품기준전문가 협의회 개최(11월) 및 중국 수출입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글로벌 연수사업 실시(7월) - 아시아개도국 식품위생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사업 실시(11월) - 한·홍콩, 한·태국 식품분야 협력 회의 개최(7월) - 한·태국 식품분야 협력회의 개최(7월) - 한국-독일-프랑스 위해평가 국제 공동심포지엄(독일, 11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회의 및 훈련 개최 횟수(회)	5	5

3. 성과 및 한계

☐ (성과) 국가 간 협력 증진 및 인적 네트워크 지속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

- 양 국 식품 관련 회의(3건), 아시아 국가 대상 식품위생 관련 연수(2건), 국제공동심포지엄(1건)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확대

☐ (한계) 국제협력 구축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 필요

- 양국 간 상이한 식품안전 체계 등 이해를 통한 식품안전 교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체계적인 노력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CODEX 등 국제회의 참석 및 국가위상 강화를 통한 국제협력 교류 기반 마련
 - 식품안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CODEX 등 국제회의 참석, 위해 평가 분야 교류 활성화 및 MOU 확대
 - 제9차 한·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 개최 시 국제규격,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비관세 장벽 지속 해결 추진('18.5 예정)

2-4-2	국제적 수준의 시험·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
②	한아세안 위생협력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이문홍 주무관 T.043-719-3208

1. 과제내용

- ☐ 아세안 식품 안전관리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농축수산물안전 관리시스템의 우수성 소개 및 개도국 전파

* 한-ASEAN FTA협정 발효('07.6)에 따른 경제협력 일환으로 '08년부터 축산물 위생분야 협력사업 실시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'17년 아시아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현지훈련 개최 계획 수립 - 개최일정, 프로그램 등 계획 수립 및 위탁사업 공고(3월) - 초청 대상 국가 서한 발송 및 참가자 추천 요청 등 ○ '17년 아시아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현지훈련 개최(8월)	○ '17년 한-아세안 위생협력 사업 추진계획 보고(3월) - 초청대상, 분야별 현장방문프로그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업 공고(3월) - 외교부(재외공관)에 12개국 초청 대상자 추천 요청(4월) ○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(6월, 10개국 26명 참석) -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정책 방향 등 설명 - 농축수산물 제조·유통 현장방문 - 참가국별 식품위생관리 체계 소개 및 위생관리 이슈 등 토론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식품교역 상대국인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유도 및 수출기반 강화
 - 우수 농축수산물 위생시설 및 위생관리체계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관리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 기회로 활용
 - 농축수산물 제조·유통 현장 방문 및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식품위생관리체계 교육 및 발전 경험 공유
 - 개발도상국 위생관리 체계 및 실태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수출희망업체와 공유, 식품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에 기여

4. 향후 추진계획

- 국제협력 체계 강화 및 농축수산물안전관리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한-아세안 위생협력 사업 지속적 추진

2-4-3	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
①	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손영욱 연구관 T.043-719-2020

현지실시과 오은숙 사무관 T.043-719-6208

1. 과제내용

- ☐ FTA 확대에 의한 무역자유화로 관세는 낮아지는 반면 위생기준, 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져 식품수출의 장애요인 발생
 - 식품기준의 부조화, 통관절차의 상이함 등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 증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
 -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수출국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실사 강화 등 해외시설에 대한 실사 확대에 국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 필요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출국 기준·규격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(연중) ○ 수출 품목에 대한 사전 위생·시설 점검 지원 및 외국 정부의 현지 실사 시 맞춤형 지원(연중) - 수출업체 등록·사후관리를 위한 상대국의 현지실사 대응 및 사전 지도	○ 수출국 기준·규격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(76건) - 수출국 정책, 할랄식품 인증 등 관련 정보 제공 ○ 수출상대국 현지실사 대응 - 캐나다 식품검사청 현지실사 대응 (6월, 식품제조업체 8개소) - 중국 수출유제품 및 삼계탕 관련 현지실사 대응(6월) * 점검 대상업체 : 유업체(4), 삼계탕가공 공장(8), 도계장(3)

○ 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·제공 및 현지소통 강화 - 국가별 품목별 최신 수출가이드라인 마련·제공 및 정비 - 수출 간담회 및 설명회 실시 ○ 축산물 수출 국가·품목 확대를 위한 상대국 수입위생평가 적극 대응 ○ 신규 수출업체(품목)의 수출국 정부 등록지원 및 위생관리 지원 (연중)	- 미국 수출삼계탕 관련 현지실사 대응(9월) * 점검 대상업체 : 가공장(5), 도계장(3), 식약처, 검역본부, 동물위생시험소 등 ○ 중국 및 미국 현지실사 관련 수출 간담회(2회) 및 중국·미국 현지실사 관련 사전점검 추진 ○ 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·제공 및 현지소통 강화 - 중국·싱가포르·일본 삼계탕 수출 위생요건 공개(1월, 홈페이지) 및 수출간담회 실시 ○ 축산물 수출 관련 상대국 수입 위생평가 적극 대응 - 말레이시아 쇠고기(4월), EU 삼계탕(7월), 태국 쇠고기(9월) 수출위생 설문서 제출 - 대중국 수출 벌꿀 및 로열젤리 안전 위생관리체계 설문서 제출(9월) ○ 인도네시아 유제품 수출을 위한 업체 정보제공 및 작업장 등록 자료 제출(9월)
--	--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수출정보 제공 건수	70	76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(성과) 식약처 홈페이지 '수출식품지원정보방'을 통하여 수출 지원 관련 정보 제공

- 수출국 정책변화 52건, 할랄식품 정보 15건, 축산물 수출 관련 정보 9건 등 총 76건 제공(식약처 홈페이지 '수출식품지원정보방')
- 중국 수출유제품 및 삼계탕 관련 현지실사 대응을 통한 유가공업체(4개소), 삼계탕작업장(8개소) 등록 완료
- (한계) 수출국 식품정책 및 기준·규격 정보 관련 적시 제공 어려움
 - 수출국의 식품정책 및 기준·규격 등이 시시각각 변하므로,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필요
 - 다양한 수출품목과 상대국 위생정보 분석을 위한 수출식품 전담 인력 보강 및 전문교육 지원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식품수출업체의 식품수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
 - 현지 사정에 밝은 식품수출 현장 전문가를 통해 식품수출 관련 필요 정보를 수집하고, 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
- 수출 담당공무원 및 수출업체 교육 등을 통한 수출 역량 제고
 - 지방청 수출 담당 및 수출삼계탕 정밀검사 지자체 담당자 교육(2회)

3

상시 안전관리 강화

3-1 생산·제조단계 안전관리

3-1-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

①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

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서금현 사무관 T.054-429-4132

1. 과제내용

- ☐ 생산단계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* 안전성 조사로 부적합품 농산물의 유통 사전 차단

* 잔류농약(320성분 이상), 중금속(Pb, Cd, As), 곰팡이독소(아플라톡신 등 8종)

- ☐ 중금속 등 오염우려지역 농경지 조사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생산단계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(39,950건) 시행(1~12월) - 부적합 다발 품목 및 취약분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등 8,200건 조사 - 수출·인증·쌀직불제·로컬푸드, 학교급식, 폐광산 지역 농산물 등 정책지원 사업에 대한 유해물질 31,750건 조사	○ 생산단계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(38,960건 조사, 부적합 851건, 부적합률 2.18%) 시행(1~12월) - 부적합 다발 품목 및 취약분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등 13,305건 조사(부적합 651건, 부적합률 4.9%) - 수출·인증·쌀직불제·로컬푸드, 학교급식, 폐광산 지역 농산물 등 정책지원 사업에 대한 유해물질 25,655건 조사(부적합 200건, 부적합률 0.8%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생산단계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율(%)	1.82	2.18

3. 성과 및 한계

☐ 성과

- 생산단계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율(%)이 목표를 달성
 - * 부적합 다발 품목 및 취약분야에 대한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가 상대적으로 부적합률이 낮은 수출·인증·쌀직불제 등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대비 추진실적이 높음

☐ 한계

- 정책지원사업(인증사후관리)은 현장여건 및 국민요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진계획 대비 모자람
 - * 특히, 2017년 인증 사후관리목적으로 계란 잔류농약검사 등은 농산물에서 축산물 및 축산물 생산기반을 대상으로 변경하여 조사 실시
-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PLS 제도* 시행에 따라 미등록 농약 사용 시 부적합률 상승
 - *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은 0.01mg/kg으로 일괄 적용하여 관리(Positive List system, 식약처)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(개선 대책) 부적합 발생 재배 작물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설정 요청(식약처, 농진청)

- 주요 부적합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 및 농업인 교육·홍보 등 집중 관리로 부적합률 개선에 노력

☐ (향후 계획)

- '18년 생산단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(계속)

3-1-1	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
②	농산물 재배환경 안전관리

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손병철 사무관 T.054-429-4135

1. 과제내용

- ☐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과 재배환경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기반 구축
- ☐ 안전관리 위해평가 등 객관적인 통계, 지표 활용을 위한 모니터링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농산물 및 재배환경 유해물질 잔류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·실시(2~12월) - 유통·판매단계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등 10,373건 잔류실태조사 - 농지·용수·자재·농산물에 대해 항생물질, 병원성 미생물, 방사능, 유기오염물질, 방사선 등 유해물질 3,200건 잔류실태조사	○ 농산물 및 재배환경 유해물질 잔류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·실시(2~12월) - 유통·판매단계 농산물 유해물질 10,429건 조사(계획 10,373건 대비 100.5%) * 쌀, 배 등 '17년 미조사 품목(17개)은 유통단계 조사 결과를 활용 - 농지·용수·자재·농산물에 대해 항생물질, 병원성 미생물, 방사능, 유기오염물질, 방사선 등 유해물질 3,235건 조사(계획 3,200건 대비 101%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국가잔류조사 안전성 부적합률(%)	1.45	1.07

* 성과지표 설명: 합리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생산량은 적으나,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의 영향을 고려하여 품목별 생산량 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적합률 산정

3. 성과 및 한계

☐ 성과

- 국내 품목별 생산량 고려 부적합률 감소*로 농산물 안전성 향상

* 생산량 고려 부적합률 : ('16) 1.45% → ('17) 1.07

☐ 한계

- 농산물 중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는 양호하나, 잔류농약 중 엽채류 등 일부 소면적 작물의 부적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(개선 대책) 부적합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기준설정 요청 및 주요 부적합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 등 집중관리로 부적합률 개선에 노력

- ☐ (향후 계획) '18년 유통단계 농산물, 농산물 및 재배환경 유해물질 잔류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(계속)

3-1-1	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
③	국내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

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서금현 사무관 T.054-429-4132

1. 과제내용

☐ 국내 농산물 안전성 조사

- 국내 농산물 방사능 오염실태 파악을 위해 지방방사능측정소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 대한 조사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계획 수립(1월) - 조사물량 : 500건(노지 채소류 위주 * '12년 이후 방사능물질 검출사례가 없어 '16년부터는 일본 원전사고 이전 수준으로 모니터링, 다만, 여건변화 시에는 물량 확대 계획 - 조사지역 : 국가환경방사능자동 감시망 (자동방사능측정소 15개소, 원전 주변 4개소) 설치 인근 들녘	○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계획 수립(1월) - 조사물량 : 503건(계획 대비 100.6%) - 조사지역 : 국가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(자동방사능측정소 15개소, 원전 주변 4개소) 설치 인근 들녘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방사능조사 실적(건)	500	503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(성과) 국내 생산되는 농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조사 503건 모두 불검출 수준으로 국내농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확보
- ☐ (한계)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은 양호하나, 일본원전사고 이후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(개선 대책) 관계기관 및 우리원 안전성조사 관련 소비자교육에 국내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을 추가하여 교육 실시(요구)
- ☐ (향후 계획) '18년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(계속)

3-1-1	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
④	가축사육환경 개선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사무관 T.044-201-2336

1. 과제내용

- ☐ 한·미 FTA, 영연방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
 -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후화된 축사 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 및 시도별 자금배정, 집행(연중) - 축종별, 시도별 축사 신·개축, 시설개선 등 사업 추진(1~12월) ○ 사업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 추진(3~11월) - 축사표준설계도 개발, 의무사항 준수여부 점검, 사업대상자 현황 조사, 농가만족도 조사 등 실시 ○ '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 지침 개정 추진(12월)	○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- 지원: 154,899백만원, 609농가 ○ 사업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 - 축사표준설계도 개발·보급* * 한우(2종), 젃소(4종) - 사업대상자 현황조사, 농가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(농협, 연중) - 지자체 대상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워크숍 실시(8월) ○ '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 지침 개정('18.1월) * 지원대상, 지원조건 변경사항 등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지원농가 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(두)	18.1	18.7

3. 성과 및 한계

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

○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선정 : 609농가

* 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(두) : ('16) 18.3 → ('17) 18.7

☐ 지원 사업으로 축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 주요 축산환경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사육밀도 개선 등 동물복지형 축산을 위한 축산법령 개정(12월)

* (사례) 산란계 사육밀도 : (현행) 0.05㎡/두 → (개선) 0.075

○ 축산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사업 지침을 개정

3-1-1	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
⑤	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이동식 서기관 T. 044-201-2526

1. 과제내용

- ☐ 생산단계 축산물(식육·식용란)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로 국내 축산물 안전성 제고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식육 잔류물질 : 120천건 검사	○ 식육 잔류물질 : 149천건
○ 식용란 잔류물질 : 6,149건 검사	○ 식용란 잔류물질 : 8천건
○ 미생물 : 식육·식용란 105천건 검사	○ 미생물 : 식육·식용란 119천건 (탐색조사 4천건 포함)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축산물 부적합지수(%)	0.10	0.12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문제*가 없었으나,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식용란 위생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

* 축산물 부적합지수(%) : ('16) 0.13 → ('17) 0.12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산란계 농장의 계란* 및 산란노계에 대한 살충제 검사 강화 추진

* 연간 1회 이상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살충제 검사 추진

3-1-1	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
⑥	오염우려지역 농산물 등 안전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변성근 사무관 T.043-719-3244

1. 과제내용

- ☐ 폐금속광산, 가축매몰지 인근 오염우려 지역에서 생산되는 위해 농산물 유통·판매 사전차단
 - 부적합 위해 농산물 출하연기 및 폐기 등 조치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오염우려지역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및 실태조사(10,600건) - 오염 우려지역 농산물 및 농경지 중금속 조사 - 가축매몰지의 병원성 미생물 조사 -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조사 - 곰팡이독소 안전성조사 - 수확 후 농산물 이산화황 실태조사 - 유기오염물질(다이옥신) 실태조사 -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	○ 오염우려지역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및 실태조사(10,966건) - 오염 우려지역 농산물 및 농경지 중금속 조사(9,401건) - 가축매몰지 농산물 병원성 미생물 조사(100건) - 국내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조사(503건) - 곰팡이독소 안전성조사(757건) - 수확 후 농산물 이산화황 조사(101건) - 유기오염물질(다이옥신) 실태조사(50건) -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(54건)
○ 부적합 빈발 및 안전관리 취약 농산물 안전성 조사(64,900건)	○ 부적합 빈발 품목(부추, 취나물 등 100품목) 및 안전관리 취약 농산물 등 안전성 조사(71,362건) -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, 폐기 등 조치(1,535건)

☐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☐ 휴·폐광산, 가축매몰지 등 오염우려지역 농산물 및 재배환경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통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공항, 고속도로, 저수지 등 오염우려지역의 조사범위 확대를 통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

3-1-1	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
⑦	축산물 유통 전(前)단계 안전성 검사 지속 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이영희 사무관 T.043-719-3259

1. 과제내용

- ☐ 축산물의 생산·유통단계에서 위해를 사전 차단하여 축산물의 위생·안전성을 확보, 소비자 신뢰 향상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
 - 연간 국내 축산물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·시행
 - 축산물 안전성 검사방향 설정 및 결과 분석·평가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'17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(1월) - '16년 검사실적 분석 실시 * 계획건수 : 319천건 ○ 축산물 안전성 검사 조사·검사 협력을 위한 시도 워크숍(12월) ○ 축산물 안전성검사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운영(반기 1회)	○ '17년 생산·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 및 통보(1.9, 지방청, 농식품부, 지자체) - 전년도 부적합 등을 반영하여 규제검사 비율 상향('16년 29,000건 → '17년 29,370건) * 검사건수 : 387천건(부적합 2,301건) ○ '17년 축산물안전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(11.29~30) ○ 축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(3회, 5·11·12월) * 관계부처 : 농림축산식품부, 농림축산검역본부, 지자체, 협회, 단체 등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축산물 위해요소에 대해 생산 및 유통 2단계 안전성검사로 부정 축산물 유통 차단
 - 검출 또는 잔류위반 빈도가 높거나 위해도 우려 물질에 대한 유통 단계 검사 강화
 - * 도축장·집유장 식육 등에 대해 미생물(식중독균 등)과 잔류물질 검사 (387천건) 실시
 - * 식육·식용란·축산물가공품 잔류물질 검사항목 확대(동물용의약품 68종, 농약 33종)
- ☐ 관계 부처간 정보공유가 일부 원활하지 않아 부적합제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문제 원인 파악과 해결에 어려움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생산단계 정보 실시간 공유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
 - 위해정보 입수 또는 위해사고 발생 시, 관계부처간 사전 충분한 정보공유 및 협의를 거쳐 생산·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효율성 증대

3-1-2	수산물 안전관리 강화
①	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.044-200-5622

1. 과제내용

- 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·공급
- 생산·저장·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통한 불량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
 - 수산식품 안전관리 여건 등 환경변화에 효율적·적극적인 대응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 수립('17.1) - 다소비 품종, 부적합 이력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(11,900건 → 12,500) -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(원양산 포함) 방사능 모니터링 지속 실시 -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수립 -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업무 협의	○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 수립('17.1.10) - 다소비 품종, 부적합 이력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강화 * 조사실적 : 총 13,776건, 부적합 121건 * 진주담치·굴·바지락 등 1,859건 검사 결과 진주담치 70건 부적합(출하연기) - 연근해·원양산 등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속 강화 * ('17년) 60개 품종 2,333건 적합 - 여름철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 * 전국 41시·도 50개소 위·공판장 수산물 콜레라균 등 검사결과 62건 모두 적합 -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업무 협의('17.11.23, 수품원 각 지원, 지자체 등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산물 안전기준 적합률(%)	98.45	99.1

3. 성과 및 한계

□ 성과

-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지속 강화
 - 다소비·부적합 이력 품종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불량 수산물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
 - * 총 건수/부적합건수 : ('16) 13,268건/139건 → ('17) 13,776건/12건
- 오염우려 생산해역(지역) 수산물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 불안감 해소
 - 전남 진도 유류 유출 관련 양식장 안전성 조사, 전국 주요 하천·호소 등 퇴적물 오염 및 안동댐 상류 오염 등 환경오염 사고 대응
- 안전관리 검사 현장 소비자 참관행사를 개최하고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보
 - *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(매월, 12회), 방사능 결과(주2회, 94회) 홈페이지 게시
- 관내 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분석 장비 구축 예산 확보('18년)

□ 한계

- 안전성조사 추진시, 시시각각 변하는 생산 현장정보에 대한 조사 요구 반영 미흡* 및 항생물질 등 부적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양식어가에 대한 안전성조사 부족
 - * 조사기관으로 조사물량을 배정하는 계획수립으로 현장여건 반영 부족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'18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('17.2)

○ 다소비·부적합 이력 품종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(연중)

* 부적합 품목, 원인물질 등의 현장요구를 반영하여 특별조사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실시

☐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(5월)

☐ 지자체 안전성조사 기관 분석장비 구축 추진상황 실태점검(7월)

☐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업무 협의회(12월)

3-1-2	수산물 안전관리 강화
②	수산물 생산해역 안전관리 강화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구본찬 사무관 T.044-200-5618

1. 과제내용

- ☐ 어장에서부터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
-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안전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육·해상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및 지정해역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조성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패류 생산해역 위생실태 조사 (71개소) - 위생조사 수행기관 선정('17.2) - 위생조사사업 추진상황점검('17.9) - 위생조사 결과 보고('17.12)	○ 패류 생산해역 위생실태 조사 - 위생조사 수행기관 선정 및 연구용역 체결('17.3) - 연구용역사업 중간 점검('17.9) - 패류 생산해역(지정해역 7, 지정 후보해역 4) 위생조사 완료('17.12) * 패류 생산해역 60개 해역은 외부 연구용역기관에서 실시되며, 용역기간('17.3 ~ '18.2) 미도래로 '18.2에 조사 완료됨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국내 패류 생산해역 위생·오염원 관리 강화에 따른 수출 환경 유지
 - 미국 및 EU 등 위생관리 요건 충족을 통한 패류제품 수출 가능
- ☐ 패류 생산해역의 육·해상 오염원 조사 미흡
 - 육상 또는 해상 기인 오염원이 생산해역으로 지속 유입됨으로써 생산해역 위생관리 어려움 상존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패류 생산해역 위생실태 조사
 -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수행 대학교 선정 추진('18.3)
 - 패류 생산해역 육·해상 오염원 조사('18.3~'19.2)
 -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사업추진 상황 점검('18.9)
 -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결과 보고('19. 2)

3-1-2	수산물 안전관리 강화
③	국내 생산 천일염 안전관리 강화

해수부 유통정책과 안치국 서기관 T.044-200-5449

1. 과제내용

- ☐ 천일염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, 토양 등의 위해요소 차단
 - 천일염 생산해역조사 등을 통하여 국내 천일염 식품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
- ☐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위생적·효율적 생산체계 구축
 - 낙후된 염전시설을 식품위생기준에 걸맞은 소재로 교체, 고품질 천일염 생산 기반 마련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사업계획수립(1월) ○ 품질관리, 소비촉진 사업자 선정(2월) 및 보조금교부(3월) ○ 안전성조사실시(3~12월)	○ 사업계획수립('17.1) ○ 품질관리, 소비촉진 사업자 선정(2월) 및 보조금교부(3월) - 경기, 충남, 전북, 전남 등 5개 시도에 천일염산업육성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5,703백만원 교부 ○ 안전성조사실시(3~12월) - 국내 10개 해역, 22개 염전 대상 바닷물, 토양, 기구자재의 안전성에 대해 연 4회 조사 실시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보조사업 현장점검('17.上)	○ 보조사업 현장점검('17.5, 10) * 전남도 천일염산업육성 지자체 보조사업 현장 점검(2회)
○ 품질관리, 소비촉진 사업 중간(7월), 최종보고회(12월)	○ 품질관리, 소비촉진 사업 중간(7월), 최종보고회(12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소금 수출 실적(천불)	4,761	9,344

3. 성과 및 한계

☐ 천일염 위생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천일염 생산자 대상 생산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한 천일염 공급기반 구축

- '17년 10개 해역, 88개 염전 대상 천일염 및 생산 환경(바닷물, 기구·자재 등)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관련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

☐ 천일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 필요

- 국제기준에 적합한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·가공·유통이 가능한 시설 확보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

- 천일염 생산·가공·유통 기능을 연계한 종합유통센터 건립(전남도 신안군)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('18~'20)

3-1-2	수산물 안전관리 강화
④	수산물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 강화
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양정규 사무관 T.044-200-5443

1. 과제내용

- ☐ 위판장 시설현대화 등 위생시설 기반 확충 및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산지 수산물유통시설 위생관리 수준 제고
 - 위판장 시설개선 및 신축, 위생관리형 위판장 전환, 신규 FPC 건립 등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속 추진
 - 산지 유통시설 위생관리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·반영하여 위해 인자, 관리자와 작업자의 의무 등 위판장 위생가이드라인 마련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위생시설 등이 포함된 산지 위판장 시설의 세부 기준 시행	○ 위판장 세부 시설기준 고시 제정 ('17.4)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산지 위판장 시설의 세부기준 시행	고시제정	완료('17.4)

3. 성과 및 한계

- 경매장, 냉장·냉동시설 등 신규 건립되는 위판장시설의 세부기준 마련('17.4)으로 산지 수산물유통시설 위생관리 수준 제고
 - 다만, 전체 위판장의 30%를 차지하는 노후 위판장의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시설현대화 지원계획 수립 필요성 대두

4. 향후 추진계획

-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고시 제정 및 시설현대화 지원계획 수립('18)

3-1-2	수산물 안전관리 강화
⑤	수산물 안전성 조사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고경희 주무관 T.043-719-3253

1. 과제내용

- 국내 생산·유통되는 오염우려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강화로 유해 수산물의 유통 판매 사전 차단
 - 오염우려 해역에서 생산·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
 - 부적합 빈발 등 특별관리 및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오염우려 해역에서 생산·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- 봄철 패류독소 안전관리(3~6월) -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(콜레라, 패혈증, 장염) 안전관리(5~10월) - 겨울철 굴 노로바이러스 등 안전관리(11~12월) - 수산물 생산·유통업체 위생관리 지도·점검 및 교육·홍보	○ 진주담치, 바지락 등 2,314건(생산 1,281건, 유통 1,033건) 패류독소 검사, 부적합 70건*(3~6월) * 생산해역 채취금지, 출하제한 조치 - 생산해역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공개(28회) ○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 및 어장 환경(해수 등)에 대한 비브리오균 3종, 중금속 등 1,566건(생산 236건, 유통 1,330건) 검사, 부적합 18건*(4~10월) * 해당 제품 폐기 및 검사 강화 조치 ○ 전국 83개 항·포구 횃집 현장신속 검사 등 특별관리(6~8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부적합 빈발 등 특별관리 대상 및 위생관리 취약 수산물 안전관리	- 횃집 등 702개소 점검(모두 적합), 현장신속검사 594건(유전자검출 7건) * 생산단계 검사 강화 및 수산물 확인 검사(부적합 수산물 1건 폐기 등 조치) ○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단계 수산물 위해요소 안전관리 강화(7월~) - 해양환경인자(수온, 염분 등)를 활용, 비브리오패혈증 예측시스템 구축· 예보 ○ 생식용 굴, 김 등 겨울철 수산물 노로바이러스, 대장균 등 345건 검사(부적합 없음) ○ 수산물 생산·유통업체 위생관리 1,649개소 점검, 부적합 5건 * 보도자료 및 언론홍보 5회, 홍보물 20,000개 배포 ○ 부적합 빈발 등 특별관리 대상 (넙치, 뱀장어 등 16품목) 3,589건, 다소비 수산물 2,131건 등에 대한 패류독소, 항생물질, 중금속 등 검사, 부적합 192건(출하제한, 폐기 등 조치)

□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(성과) 비브리오패혈증 예측시스템을 통한 수산물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하고, 오염우려 수산물 집중 관리로 유해 수산물 유통 차단

구분	계획	실적(건)	부적합
계	25,000	26,814	258(1.0%)
○ 생산단계 안전성조사	12,000	13,776	192(1.4%)
○ 유통단계 수거검사	13,000	13,038	68(0.5%)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해수부와 협업으로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속 추진
- ☐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

3-1-3	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·점검 강화
①	위생취약분야 선제적 지도·점검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박동희 사무관 T.043-719-2054

농축수산물안전과 이영희 사무관 T.043-719-3259

1. 과제내용

- ☐ 선택과 집중으로 식품안전 지도·점검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추진
 - 소비자 체감도가 큰 분야(다중이용시설, 위생취약분야) 집중 위생관리
 -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지도·점검의 효율화 도모
- ☐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축산물 안전관리 도모
 - 축산물가공업 생산·유통량 상위업체 집중관리('15년 생산실적 대비)
 - 식육포장처리업 집중관리로 식육 유통안전 강화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시기별, 대상별 위생관리를 위한 선제적 지도·점검 - 특정시기 다소비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전국 합동 단속(5회)	○ 특정시기 다소비 식품취급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(5회) - 설·추석, 여름 휴가철, 발렌타인 데이, 김장철 성수식품 등 * 23,739개소 점검, 906개소 적발 - 중앙-지방정부 간 효율적 감시 및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 개최(3회) - 어린이날 대비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등 점검(2회) * 32,710개소 점검, 38개소 적발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자가품질검사 및 수출부적합 제품 관리 강화 - 부적합 제품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 강화 ○ 고의적·상습적 위반업체 특별관리 - 특별관리업체 지속 지도·점검 ○ 통합망의 '단속대상선별시스템'을 활용한 점검 대상 선별 ○ 축산물가공업 생산·유통량 상위 업체 지도·점검(420개소, 연2회) * '15년 생산실적 상위업소 10% 점검 ○ 식육포장처리업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·점검(연3회) ○ 인터넷 축산물 허위·과대광고 등 중점단속(연2회) ○ 하절기 전국 축산물영업장 특별 점검 및 취약제품 일제수거 실시 (6~7월)	○ 자가품질검사 및 수출부적합 제품 제조업체 점검 및 수거·검사(연중) *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 186개소 점검, 6개소 적발 및 수출 부적합 5개소 점검, 17건 수거검사 실시 ○ 상습·반복 위반업체 특별점검(2회) -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위반 업체 65개소 점검, 20개소 적발 ○ 효율적인 지도·점검을 위한 '단속 대상선별시스템' 시범운영(5회) - 어린이 기호식품, 여름철 기호 식품취급업소 단속 등에 활용 * 총 2,431개소 점검, 200개소 적발 등 '16년도 식품제조·가공업체 적발률 대비 2.4% 상승 ○ 축산물가공업 생산·유통량 상위 업체 지도·점검(376개소 점검, 28건 부적합) ○ 식육포장처리업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지도·점검 - 교육자료 작성 및 배포(2~3월) - 식육포장처리업소 2,130개소 교육 - 3,181개소 점검, 부적합 131건 ○ 인터넷 축산물 허위·과대광고 등 중점단속(2회 59개소, 70건 적발) ○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(아이스크림·햄·소시지 등) 제조·판매업체 점검 (6.7~7.7, 5,715개소 점검, 181건 적발) - 1,703건 수거·검사, 부적합 5건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재위반율(%)	8	5.9

* 재위반율(%) = (재적발업체수/적발업체수) × 100(%)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상습·고의적 위반업소 등 특별관리 대상 업체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수준 향상에 기여
 -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 생산업체, 반복 위반 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공급 체계 마련 필요
- ☐ 축산물가공품 생산량의 80%를 차지하는 생산실적 상위 업체를 집중점검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기여
- ☐ 식육포장처리업 교육 및 지도·점검을 통한 집중관리로 부적합률 감소('14~'16, 평균 부적합률 7.7%→'17. 3.8%)
- ☐ 축산물 유통·가공단계 지속적인 지도·단속을 수행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의 완전 근절은 어려운 바,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접근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통계정보를 활용한 위해우려 업체 관리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점검 실시
 - 위반율이 높은 업체 등 통계적 기반의 기획점검, 국회·언론 등 사회적 이슈의 특별점검, 기본적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
- ☐ 업체의 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하여 단속 필요성이 높은 업체(품목) 위주 집중 점검 실시

3-1-3	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·점검 강화
②	단순가공 농·수산물 관리 체계 구축 및 위생수준 개선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고경희 주무관 T.043-719-3253

1. 과제내용

☐ 위생관리 취약분야 농수산물식품 안전관리 강화

* 껏감 등 농산물가공품, 마른멸치, 마른김, 과메기 등 수산물가공품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단순가공 농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-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안전관리(2월, 11~12월) - 단순처리 수산물(마른김, 과메기 등)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(2월) -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식품제조·가공업 신고 계도(연중)	○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517개소 점검, 위생관리 미흡 52개소 행정지도(2·12월) ○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업체 맞춤형 현장 지도(11월, 2회) ○ 제도권 내 관리를 위한 현안문제 등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(2월) ○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대상 위생교육(9·11월, 3회) ○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(11월) * ‘단순처리(생산자 포함) 농수산물 안전관리 이해’ 2,000부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지도점검 업체수	517	517*

* 폐문 등으로 점검 불가업체 포함

3. 성과 및 한계

☐ 성과

- 위생교육 기회 부여 및 홍보를 통해 생산자 자율 위생관리 능력 제고

☐ 한계

- 영업등록 면제 등으로 생산 및 폐업여부 등 업체현황 파악이 어려워 대상선정 곤란
- 제도권 내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합의 필요
 - 생산관련 부처(농식품부, 해수부)에서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의견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지자체와 협업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(신고) 유도

☐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
3-1-4	제조단계 이물 등 위생관리 강화
①	제조단계 이물 저감화를 위한 업계 지원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김성일 사무관 T.043-719-2052

식품안전관리과 성준현 연구관 T.043-719-2055

1. 과제내용

- ☐ 이물 저감화를 위한 업계지원을 통해 업계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
 - 이물관리 기반을 조성하여 식품 제조·가공업체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이물 저감화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(협의체) 활성화 추진 - 네트워크 확대 운영 및 저감화 교육 실시 ○ 동업자 조합의 자율적 위생관리 지원 및 관리 - 식품위생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	○ 이물 저감화를 위한 네트워크(협의체) 구성·운영(5월) -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식품 영업자 및 공무원 대상 설명회 및 이물 저감화 전문교육 실시(5.15, 191명 참석) * 네트워크 참여업체 수: 176개소 - 식품제조업체 대상 이물저감화 교육 실시(11월) ○ 식품 동업자조합 대상 위생 점검 및 관리요령 등 정보 제공 * 음식점위생등급제 리플릿 및 영업자가이드라인(12월), 프랜차이즈 식품업체 위생관리 매뉴얼(10월), '식품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' (6월), 개방형 주방 음식점 위생관리 매뉴얼(4월) 등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 참여업체 수	160	176

3. 성과 및 한계

□ 네트워크 활동 등 식품업체의 자율적인 이물관리 강화 및 이물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이물혼입 보고(신고) 건수 감소

○ 식품의 다양한 유통경로 및 이물 발견시점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혼입원인 규명에 한계

* 이물 혼입 보고(신고) 건수: ('13) 6,435 → ('15) 6,017 → ('17) 3,239

** 이물 혼입원인 규명률(%): ('13) 35.6 → ('15) 53.8 → ('17) 31.6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지속적인 이물저감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식품업체의 자율적인 이물관리 역량 강화 추진

○ 이물 관리 우수업체 노하우 등 교육·홍보를 통해 벤치마킹 기회 제공

3-1-5	농약 안전 관리 강화
①	부정·불량 농약에 대한 유통단속 및 교육강화

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김효경 사무관 T. 063-238-0830

1. 과제내용

☐ 부정·불량 농약 유통점점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피해 예방

- 부정·불량 농약 단속 및 교육 강화로 농업인과 소비자 피해 예방 확대
 - * 법적 근거: 농약관리법 제24조, 동법 시행규칙 제27조(유통농약의 검사계획 수립, 품질 검사 수행)
- 농약의 안전사용 교육을 통한 농약의 오·남용 방지 효과 제고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양질의 농약 공급을 위한 유통농약 품질검사 320점 - 검사 내용 : 주성분, 물리성(수화성·분말도·유화성 등) 등 품질 확인 ○ 부정·불량 농약 유통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시 점검 - 점검 내용 : 밀수농약,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, 규정위반 여부 등 ○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올바른 사용유도를 교육·홍보	○ 농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분 검사 : 381점 - 검사 결과 : 371 합격, 4 불합격 * 불합격 사유 : 2 주성분 초과, 2 주성분 미달 ○ '17년도 부정·불량 농약 유통 단속 - 경찰청, 지자체, 명예지도원 합동으로 전국 119시·군 894개 업소 점검 - 점검 결과: 118건 적발 조치 * 부정농약 5, 불량 농약 50, 기타 법규 위반 53 ○ 농약 오·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 사용 교육 및 홍보 - 농업인 등 235,908명 교육 - 언론보도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* 보도자료(39건), 모바일 밴드, 리플릿 등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농약의 품질검사 (건수)	320	381

3. 성과 및 한계

□ 성과

- 명예지도원, 지자체 공무원, 유관기관(경찰청, 관세청) 공조체계를 통한 민관협업·협치 단속 강화로 부정·불량 농약의 유통 감소 및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
 - * 연도별 부정·불량 농약 적발건수: ('15) 148 → ('16) 128 → ('17) 116
- 농업인, 판매업자, 관련공무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은 물론, 밀수농약 사용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발적 준수 유도
 - * 언론보도(39건), 리플릿(2만부), 현수막(80개), 밀수근절 홍보물 설치(여객항 5개소), 모바일 밴드(배농가 회원 1,040명) 등 과수농가 대상 중점 홍보

□ 한계

-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·지도를 수행하고 있으나 밀수농약 등 불법 농자재의 유통근절에 어려움이 있음
 - * 점검대상 농약 판매업소: 5,584개
- 밀수농약은 은밀한 거래 등 점조직으로 유통되어 적발에 한계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근절 위한 유통점검 강화

- 유통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및 명예지도원을 활용하여 판매업소 전수점검 실시
 - * (현행) 일부 판매업소(900여개) → (개선) 전체 판매업소(5,584)
- 밀수농약 등 유통근절을 위한 교육·홍보 추진

3-1-5	농약 안전 관리 강화
②	농약직권등록 및 직권그룹화 적용방안

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중서기관 T. 063-238-0824

1. 과제내용

- ☐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 등록
 -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면적작물의 농약등록 확대
 - 농약의 약효·약해, 작물잔류성, 그룹화 연구 등 시험 연구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농약직권등록 - 2016년 시험결과에 따른 농약 등록: 90적용대상 ○ 2017년 농약직권등록시험 수행 - 약제선정 설계협의회 개최 - 약효·약해시험, 작물잔류시험 ○ 시험결과 선발된 농약에 대한 직권 등록('18)	○ 농약직권등록 - 63작물 111품목 200적용대상 ○ 2017년도 농약직권등록시험 수행 - 설계협의회 (2.25~26) - 시험 추진 (2~12월) - 중간진도관리 평가 (8.30) - 2017년 농약직권등록사업(약효·약해) 결과 평가 (10.25) - 2017년 농약직권등록사업(작물잔류) 결과 평가 (11.30) ○ 제도개선: 그룹등록제도 확대 ('17.12 고시) * 그룹등록 확대: 업체류 중심 ⇒ 모든 작물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농약 직권등록(적용대상)	100	200

3. 성과 및 한계

□ 성과

- (직권등록)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 등록 확대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
 - 소면적 작물용 농약 등록: 63작물 111품목 200적용대상
 - * 직권등록 실적(누계): ('16) 89작물 261품목 942적용대상 → ('17) 101/314/1,223
- (제도 개선)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등록 확대를 위하여 작물군별 대표작물로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
 - 그룹등록 확대 : 엽채류 중심 → 모든 작물('17.12 고시)
 - * (그룹등록제도) 작물별 등록 → 대표작물로 시험 후 해당그룹 모든작물 등록

□ 한계

- 농산물 중 잔류농약 기준 강화(PLS '19년 전면시행, 식약처)에 따라 소면적 작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의 대폭 확대가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소면적 작물용 농약 등록 확대

-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등록 확대를 위한 직권시험 지속 추진
- 대표작물로 시험할 수 있는 작물군을 확대

3-1-5	농약 안전 관리 강화
③	농약 위해성 재평가

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중서기관 T. 063-238-0824

1. 과제내용

- ☐ 농약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
 - 등록신청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준 설정
 - 유효기간 만료('17) 농약에 대한 위해성 재평가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등록신청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: 500여건/년 -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사용·취급제한 기준 설정 ○ 유효기간 만료('17) 농약 위해성 재평가(104품목) - 평가항목 : 인축독성·생태독성·작물 및 토양잔류성 등 - 평가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및 안전사용·취급제한 등 기준 재설정	○ 등록신청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: 712건 - 등록신청 농약 106건, 변경등록 363건, 재등록신청 농약 130건, 원제 113건 * 안전사용기준 설정 : 572건 * 취급제한기준 설정 : 92건 ○ 농약 안전성 재평가 - 대상농약: 글리포세이트, 다이아지논 - 평가결과: 발암추정 분류 근거가 불명확하며 발암성 및 농작업자의 위해성 낮음 ○ 유효기간 만료('17) 농약에 대한 위해성 재평가(151품목) : 완료 - 평가결과 : 재등록 114품목, 등록말소 37품목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농약 위해성 재평가 건수	104	151

3. 성과 및 한계

☐ 성과

- 신청 농약(712건)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농약 사용자·취급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
 - *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사용기준 572건, 취급제한기준 92품목 설정
- 기존 사용 농약(151품목)의 주기적 재평가 및 국제기구·외국정부 규제농약(글리포세이트, 다이아지논)의 특별재평가를 통해 사용·취급자, 환경생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

☐ 한계

- 해당없음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등록신청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: 계속

3-1-6	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
①	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·유효성 관리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춘선 사무관 T:054-912-0541

1. 과제내용

☐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* 실시

- 최신 과학수준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·유효성을 재검토·평가

* 해당 약품의 효능·효과·용법·주의사항·기준 및 시험방법 등

☐ 신약 재심사* 실시

- 재심사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시판 후 부작용 등 안전성·유효성 재심사

* 신약으로 허가받은 약품에 대한 효능·효과·부작용 등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- 항균제제·생물학적제제 총 330품목	○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- 항균제제·생물학적제제 총 330품목 · 유용성인정 108, 조건부유용성 70, 미인정 51, 자진취하 52, 수출용전환 49
○ 신약 등 재심사 실시 - 화학제제·생물학적제제 등 총 21품목	○ 신약 등 재심사 실시 - 화학제제·생물학적제제 21품목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율*(%)	70	69.4
○ 신약 등 재심사 실시율(%)	100	100

* 재평가 대상 품목 중 자진취하 52품목 및 수출전용 전환 49품목 : 30.6%

3. 성과 및 한계

☐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

- 동물용의약품 330품목에 대한 재평가로 기 허가된 제품의 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허가부표 내용을 최신 문헌 등을 기반으로 통일 조정함

☐ 신약 재심사 실시

- 신약 재심사 대상 21품목에 대해 시판 후 부작용 등 안전성 · 유효성 관리를 강화함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

- 화학제제 및 생물학적제제 : 351품목

☐ 신약 재심사 실시

- 화학제제 및 생물학적제제 : 22품목

3-1-6	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
②	우수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

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정윤구 사무관 T:054-912-0531

1. 과제내용

- ☐ 제조 및 품질관리우수업체(GMP) 사후관리 지속 추진
 - 제조 및 품질관리(GMP)에 대한 점검으로 동물용의약품 품질 향상
- ☐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 실시
 -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·수입 및 품질관리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동물용의약품 생산 및 보급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GMP 사후관리 추진 - 제조업체 24개소 ○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 실시 - 제조·수입업체 230개소	○ GMP 사후관리 추진 - 제조업체 25개소 ○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 실시 - 제조·수입업체 301개소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·수입업체 자율점검율(%)	63	63.4

3. 성과 및 한계

☐ 제조 및 품질관리우수업체(GMP) 사후관리

-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25개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사후관리 점검 실시

☐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 실시

-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·수입업체(약 63.4%)가 사전 예방적 품질 관리를 위해 자율점검을 실시,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·개선하여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공급에 기여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제조 및 품질관리우수업체(GMP) 사후관리 추진

-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약 27개소 예정

☐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 추진

- 동물용의약(외)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체 총 475개소 대상

3-1-6	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
③	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

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방역과 권문경 연구관 T.051-720-3040

1. 과제내용

- 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및 신약 등 재심사 실시
 -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·유효성 재평가, 신약 시판 후 어류에 대한 부작용 등 안전성·유효성 재심사
- 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(수입)업체 실사 및 수거·검정 실시
 -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
- 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 지도 및 관리 체계 구축
 - 출하전 양식어류의 수산용의약품 사용실태 및 식품 안전성 조사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 개정 - 효율적인 수산용의약품 인허가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(수시) 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·재심사 - 수산용의약품 재심사(수시) - 수산용의약품 재평가(8월)	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 개정 - 수산용의약품 관련 행정규칙 제·개정 * 제정 1건, 개정 4건 실시(5건) 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·재심사 - 수산용의약품 재심사 * 수산용 백신 3건 실시 - 수산용의약품 재평가 시행 공고 등 * '18년도 재평가: 3종 23개 제품 실시 * '19년도 재평가 품목 공고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- 수산용의약품 전자민원시스템 및 모바일웹 개선(수시) - 사용기준을 위한 '수산용의약품 안전관리 연구'('17)수행 -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및 수거·검정	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- 수산용의약품 모바일웹 사용법 홍보 리후렛 발간 배포 * 연합뉴스 외 7건 보도 - '수산용의약품 안전관리 연구'('17)수행 완료 -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및 수거·검정 * 수산용의약품 사용 지도·점검: 16개 시·도 양식장 점검(13,964 개소) 및 수산물 안전성 분석(152개소) * 수산용의약품 수거검정: 8개 시·도 및 국립수산물안전원에서 수거한 98건분석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거·검정횟수	95	98

3. 성과 및 한계

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지도 및 점검

- 수산용의약품 안전사용수칙 등 지도점검, 수산물 안전성 조사분석
 - * 수산물 안전성 조사 양식장수 : ('14) 103개소 → ('15) 102개소 → ('16) 555개소 → ('17) 152개소

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수거·검정

- 제조업체 및 수산질병관리원 등에서 제조·판매되는 의약품분석
 - * 수검검정 물량 : ('14) 80점 → ('15) 77점 → ('16) 93점 → ('17) 98점

☐ 수산용의약품 전자민원 시스템 구축

- 수산용의약품 인허가 업무의 신속화 및 투명성 제고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해당없음

3-1-7	사료안전 관리 강화
①	사료 품질·안전 관리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성명 김기홍 사무관 T.044-201-2359

1. 과제내용

- ☐ 사료의 품질·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·검정 실시
- ☐ 완전배합사료(TMR) 업체의 HACCP 지정 확대

2. 추진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사료의 품질·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·검정 확대(연중) - 연간 사료 검사·검정 계획 수립·시달 - 사료 제조·유통단계에서의 검사·검정 실시(연중) - HACCP 지정업체 전체에 대한 정기심사 실시(연중) ○ TMR 업체에 대한 HACCP 지정 확대(연중) - “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” 컨설팅 지원 대상 확대 * TMR 업체 HACCP 지정(누계): ('15) 66 → ('16) 82 → ('17) 95	○ 사료의 품질·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·검정 확대(연중) - 연간 사료 검사·검정 계획 수립·시달(2월) - 사료 제조·유통단계에서의 검사·검정 실시 * (계획) 4,350점 → (실적) 4,312 - HACCP 지정업체 전체에 대한 정기심사 실시 : ('17) 180개소 ○ TMR 업체에 대한 HACCP 지정 확대(연중) - “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” 컨설팅 지원(사료제조업체 10개소* * TMR업체 6, 기타 4 - TMR 업체에 대한 HACCP 지정 확대 : (계획) 95개소 → (실적) 88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TMR 사료공장 HACCP지정(개소)	95	88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사료 검사·검정 실시를 통해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
 - 연간 계획에 따라 제조단계, 유통단계 및 수입단계별 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(4,312점)
 - 그 외 신규 유해물질 검출을 위한 모니터링(400점)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사료 안전성 확보 추진
 - (한계)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비해 규모가 작은 TMR 사료공장에 대한 HACCP 지정 확대 애로
 - “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”을 지원하는 등 TMR 사료공장 HACCP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, 영세업체까지 확대하기까지는 일부 어려움 발생
- * 그 간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을 HACCP 지정을 받음

4. 향후 추진계획

- 사료 검사·검정 지속 추진과 영세한 TMR 업체 HACCP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정 확대로 사료의 품질·안전성 관리 강화

3-1-7	수산사료 안전관리 강화
②	친환경 실용 배합사료 개발 및 품질관리 연구

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사료연구센터 임상구 센터장 T.054-230-3600

1. 과제내용

- ☐ 고품질의 안전한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사료의 등록성분과 안전성 성분에 대한 품질관리 필요
- 「사료관리법」 및 사료검사기준(농식품부 고시)에 따라 분기별 검사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사료 검사·검정계획 수립 - 양어용 배합사료 검정 * 시·도별 검사의뢰 시료의 등록 및 안전성 성분 검정	○ '17년도 양어용 배합사료 검정 계획 수립(2월) - 양어용 배합사료 검정(3~12월) * 시·도별 검사의뢰 시료 165점 808건 검정 완료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사료검정 물량(점)	200	165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'17년도 사료 검정계획에 따라 시·도별 검사의뢰 시료의 등록 및 안전성 성분에 대한 검정 실시
- 검정 계획물량(200점)에 미달한 165점 분석 완료
- * 시·도의 사료 검사의뢰 요청이 저조하여 목표대비 검정실적 부진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연간 사료 검사·검정 계획 수립 및 검사 강화

- 사료의 품질·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·검정 실시
- 사료 검정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시·도 검사의뢰 독려

3-1-8	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
①	수돗물 중 미량 유해물질 관리 강화

환경부 수도정책과 남궁현 사무관, T.044-201-7116

1. 과제내용

- ☐ 인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실시
 - 먹는물 수질기준 및 수질감시항목 지속 확대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돗물 원·정수 중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	○ 수돗물 원·정수 중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추진 - 조사항목 : 60종 - 조사대상 정수장 : 70개소 - 조사주기 : 3회/년
○ 신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 확대 검토	○ 신규 수질감시항목 2종(NEMA, NDEA) 추가 지정('18.7 시행) * 「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('17.7)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조사대상 정수장 수	70	70

3. 성과 및 한계

-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
 - (성과)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위해도가 높아 관리 필요한 물질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
 - (한계)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 모니터링 강화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5단계('17~'21) 미규제 미량 유해물질 모니터링 지속 추진
 - 전국 70개 주요 정수장 대상 미규제 미량 유해물질 60종 대상 모니터링 실시(연 3회)

3-1-8	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
②	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감시

환경부 수도정책과 남궁현 사무관, T.044-201-7116
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임옥상 사무관, T.044-201-7186

1. 과제내용

- ☐ 지하수오염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사고 예방
 -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감시망 상시 운영
 -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취약급수시설(소규모수도시설 등)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감시망 운영 계획 수립 ○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(~12월)	○ 소규모수도시설 대상 노로바이러스 감시망 운영 - 300톤/일 미만 시설 100개 대상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 감시 실시 - 부적합시설에 대해 조치사항 이행토록 지자체에 통보 ○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('18.12월) - 30개 시료를 대상으로 조사 - 대장균 파아지를 노로바이러스 대체지표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추진 검토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취약급수시설 감시대상(개소)	110	130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(성과) 노로바이러스 감시망 운영을 통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설점검 등 개선방안 강구
 - 시설 관리방안 등 현장지원, 홍보스티커 제작 배포 등을 통한 시설관리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
- ☐ (한계) 소규모수도시설의 잔류염소 관리 부적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필요(연구사업 추진 중)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'18년 취약급수시설 대상 노로바이러스 감시망 운영
 - 300톤/일 미만 정수장 100개 시설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감시, 소독관리요령 등 주민대상 현장교육 실시 등
 - 취약급수시설의 근원적 먹는물 안전성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

3-1-8	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
③	먹는샘물 수질 안전성 강화

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이광용 사무관, T.044-201-7188

1. 과제내용

☐ 먹는샘물 중 미량 유해물질 함량조사 등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

2. 추진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먹는샘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 -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제품수 및 취수공별(원수) 조사 - 지질기원 및 제조·보관과정에서 생성 우려 물질 등 총 30항목	○ 먹는샘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 - 50개 제조업체의 제품수 및 163개 취수공별 원수 조사 완료(상, 하반기) - 지질기원(바륨 등 37개항목) 및 제조·보관과정에서 생성 우려 물질(아세트알데히드 등 5개항목) 등 총 42항목 조사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먹는샘물 수질감시 항목수	3	3

3. 성과 및 한계

☐ (성과) 먹는샘물내 우라늄 항목을 수질기준으로 추가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먹는샘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신뢰도 제고

- ☐ (한계)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관리필요성이 부각되는 유해물질이 나타남에 따라 조사대상의 탄력적인 조정을 통한 수질기준 관리 항목의 지속적인 개선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먹는샘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 지속
- ☐ 신규 먹는샘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 확대 검토

3-2 유통·소비단계 안전관리

3-2-1 유통식품의 수거·검사 강화

① 유통단계 가공식품 및 축산물 수거·검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성준현 연구관 T.043-719-2055

농축수산물안전과 이영희 사무관 T.043-719-3259

1. 과제내용

-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한 국민 다소비 가공식품 및 불량 축산식품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단계 수거·검사 강화
 - 건수 위주의 검사를 지양하고, 통계를 활용한 위해우려식품 집중 수거·검사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생활패턴·소비형태 변화에 따른 유통단계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수거·검사 강화 -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국내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·검사	○ (가공식품) 다소비 식품 등 78,287건 수거·검사, 272건 부적합 - 가정간편식, 배달앱 조리식품 등 3,143건 수거·검사, 24건 부적합 * 카카오닙스('17.2), 히비스커스('17.7) 제품 검사·회수 실시(금속성이물(씻가루)) ○ (축산물) 위해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수거·검사(19,219건 검사, 부적합 87건) - 계란 살충제 등 잔류물질 수거·검사(1,045건, 부적합 16건) - 식육, 축산물가공품 잔류물질 수거·검사(425건, 부적합 1건) - 조제유류 등 분기별 정기 특별검사(350건 검사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시기별·테마별 수거·검사 실시 ○ 통합망 자료를 활용, 안전관리 영향요인을 고려한 식품유형 수거·검사 실시	○ 설 성수식품(1월), 하절기 다소비 식품(6월), 가을 행락철(9월) 등 지도·점검 시 수거검사 병행 ○ 하절기 위해우려 축산물 수거·검사(1,703건 검사, 부적합 5건) ○ 축산물작업장 지도·점검시 수거·검사(11,219건 검사, 부적합 38건) ○ 국민 다소비 가공식품, 부적합 이력 높은 품목 등 25,337건 검사, 140건 부적합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유통식품 수거검사 건수	62,200	78,287
○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건수	12,000	19,216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국내 유통 중인 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통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조치 등 안전관리로 소비자 피해 예방
 - 혼밥, 외식 증가 등 식품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수거·검사 항목 선정 등 효율적인 수거·검사 필요
- ☐ 계란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항목 확대 및 유통 취약지대 안전관리 강화
 - 잔류농약 검사항목 지속 확대, 전통시장·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계란 중점 수거·검사 실시
 - * 닭 및 계란 살충제 농약 검사항목 확대(33종) 및 유통계란 검사(1,045건)
- ☐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단계 취약요인 및 위해요소 집중관리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통합망 통계 활용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선택과 집종의 수거·검사 강화
- ☐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에 대한 유통단계 검사 강화
 - 해충 구제 목적사용 살충제 검출 우려 식품, 식중독균 검출우려 식품 등에 대한 수거·검사 강화

3-2-1	유통식품의 수거·검사 강화
②	농수산물식품 선제적 안전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변성근 사무관 T.043-719-3244

1. 과제내용

- ☐ 신선 농수산물은 특성상 유통·소비시간이 짧아 통상적인 유통식품 수거검사로는 위해 농수산물의 폐기 등 차단이 불가능함
- 주요 부적합 농수산물은 깻잎, 상추, 활어 등 신선농수산물
 - 계절별, 지역특화 농수산물을 선제적으로 안전관리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의 상시 신속 수거·검사 강화(연중) ○ 농수산물 주산지·계절별 안전관리 - 지역특화 품목 및 계절별 주요 품목 선제적 안전관리 - 수산물 위해요소 선제적 안전관리 및 예방 홍보 * 봄철 패류독소, 여름철 장염비브리오,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	○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의 상시 수거·검사 강화(25,681건) ○ 농수산물 주산지·계절별 안전관리 - 지역특화 농산물 및 계절별 다 소비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(2,311건) * 지역특화 농산물(642건), 계절별 농산물(1,669건) - 수산물 위해요소 선제적 안전관리 및 예방 홍보(4,225건) * 봄철 패류독소(2,314건), 여름철 장염비브리오(1,566건),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(345건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농산물 수거검사 건수	45,000	52,828
○ 수산물 수거검사 건수	13,000	13,038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부적합 발생이 높은 농·수산물에 대한 유관기관 정보 공유를 통한 위해우려 품목 위주의 집중 안전관리
- ☐ 농산물에 대한 PLS 전면시행('19.1월) 관련하여 생산현장의 인식 부족으로 부적합률 상승 우려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통계적·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농·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·시행
- ☐ 생산자단체(농·수협) 등과 협업을 통한 생산자 대상 교육·홍보 강화

3-2-1	유통식품의 수거·검사 강화
③	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김성희 사무관 T.043-719-3241

1. 과제내용

☐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검사 강화

-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의 검사계획을 수립(식약처)하고 관계부처(농식품부, 해수부) 및 시·도 협업으로 검사 추진

☐ 방사능 검사결과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교육·홍보 실시

- 방사능 검사결과 및 관련정보 공개 및 소비자(단체) 등 교육·홍보 강화로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제고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 - 부처협업을 통한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 추진 - 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 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○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교육·홍보 -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공개 - 식품 방사능 검사법 교육·훈련 - 급식관계자 등 권역별 순회교육 - 소비자 맞춤형 교육용 웹툰 보급	○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 -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계획 수립(1월) -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소비자 우려 식품 등 검사(4,555건) -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(50개기관 128명) 및 실무협의회 운영(2회, 6·12월) ○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교육·홍보 -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공개(게시 26건, 조회수 9,086회) - 식품 방사능 검사법 기술훈련(3회) - 소비자 및 급식관계자 등 대상 방사능 안전관리 전국 순회교육(6회, 2,002명)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 개최	-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웹툰을 홈페이지, 블로그 등 송출(4월) -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 개최(12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건수(건)	4,500	4,555

3. 성과 및 한계

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안전관리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에 기여

* 기관별 실적 : 식약처(4,555건), 농식품부(503건), 해수부(1,129건), 시·도(7,508건)

* 검사실적 : 13,695건(농산물 3,706건, 축산물 1,115건, 수산물 6,431건, 가공식품 2,443건)

○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공개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체감도 전년대비 3.5% 향상

*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체감도 : ('15) 51.4% → ('16) 56.8% → ('17) 60.3%

* 전국 20세 이상 성인 1,023명 대상 면접조사, '17.9.18~12.8, 한국소비자연맹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

- 다소비식품 및 소비자 우려식품 등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지속 추진
- 식품 중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검사장비 도입 및 실험실 확충
-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통한 공개
-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

3-2-2	식품등의 허위·과대광고 단속 강화
①	식품 등 허위·과대광고 안전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박동희 사무관 T.043-719-2054

1. 과제내용

☐ 허위·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

-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·과대 광고하거나,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를 하는 행위 등 피해사례 증가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식약처, 지자체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단속	○ 식약처, 지자체 역할분담을 통해 허위·과대광고 단속 강화 - (식약처) 허위·과대광고를 전담 하는 요원을 활용하여 인터넷 사이트, 홈쇼핑, 일간지 모니터링 * 불법광고 3,989건 지자체 조사 요청 - (지자체) 식약처가 모니터링한 위반사항 조치 및 지방신문, 지역 케이블방송, 생활정보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* 불법광고 537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
○ 허위·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- 오픈마켓, 소셜 커머스 등 대상 분기별 간담회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	○ 허위·과대광고 홍보물 제작·배포 - 시니어감시단 활용 홍보물 배포 (4월, '식품을 약처럼 판매하면 1399로 신고하세요') - 오픈마켓, 소셜커머스, 업체 대상

추진계획	추진실적
	‘허위·과대광고 효율적 근절방안’ 등 간담회 개최(4회) -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보도자료 배포(10월,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판매하는 허위광고 예방을 위해 ‘우리가 마시는 음료, 현명하게 선택하세요’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허위·과대광고 위반건수	360	537

3. 성과 및 한계

☐ 인터넷, 신문, 잡지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광고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

*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 : ('15) 423건 → ('16) 467건 → ('17) 537건

* 사이트 차단 건수(방통위) : ('15) 15,102건 → ('16) 15,160건 → ('17) 8,777건

○ 최근 온라인을 통해 식품판매가 증가하면서 식품을 질병치료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도 증가하고 있어 관리강화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온라인 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허위·과대광고 관리 강화

☐ 포털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광고 신속 차단

3-2-3	위해식품 회수체계 강화
①	위해식품 회수제도 개선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성준현 연구관 T.043-719-2055

1. 과제내용

- 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해식품 회수체계 강화
 - 회수대상 식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, 회수체계 선진화를 통해 위해 발생식품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회수로 소비자 피해 예방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소비자 안전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한 회수 제도 개선 - 회수대상 식품 및 위해식품 회수지침 개정 ○ 지자체 및 검사기관 교육강화 - 유통 초기 제품 중심 수거·검사 및 다빈도 부적합사례, 기준·규격 오적용 사례 방지 등 교육	○ 소비자 안전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한 회수 제도 개선 - 회수등급별 회수정보 전달매체, 회수정보 제공 표준양식 등을 반영하여 '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개정 ○ 지자체 및 검사기관 교육 강화 - 지자체 식품위생감시원 대상 식품안전관리지침 설명회(1월) - 지자체(검사기관 포함) 공무원 대상 수거·검사 대상선정, 부적합 사례 등 교육 (3회, 3·4·11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가공식품 회수효율성 평가(%)	84	92.9

* 회수효율성 평가기준(8개 지표)에 따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의 비율(%)

3. 성과 및 한계

☐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통한 소비자 피해 보호

* '17년도 회수대상 가공식품 169건에 대한 회수효율성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는 157개소(92.9%)로 '17년 목표(84%) 대비 111% 초과 달성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회수 강화

3-2-4	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
①	위해정보 수집·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수입식품 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장화중 사무관 T.043-719-2210

1. 과제내용

- ☐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밀검사 강화
 - 국가·품목·유해물질 검출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정도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조정
 - 국내·외 부적합항목을 검토하여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 선정
 - 위해우려 수입식품 집중검사를 위한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(OPERA)을 무작위표본검사에 확대적용 및 개선 추진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 및 반기별 계획 수립 ○ 위해우려 수입식품 집중검사를 위한 '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(OPERA)' 운영	○ 최초 수입식품 중점검사항목 선정(1월) 및 무작위표본검사 중점검사항목 선정(1월, 7월) ○ 최근 3년간('14~'16) 수입현황 분석, 주요 기준항목(국가·품목 중심) 설정, 부적합현황을 가중치 두어 선정 ○ OPERA 운영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무작위표본검사 부적합률 대비 사전예측수입검사 시스템(OPERA) 적용 검사 부적합률(%)	248%	288%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부적합 이력 및 불성실 영업자 등에 대한 무작위검사 강화
 - 국가·품목·유해물질 검출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정도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조정
- ☐ 최초수입식품의 중점검사항목 선정(1월)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중점검사항목 선정(1월, 7월)
- ☐ 무작위표본검사 부적합 대비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(OPERA) 적용 부적합률 288% 달성
 - * ('17) opera 무작위검사 부적합률 0.525% 대비 무작위표본검사 부적합률 0.182%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무작위 중점관리대상 품목 선정 시기 조정
 - 식품등·축산물·수산물별 일관성 있는 무작위 검사 운영을 위해 연2회(6월, 12월) 무작위 검사 계획을 수립·운영
 - * 농·임산물, 가공식품, 건강기능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·용기 및 포장
- ☐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(OPERA) 운영

3-2-4	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
②	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에 따른 축수산물 정밀검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강성필 사무관 T.043-719-2220

수입검사관리과 가정훈 사무관, T.043-719-2230

1. 과제내용

- ☐ 수입 물량의 증가와 다변화 및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위해 축수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전(前) 검사 강화
 - 현장검사 및 국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사전 조치 기능 강화
 - 황색포도상구균 등 병원성 미생물과 니트로푸란 등 위해잔류물질 등의 정밀검사 실시로 국민건강 보호 및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
- ☐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에 따른 축수산물 정밀검사 강화
 - 국내외 위해정보, 부적합 내용에 대한 통관단계의 신속한 검사 강화로 위해 우려 축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
 - 국가·품목·유해물질별 위해도를 분석하고 위해정도에 따른 정밀 검사 비율 차등 적용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입 축·수산물 통관 단계 수입검사로 위해 축·수산물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	○ 수입 축·수산물 통관단계 검사 강화 - (축산물) 수입건수(102,027건) 대비 10% 정밀검사 - (수산물) 수입건수(95,769건) 대비 24% 정밀검사 ○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즉시퇴출제 확대(법령 개정, 12월) ○ 인도산 흰다리새우에 대한 검사명령 대상 지정 등 수입자의 책임 강화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국내외 위해정보,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 축·수산물의 국내유입 차단	○ 유럽發 살충제오염 계란 사건 관련 모든 국가산 계란, 닭고기, 계란가공품에 대한 검사 강화 * 415건 검사, 모두 불검출 ○ 유럽산 비가열 돈육가공품 'E형 간염바이러스' 발생 관련 검사 강화 및 대국민 홍보(8월, 보도 자료 배포) * 생햄 등 77건 13톤 검사, 모두 불검출 ○ 브라질산 부패·변질 가금육에 대한 불안 확산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검사 강화 및 현지실사 실시 * 모든 수입건 관능검사 실시, 무작위표본검사 상향 조정(8→6주기) * 니트로푸란, 살모넬라, 휘발성염기질소 등 검사(10건, 235톤 살모넬라 검출) * 해외작업장 부적합 1개소 수입중단 및 생산제품 반입불허 ○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부족으로 안전한 계란의 신속통관 방안 마련(1월) * 수입신고 당일 농식품부(검역)와 동시에 현장검사 실시, 181건(2,673톤) 검사 ○ 최근 3년간 위해 수산물 정보를 분석, 위해우려 항목 검사 지시(32개 항목) ○ 수입통관검사 과정에서 정밀검사 부적합이 빈발하는 수산물에 대해 정밀검사 빈도를 상향하여 관리 * (상·하반기) 6개국 18개품목 매건 검사 ○ 불법증량, 허위신고, 부적합이력 등 위해우려 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* 불법증량 89품목, 허위신고 164, 수산 부산물 129, 부적합이력 93('17.9~'18.12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부적합률(%)	0.20%	0.72%
○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부적합률(%)	0.19%	0.11%

3. 성과 및 한계

□ 수입 통관단계 검사 강화로 위해 축·수산물 국내 유입 차단

-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에 따른 축수산물 통관단계 검사 강화로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차단
 - '16년도 대비 수입 축·수산물 정밀검사 부적합률 증가 추세
 - * 수입 축·수산물 정밀검사 부적합률(%) : ('16) 0.18 → ('17) 0.30
- 국내외 정보에 따른 긴급 대응조치로 축·수산물의 안전성 확보

□ 위해도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입검사 개선

- 농수산물은 매 수입 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한정된 자원으로서는 현장검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 - 검사 건수는 과다하고, 부적합 적발 수준은 저조하여 비효율적
- ☞ 위해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입검사 개선 및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구축 등 수입검사의 효율성 제고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위해 축수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전(前) 검사 강화

- 철저한 통관단계 수입검사를 통하여 위해 축·수산물의 국내 유입 차단 및 국내·외 위해정보 분석을 통해 문제 식품 등 집중감시

□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제도 운영을 위한 여건 마련

- 전자위생증 제도를 운영하는 수출국(뉴질랜드, 호주 등)의 운영체계를 현지조사하고 국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전자위생증명서 운영체계 마련

3-2-4	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
③	해외 원전사고에 의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장화중 사무관 T.043-719-2210
수입검사관리과 강성필 사무관 T.043-719-2220
수입검사관리과 가정훈 사무관 T.043-719-2230

1. 과제내용

- 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에 따른 일본산 수입식품의 철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
- ☐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사고 관련 국가(44개국) 오염우려 품목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추가 실시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하여 매수입시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(연중) ○ 체르노빌 원전 사고 관련 방사능 검사 추가 실시(연중) ○ 방사능 검사결과 및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공개(연중)	○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- (가공식품) 27,250건*, (농산물) 152건, (축산물) 553건, (수산물) 7,271건 검사 * (가공식품) 검출 4건 반송·폐기 ○ 체르노빌 원전 사고 관련 방사능 검사 - (가공식품) 433건, (농산물) 310건, (축산물) 101건, (수산물) 1,893건 ○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결과 홈페이지 공개(매일), 보도 참고자료 배포(매주)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대국민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일본산 수입식품 및 태평양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
- ☐ 방사능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및 보도참고자료 배포

3-2-4	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
④	해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박주환 사무관 T.043-719-6253

1. 과제내용

☐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

- 국내·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위해우려 해외직구 식품의 국내반입 및 판매 사이트 차단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검사 지침 개정 ○ 구매대행 검사 효율화를 위한 수입신고시스템 개선 ○ 관세청과 업무협업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확대 추진 ○ 해외 인터넷사이트 판매제품 구매·검사(900건) ○ 수입식품 등 온라인 모니터링	○ 수입금지 성분 추가 D/B 구축 및 부적합 판단 기준 등 마련 ○ 부적합 제품명 등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로 구매대행 신고 업무 효율성 제고 ○ 식약처 검사 인력을 인천세관에 파견, 합동 현장검사 실시 * 30,615건 선별검사, 10,688건 차단(34.9%) ○ 성기능개선, 근육강화, 다이어트 표방제품, 젤라틴 캡슐제품 등 구매·검사 * 1,002건 검사, 163건 부적합 ○ 수입식품 등의 허위·과대광고, 위해 식품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* 10,802건 삭제 요청(방심위 4,198건, 포털사 등 6,604건)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(성과) 위해성평가 전문가 심의*를 통한 통관불가 제품의 명확화
 - 국내 통관금지 성분의 안전성 평가 및 섭취현황 등 자료 조사 결과 안전성 확인된 성분은 통관차단품목에서 제외
- * 위해성평가 문헌분석 실시('17.12.15 완료), 문헌분석 결과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식용불가 차단 품목 확정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해외직구식품 구매·검사 확대 시행
 - 위해식품 이외에 해외직구로 자주 구매하는 다소비식품, 영유아식 등 이슈발생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제품의 안전성 검사
- ☐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
 - 식약처-관세청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한 통관 차단 목록 및 위해 정보 등 실시간 공유

3-2-4	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
⑤	수입물품검사 강화로 불법식품류 반입차단

관세청 통관기획과 임동욱 사무관 T.042-481-7851

1. 과제내용

- 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분석·검사를 강화하고 위해 성분 함유 부적합 식품에 대해 긴급 통관보류 강화
- ☐ 수입물품 위해정보 수집·분석을 통한 검사 강화 등 불법식품류 반입 차단

2. 추진실적

- ☐ 수입물품 검사강화로 불법식품류 반입 차단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중점감시 수입식품 확대 지정 및 검사 비율 상향 ○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 검사 강화 ○ 기관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강화	○ 관세청 수입식품 검사 자료와 식약처 수입 식품 검사 결과를 통합 활용하여 품목수* 상향 조정 * 지정 품목수 150개 → 155개 ○ 중점감시 수입식품 검사율 18%달성 (목표: 16.5%, 일반수입 2%대) ○ 협업검사센터內 식약처 직원 1명 상주 근무 ○ 식약처 직원과의 합동검사 실시로 신속한 안정성 검사 체계 구축 ○ 범정부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(회의개최 연2회) ○ 식약처와 해외위해식품정보 상시 공유 및 검사 선별기법* 정비(7건) * EDA솔루션[정의된 사건(Even)에 의해 동작하는 (Driven) 컴퓨터 시스템(Architecture)] 도입 등 검사 선별시스템(C/S)을 고도화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위해성분 함유 식품 등에 대한 분석·검사 강화	○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內 분석실 설치* 및 첨단 장비** 구축 * (분석장비)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, 주사 전자현미경(석면 또는 중금속 함량 분석) 등 ** (현재) 관계부처의 분석기관 이용시 5~10일 소요 → (개선) 자체 분석실 이용시 2일 소요 ○ 협업검사를 통해 유해성분이 함유 해외 직구 식품 10,688건 반입차단 ○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바코드관리 위해 식품 24,604건 적발('17년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중점감시 수입식품 검사율(%)	16.5	18.0

4. 성과 및 한계

- 국민 건강을 위협 수입식품 분석·검사 강화로 불법식품류 반입 차단
- 중점감시 수입식품 확대 및 검사율 상향으로 검사율 18.0% 달성
 - * 목표 검사율 : ('15년)15.5% → ('16년)16% → ('17년)16.5%
 -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10,688건 반입차단
(‘16년 7,267건, 전년대비 147%)
 - 식약처 위해식품 공유 정보 활용 등으로 수입검사 선별기준 정비
(7건, ‘17년)
 - * 선별기준에 따른 검사 : 30,615건, 위해식품 적발 : 10,688건

5. 향후 추진계획

- 중점감시 수입식품 품목 조정·시행(3월)
- 협업검사 조직 확대(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 외 부산세관 센터 신설, ‘18년)

3-2-4	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
⑥	수입식품의 원산지 조작행위 차단

관세청 기획심사팀 정수민 사무관 T.042-481-7742

1. 과제내용

- ☐ 설명절·김장철 등 특정 시기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·기획단속
- ☐ 범정부 단속기관 및 민·관 교류를 통한 협업 강화
- ☐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실시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설명절 등 특정 시기별 수입식품 특별단속 및 고위험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 실시 ○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및 민·관 협업 강화	○ 특별 및 기획 단속 - 중국산 참조기를 국산 영광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적발 * 총 46개업체, 28억원 상당 - 아프리카산 茶 원료를 유럽에서 세척 등 단순 가공하고 유기농 유럽산으로 표기하여 유명 홈쇼핑에서 高價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판매한 업체 등 적발 * 총 4개업체, 8억원 상당 ○ 협의회 개최 및 협업 강화 - 「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*」 상·하반기 개최(4월, 12월) ⇒ 연간 운영방향 및 추진실적 보고 * 관세청(주관), 농관원·수품원·지자체 등 20개 기관 참여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원산지제도 맞춤형 홍보 실시	○ 수요자 특성 반영 맞춤형 홍보 - 관세청 블로그, 지하철 영상광고 등 다양한 매체*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노력으로 사전예방 및 제보 적발실적 제고 * 지하철 영상/지면광고(6월,8월), 전통시장 현수막(10월), 대형마트 카트광고(12월)    [지하철광고] [재래시장] [대형마트 카트]
○ 유통이력신고 현장 집중점검 실시	○ 총 5회 집중점검 실시(명절 및 김장철 등) - 현장점검 업체수 8,878개, 신고 위반 과태료 60건(4,000만원) 단속 - 제도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및 배포(3만부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실적	1,096점	1,249점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凡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자체 단속능력 배양 필요
- (최근 위반 유형) 수입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는 도매단계 보다 최종 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
 - (한계) 관세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수많은 소매업자 단속에 한계 발생 → 지자체 단속 참여 유도 및 능력배양 필요

- (발전 방향)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 유도 및 검사능력 배양을 위해 「농산물품질관리원」 등 전문기관의 단속 노하우 전수

4. 향후 추진계획

- 지자체 단속 공무원 대상, 단속능력 배양을 위한 지역별 순회교육 실시
 - 관세청(주관), 농산물·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단속 전문기관 합동으로 지자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 실시
 - 서울, 대전, 광주, 부산 등 각 권역별 순회교육(매년 1분기 中)

3-3 불량식품 근절

3-3-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 지속 강화

①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신용주 사무관 T.043-719-1910

1. 과제내용

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

- 불량식품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 추진활동의 효율성 제고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회의(4회)	○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회의(4회) *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활동 강화회의(3월), 비식용 식용 둔갑 근절 회의(3월), 친환경 표방식품 합동단속회의(8월), 범정부 협업 체계 효율화 방안(8월)
○ 불량식품 발생정보 공유 - 불량식품 정보분석 보고서(매월), 불량식품 단속 실적 및 계획(매주) - 식품관련 수사사건 보도자료 사전협의(수시)	○ 불량식품 발생정보 공유 - 불량식품 정보분석 보고서(13회), 불량식품 단속 실적 및 계획(50회) - 식품관련 수사사건 보도자료 사전협의(30회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범정부 협의체 회의개최 건수	4회	4회

3. 성과 및 한계

□ 범정부적 식품안전 관리에 식약처가 중심적 역할 수행

- 부처합동 기획감시(27회), 범정부 협의체회의(4회) 개최, 불량식품 관련 정보(13회, 매월) 및 근절활동 상황(50회, 매주) 공유

* 총 8,636개소 점검, 23개 기관 연인원 약 9,435명 참여

□ 기관 간 한 목소리로 소통하여 국민 신뢰감 확산

- 검·경과 식품 관련 수사결과 보도 전 협의(30회), 사실관계 확인 및 위해식품 회수 등 관리강화로 국민안심 유도

□ 불량식품 분석정보의 현장성·시의성 확보로 정보 활용도 제고 필요

- 단편적 행정정보를 월간단위로 통계분석하는 수준의 정보로는 감시의 실마리 정보 포착 등 활용의 어려움

* 정보분석 현황(천건) : ('13) 26 → ('14) 27 → ('15) 31 → ('16) 37 → ('17) 40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식품안전 이슈 대응을 위한 정보분석 고도화

- 현장밀착형 정보수집 채널 다각화 및 과학적 분석(식품안전 빅데이터)에 기반한 실마리 정보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관리 추진

3-3-2	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
①	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

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신용주 사무관 T.043-719-1910

1. 과제내용

- 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불량식품 발생원인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- 국민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범정부 단속활동 추진
 - 불량식품 발생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(매월) - 수입식품 등 국민 불안감 높은 분야 대상 합동 기획감시 - 문제영업자에 대한 특별단속 등 추적관리 ○ 불량식품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(연중)	○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(총 27회) - 수입식품 등 국민 불안감 높은 분야 대상 합동 기획감시(24회) * 8,386개소 점검, 562개소 적발 - 문제영업자에 대한 특별단속 등 추적관리(3회) * 430개소 점검, 40개소 적발 ○ 불량식품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 - 사료용 원료의 유통이력관리대상 지정 등 개선과제 10건 발굴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제도개선 사항 발굴 건수(건)	6	10
○ 기획감시 건수(건)	12	27

3. 성과 및 한계

□ 강도 높은 합동단속으로 안전 위협요인 차단

- 국민관심분야에 대한 중점 단속을 통해 불법사례 감소 등 위생 지표 개선 및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

* 법령 위반율(%) : ('13) 15.2 → ('14) 6.2 → ('15) 7.8 → ('16) 6.3 → ('17) 6.8

* 식품안전 체감도(%) : ('13) 72.2 → ('14) 73.8 → ('15) 79.6 → ('16) 84.6

□ 불량식품의 근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

- 단속 및 소통과정에서 불량식품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,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제안

* 사료용 원료 유통이력관리대상 지정 등 10건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(3건 반영)

□ 고의·상습 문제영업자 관리 등 효율성 증대 필요

- 업체(제품) 위주의 관리방식을 행위자(사람)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나, 고의적 위반행위 적발 및 퇴출 실적이 저조

* 문제영업자관리시스템 운영('16.12~): 348명 지정, 430개소 점검, 40개소 적발

* 원스트라이크 퇴출실적(9건) : 기획감시(3건), 1399 신고(6건)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불량식품 문제영업자 선별적 집중 관리

- 고의적 위반행위 개연성이 높거나 파급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관리하고,接客업·판매업 등 소규모 업종은 지자체 이첩 처리

* (현행) 문제영업자 운영업체 전체 → (개선) 제조업체 중심

* 문제영업자가 운영 중인 업체 중接客업, 판매업 등 69%(337개소) 차지

□ 원스트라이크아웃* 위반행위 중점 점검으로 악질업체 영구퇴출

- 퇴출 대상 고의·중대 위반행위를 기획감시의 핵심 점검항목으로 관리하고, 관련 신고에 대한 기동단속반 상시 운영

* 유통기한 변조, 부적합 제품 판매 등은 한 번만 위반해도 퇴출

3-3-3	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과학적 분석법 개발
①	불량식품 과학적 감시체계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중유해물질팀 최장덕 연구관 T.043-719-4455

첨단분석팀 박성관 연구관 T.043-719-5302

1. 과제내용

- ☐ 저가 및 부정 원재료 사용 등 식품사기(Food Fraud) 근절
 - 식품원료의 “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ositive List System)” 도입에 따라 사용가능 원료와 유사한 수입산 어종 판별
 - 고가의 수산물에 대한 의도적 중량변조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과학적 근거 제시
 -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농·수산물 유사종(種) 판별법, 식품원료 판별을 위한 바코드 마커 개발, 유통식품 실태조사 및 On-Site 신속 검출법 개발
 -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중 부정물질의 선제적 차단 및 섭취에 따른 인체 부작용 우려가 있는 식용금지원료의 분석법 개발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유사어종 판별 및 3D 스캐너 사용 수산물 불법중량 판별법 마련 - 다빈도·소비 수산물 원재료 진위 판별용 유전자 마커개발(연중) - 밀도차를 이용한 인위적 물 중량 여부 판별 알고리즘 개발(연중)	○ 유사어종 판별 및 3D 스캐너 사용 수산물 불법중량 판별법 마련 - 다량어류 및 새치류 등 50종에 대한 유전자 바코드 정보 확보(11월) - 인위적 물 첨가 냉동 낙지의 3D 스캐너 탐지 시스템 구현(11월) * 밀도 0.89 이상(원물), 0.80 이하(증량품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소비자 기망(欺罔)식품 판별법 개발 - 과일·채소류음료(다소비, 고가)의 위·변조 판별법 개발(11월) - 천일염 원산지 판별법 개발(11월) - 고지혈증 치료제 동시분석법 및 사용불가원료 분석법 개발(11월) ○ 최신 유전자 기법을 이용한 불량식품 판별(현장적용)법 개발 - 종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(11월) - On-Site 신속 검출법 개발(11월)	○ 소비자 기망(欺罔)식품 판별법 개발 - 블루베리 주스의 위·변조 혼입 판별을 위한 「표준 성분표」 마련(11월) - 지표성분* 이용, 천일염 원산지 판별식 수립(11월) * SO_4^{2-}, K, Mg, Sulfur - 부정·불량식품 중 고지혈증치료제(25성분) 동시분석법 및 식용금지원료(등취 등) 검출을 위한 이화학·유전자 분석법 개발(11월) ○ 최신 유전자 기법을 이용한 불량식품 판별(현장적용)법 개발 - 민어, 모링가 등 식품원료 21종의 진위 판별법 개발(12월) - 수입식품 신속통관을 위한 On-Site 검출키트 4건 개발(11월) * 참홍어/수입홍어, 창난젓/가이양젓갈, 옥돔/옥두어, 백수오/이엽우피소 판별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불량식품 판별법 개발 건수 - 유전자 바코드 정보 및 진위 판별법	60	71

3. 성과 및 한계

□ 성과

- 수입·유통 수산물 유사어종 판별을 위한 유전자 바코드 DB 구축
 - * 연구논문(1건), 특허출원(10-2017-0006042 외 1건), 보도자료 배포(식약처, 250개 어종 판별할 유전자 바코드 2021년까지 구축, '18.1.11)

-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 위·변조 판별을 위한 종 특이 마커 개발
 - * 연구논문(1건), 시험법 고시 제안(2건), 특허등록(10-2016-0079150), 특허출원(10-2017-0116955 외 1건), 보도자료 배포(홍계-대계 속이다가는 큰 일, '17.4.7)
- 부정·불량식품 중 의약품성분 및 식용금지원료의 분석법 개발
 - * 연구논문(1건), 시험법 고시 제안(3건), 2017년 식·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 발간('17.12.26), 카드뉴스 배포(가짜 건강기능식품 조심하세요, '17.4.25)

4. 향후 추진계획

- 부정·불량 식품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분석법 개발 지속
 - 다량어류, 복어류 등 저가어종을 고가어종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종 판별법* 지속 개발
 - 부정·불량식품 현장적용을 위한 On-site 신속검출법 기술 개발
 - 가짜 참기름, 메기 내장을 사용한 창란젓 등 저가의 다른 원료를 사용한 가짜식품에 대한 진위 판별법 개발
 - 식용불가원료 섭취로 중독증상 등 부작용 사례가 있는 원료(백선평, 천오 등 2종)에 대한 혼입여부 판별법 개발

3-3-4	식품 위해사범 단속 강화
①	식품 위해사범 단속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나금동 사무관 T.043-719-1303

1. 과제내용

☐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

- 사업부서 및 지방청,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협력을 통하여 식품 위해사범 근절에 시너지 효과 창출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취약계층 대상 거짓·과대광고 기획수사 - 질병 치료 효능·효과 표방 식품 단속 등 ○ 식품위해사범 적발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실시 - 특사경 등을 대상으로 수사사례 교육 실시 ○ 범죄정보 및 선진수사기법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- 불량식품 단속 국내외 공조 강화	○ 취약계층 대상 거짓·과대광고 등 기획수사 - 건강기능식품 표시·광고 행위(3월) - 무신고 수입색소 등 사용 케이크 제조업체(6월) - 중국산 고추 양념 불법판매(7월) ○ 수사역량강화로 식의약품 범죄 억지력 제고 - 사건사고 신속대응 및 역량강화 교육(2월) 및 특사경 직무교육(7월) ○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강화 - 서울서부지검 업무협의(3회) - 서울시와 업무협약체결(4월) - 영국 식품기준청 방문(6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위해사범 기획수사 건수	32	37

3. 성과 및 한계

□ 상습적·고의적 식·의약품등의 위해사범 강력 단속

- 밀수생리대, 불법색소 사용 등 이슈 확산 우려사항의 선제적 기획·인지수사로 국민 불안 최소화
- 컴퓨터 등 첨단장비 증거 수집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체계 보완, 첨단분석법을 활용한 유해물질 규명 등 과학적 수사체계 확립

* 주류에 사용된 공업용 색소, 식품에 사용된 발모제 등 규명 성과

□ 안전관리정책과 연계되는 수사 활동 필요

- 안전관리정책 방향에 따라 수사를 기획하고,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정책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진
- 수사방향 및 대상 선정, 환류체계 강화 등을 위한 기획수사 미흡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안전관리정책의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정책부서로 환류체계 구축

- 식품안전정책 및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기획수사 중점 추진
- 안전관리정책을 중심으로 기획 단계부터 사업부서와 소통을 통한 수사 방향 및 대상 선정
- 사회적 관심사안, 제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범죄행위 선제적 대응

* 고소·고발·의뢰에 의한 수동적 수사는 지양, 인지·계획에 의한 능동적 수사로 전환

□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

- 수사기관 교류확대 및 수사공조 기회 확대로 내부적 한계를 해소하고 국제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해외 교류 확대

3-3-4	식품 위해사범 단속 강화
②	식품 위해사범 단속

법무부 형사기획과 최재순 검사 T.02-2110-3271

1. 과제내용

☐ 범죄유인 차단으로 식품안전 구현

-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강력대응 및 범죄수익 환수, 국세청 탈세통보 등 부수처분 강화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속	○ 식품안전 중점검찰청(서울서부지검) 및 전국 59개 검찰청 ‘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’ 등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 실시 - ‘17. 1.~12. 검찰 직접단속 109명(구속 17명),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467명 - ‘17. 1.~12. 범죄수익환수(2,669백만원)
○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	○ 각급 검찰청,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의체 회의 및 간담회 실시 - ‘17. 1.~12. 협의체 회의 118회 개최
○ 식품사범 수사역량 강화 지속	○ 법무연수원, 각급 검찰청 등을 통한 특사경 교육 지속 실시 - ‘17. 1.~12. 법무연수원 특사경 수사실무 집합교육(19회 954명) 및 사이버교육(5회 5,403명), 검찰청별 관내 특사경 교육(31회 367명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불량식품 관련 회의 개최 실적(회)	16	118
○ 수사전문화 교육실적(회)	30	55

3. 성과 및 한계

□ 성과

- 식품안전 중점검찰청(서울서부지검) 및 전국 59개 검찰청 ‘부정식품 사범 합동단속반’ 등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 실시
 - ※ 검찰 직접단속 109명(구속 17명),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467명
- 법무연수원 및 각급 검찰청 등을 통한 특사경 교육 지속 실시로 식품범죄 수사역량 강화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속

- ‘식품안전 중점검찰청’과 전국 ‘부정식품 합동단속반’ 중심으로 부정식품사범 지속 단속(‘18. 연중)
- 범죄수익 환수 조치, 불량식품·원재료 몰수·폐기, 인허가 취소 행정처분 및 국세청 탈세 통보 등 적극 실시(‘18. 연중)

□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

- 부정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(‘18. 상반기)
-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회의 개최를 통한 협업체제 강화(‘18. 연중)

□ 식품사범 수사역량 강화 지속(‘18. 연중)

- 법무연수원, 검찰청 특사경 대상 직무교육 확대 및 지속 실시

3-4 식습관 반영 기준·규격 재평가

3-4-1 농약·중금속·미생물·첨가물 등 기준·규격 재평가

① 농약·첨가물 등 기준·규격 재평가

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김진숙 연구관 T.043-719-3854
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장문익, 정지윤 연구관 T.043-719-4204
 첨가물기준과 김동규 연구관 T.043-719-2504

1. 과제내용

☐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

- (수입식품)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
- (국내식품) 신규 등록(농산물 적용확대 포함)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농약 20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

☐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

- (수입식품) 국내 미등록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- (국내식품)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

☐ 식품첨가물(유화제 등 21품목)의 기준·규격 재평가

* (대상품목) 유화제 14품목, 피막제 5품목, 산화방지제 2품목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* 테부코나졸 등 잔류허용기준(안) 행정예고(3, 6, 9월)	○ 수입식품 농약 152건 잔류허용기준 설정 완료 * 테부코나졸 등 잔류허용기준 행정예고(1, 4, 8, 9, 12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국내 신규 등록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* 폐녹사설편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(안) 행정예고(3, 6, 9월) ○ 외국기준을 준용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* 40종 농약 잔류허용기준(안) 행정예고(6, 12월) ○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고시 * 틸바로신 등 21종 고시(9월) ○ 수입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17종에 대한 시험법 및 기준(안) 마련 ○ 식품첨가물 21품목의 기준·규격 재평가 - 품목별 현황조사, 모니터링 및 섭취량 평가(1~10월) -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적정성평가(12월)	○ 국내 신규 등록(농산물 적용확대 포함) 농약 537건 잔류허용기준 설정 완료 * 폐녹사설편 등 537건에 대한 잔류허용기준(안) 행정예고(4, 8, 9, 12월) ○ 외국기준을 준용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40종 재평가 완료 * 이미녹타딘 등 40종 재평가(4, 8, 9, 12월) ○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고시 완료 * 틸바로신 등 21종 고시(6월, 12월) ○ 수입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17종에 대한 시험법 및 기준(안) 마련 완료 * 겐타마이신 등 17종 고시(12월) ○ 식품첨가물 21품목 기준·규격 재평가 완료 - 대상 식품첨가물 사용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(872건) 수행완료(10월) - 섭취량 평가를 통한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적정성 평가 완료(12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개정 건수	40종	40종
○ 동물용의약품 기준 개정 건수	30종	38종
○ 첨가물 기준·규격 재평가 품목수	21품목	21품목

3. 성과 및 한계

☐ 성과

- 식품의 농약(729건) 및 동물용의약품(38건)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
- 식품첨가물 21품목 기준·규격 재평가를 통한 사전 안전관리 확보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농산물의 PLS 시행('19.1.1) 및 축·수산물의 농약·동물용의약품 PLS 시행('21.1) 대비 지속적인 잔류허용기준 설정

- 농산물 중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기준 설정(지속)
- 외국에서 사용되는 농약·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(지속)

☐ 식품첨가물(산도조절제 등 21품목) 기준·규격 재평가('18)

3-4-1	농약·중금속·미생물·첨가물 등 기준·규격 재평가
②	오염물질·미생물 기준·규격 재평가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정용현 연구관 T.043-719-2422
축산물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T.043-719-3853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김신희 연구관 T.043-719-4204
미생물과 김미경 연구관 T.043-719-4303·4304

1. 과제내용

☐ 오염물질 기준·규격 재평가

- 환경오염, 기후변화, 식이패턴 변화 등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행 기준·규격 주기적 재평가

* 관련: 식품위생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라 관련 법적근거 마련

☐ 미생물 기준·규격 재평가

- 가공공정 특성상 해당제품에서 완전제어가 불가능한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국내 제조, 유통, 소비 현황 및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정량규격 마련

* 대상 :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, 바실러스 세레우스, 장염비브리오, 황색 포도상구균 등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중금속 기준강화 행정예고(안) 마련(1월)	○ 중금속 기준강화 행정예고(안) 마련(1월) * 오징어, 미역의 납, 카드뮴 기준 강화(안)
○ 다이옥신(29종) 및 PCBs(7종) 인체총 노출량 평가 요청(2월)	○ 다이옥신(29종) 및 PCBs(7종) 인체총 노출량 평가 의뢰 완료(2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결과 보고(2월) ○ 다이옥신(29종) 및 PCBs(7종)우선 순위 도출(6월) ○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완료(12월) ○ 다이옥신(29종) 및 PCBs(7종) 기준·규격 재평가(12월) ○ 미생물 기준·규격 재평가 -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안 행정예고(7월) * 난황액, 전란액, 알가열성형제품 등의 황색포도상구균,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정량규격 설정	○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결과(안) 보고(2월) * 곰팡이독소(8종), 벤조피렌(4종), 3-MCPD(2종), PCBs(7종), 다이옥신(29종) ○ 다이옥신(29종) 및 PCBs(7종)우선 순위 도출 완료(6월) * 오염도, 노출점유율 등을 고려 우선관리대상 품목 선정 ○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완료(12월) * 곰팡이독소(8종), 벤조피렌(4종), 3-MCPD(2종), PCBs(7종), 다이옥신(29종), 중금속(7종) ○ 다이옥신(29종) 및 PCBs(7종) 기준·규격 재평가 완료(보고서 작성 중) ○ 미생물 기준·규격 재평가 -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안 행정예고(8월) *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지연에 따라 일정 순연 - 전문가자문회의(5월), 식품위생심의위원회(미생물분과) 심의(11월) -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고시 개정(12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기준·규격 재평가	다이옥신, PCBs	다이옥신, PCBs
○ 저위해성 식중독균 정량규격 설정(건)	5	5

3. 성과 및 한계

☐ 성과

- 저위해성 식중독균 규격의 합리적 정량규격 개정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
- 식품섭취로 인한 오염물질의 인체 총 노출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선 관리 품목 선정 및 기준·규격 재평가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기준·규격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오염물질 기준·규격 개정

- 오염물질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고시(안) 마련

* 기준·규격 신설·강화·완화·삭제 등

☐ '17년 식품 등 유해물질(식품미생물) 오염도조사 결과를 반영한 미생물 기준·규격 재평가 추진('18.9)

3-4-2	기구·용기·포장의 기준·규격 재평가
①	기구·용기·포장 기준·규격 재평가

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최용훈 사무관 T.043-719-2502
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최재천 연구관 T.043-719-4353

1. 과제내용

- ☐ 기구·용기·포장 이행가능 미반응 원료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기준·규격 적정성 재평가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기구·용기·포장 모니터링 및 안전성평가 - 미반응원료물질(폴리올류, 아크릴레이트류)에 대한 모니터링조사 및 안전성평가 ○ 기구·용기·포장의 기준·규격 재평가 - 현행 기준·규격의 개정 필요성 등 적정성 평가	○ 기구·용기·포장 모니터링 및 안전성평가 완료(6종, 11월) - 모니터링 결과, 기준·규격에 적합 - 안전성 평가 결과, 이행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 ○ 기구·용기·포장의 기준·규격 재평가 완료(6종, 12월) - 안전성 평가 및 국내·외 기준·규격 등 비교결과 현행 기준·규격 유지 타당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원료유래 이행물질(항목)	5	6

3. 성과 및 한계

☐ 성과

- 기구·용기·포장 유래 이행가능 미반응 원료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기준·규격 재평가 완료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기구·용기·포장 이행가능 반응생성물질(니트로사민류, 비스페놀유도체류, 알데히드류 등) 재평가 추진

3-4-3	인체모니터링 기반 통합 위해평가
①	유해물질 노출 수준 확인 및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황명실 보건연구관 T. 043-719-4504

1. 과제내용

- ☐ 인체 중심의 통합위해평가 기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
 - 유해물질의 인체노출량 산출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체 바이오모니터링에 근거한 통합위해평가 수행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유해물질 3종 및 식품첨가물 20여종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○ 유해물질 등의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원칙 마련 ○ 인체바이오모니터링 수행에 따른 위해평가 수행 - PBPK 핵심모델을 이용한 노출량 산출 * 비스페놀A, 프탈레이트류 ○ 전국민 대상 인체시료 및 노출원 등 관련 정보 구축(2,000건) ○ 유해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기반 표준위해평가 모형 개발	○ 유해물질 및 식품첨가물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(73건, 12월) ○ 기준설정을 위한 독성기준값 선정 원칙 마련(12월) ○ 페놀류 27종에 대한 인체바이오모니터링 수행(1,955건, 12월) - PBPK 모델 이용한 내외적 노출량 산출에 의한 위해평가 수행 * 비스페놀A, 벤조페놀류 6종, 파라벤류 2종 ○ 전연령대별 대표성있는 인체시료 및 관련 정보 구축(2,480건, 7월) ○ 곰팡이독소, 프탈레이트류 표준 위해평가 모형 개발(11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정책제안 건수	35	73
○ 가이드라인 제안 및 시험법 마련	10	11

3. 성과 및 한계

☐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

- 다이옥신 등 4종 유해물질 및 아질산나트륨 등 69종 식품첨가물
- 평가자료가 부족한 유해물질 및 식품첨가물의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에 대한 불확실성 저감 노력 필요

☐ 통합위해평가를 위한 인체바이오모니터링 기반 강화

- 제한된 인체시료의 특성을 고려한 페놀류 27종 동시분석법 마련
- 인체시료 중 27종 페놀류의 노출량 파악(1,955건)
- 인체바이오모니터링 결과 활용을 위한 유해물질의 PBPK 핵심모델 구축(파라벤류, 비스페놀류, 과불화화합물)
- 통합위해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국민 대상 대표 인체시료 확보 (총 2,480건 / 혈액 1,196건, 뇨 1,284건)

☐ PBPK 핵심모델을 이용한 위해평가(9종) 수행

- 인체바이오모니터링 결과 활용을 위한 PBPK 핵심모델 확대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인체노출안전기준에 대한 새로운 독성정보 등을 활용한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및 재평가 지속 수행

☐ 통합위해평가 수행을 위한 인체바이오모니터링 자료 구축 확대 및 PBPK 핵심모델 활용성 강화

3-4-4	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연구
①	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공전 간 조화를 위한 시험법 마련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김신희 연구관 T.043-719-4252

미생물과 김미경·김순한 연구관 T.043-719-4304·4302

첨가물포장과 최재천 연구관 T.043-719-4353

영양기능연구팀 허수정 연구관 T.043-719-4403

1. 과제내용

- ☐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법 확립 및 개선
 - 유해오염물질 등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기술 개발
 - 미생물 유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미생물 시험법 개선
 - 기준규격 관리 및 사전 예방적 차단을 위한 식품 중 식품첨가물 분석법 개발
 - 수입·유통 전(全)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잔류농약 시험법 개발
 -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개선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해양생물독소, 자연독소, 환경유래 유기오염물질 시험법 마련(12월) ○ 공인 미생물 시험법 체계 개선(12월)	○ 해양생물독소, 자연독소, 환경유래 유기오염물질 시험법 마련(12월) - deca-BDE 등 12건 ○ 공인 미생물 시험법 체계 개선 (1,2,12월) - 식용란의 살모넬라 등 시험법 개선안 총 18건 마련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식중독균 검출법 개선 및 군주은행(식중독균 자원센터) 구축(12월)	○ 식중독균 검출법 개선 및 군주은행(식중독균 자원센터) 구축 - 식중독균 자원센터 전용시설 공사 및 장비 도입(10월) -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 2건 개선 및 시험법 개정판 배포(12월)
○ 식품 중 식품첨가물 및 기구·용기·포장 중 이행물질분석법 개발(12월)	○ 식품 중 착색료 등 3건 및 기구·용기·포장 중 이행물질 미네랄 오일 등 2건 분석법 개발(12월)
○ 잔류농약 시험법 마련(12월)	○ 잔류농약 시험법 마련(12월) - 신속 스크리닝 480종 1건
○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개선(12월)	○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개선(12월) - 글루코사민 등 16종 시험법에 대한 질량분석법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시험법 마련 건수	33	54

3. 성과 및 한계

☐ 해양생물독소, 자연독소, 환경유래 유기오염물질 시험법 확립으로 식품안전관리강화 기반 마련(12건)

- 수산물 중 해양생물독소(브레베톡신 등 3종, 12월), 신규 환경유래 유기오염물질(deca-BDE 등 3종, 6월) 시험법 마련
- 식품 중 곰팡이독소(니발레놀), 피롤리지딘알칼로이드(18종) 시험법 마련(12월)
- 영유아 제품 중 오크라톡신 A 시험법 마련(12월)

- 두부 및 묵류 등 총중금속으로 관리되는 식품에 대한 개별 중금속 시험법 마련(12월)
 - 어류 중 메틸수은 시험법 개선 시험법 마련(12월)
 - 해조류 및 그 가공품 중 무기비소 시험법 마련(9월)
 - 보이차 중 곰팡이독소 시험법(9월)
 - 계란 중 PCBs 시험법(11월)
 - 식품 중 우루시올 시험법 개선(12월)
- 공인 미생물 시험법 체계 개선
- 식용란 중 살모넬라 등 공인미생물 시험법 등 총 18건 개선안 마련(1,2,12월)
 - * 국내·외 공인미생물 시험법 비교·검증을 통해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미생물 시험법 개선(안) 제시
- 식중독균 검출법 개선 및 균주은행(식중독균 자원센터) 구축으로 신속한 검사 체계 구축
- 미생물 교차오염 방지 및 체계적 보존·관리를 위한 식중독균 자원 센터 전용시설 공사 및 장비 도입 완료(10월)
 -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 개선 및 시험법 개정판 책자 배포(12월)
 - 식중독 바이러스(7종), 원충(6종)에 대한 동시분석키트 2건 개발 및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 개정판 배포 완료
 - * 바이러스 : 노로, 로타, 아스트로, 간염(A 및 E형), 사포, 장관아데노
 - * 원충 : 람블편모충, 작은와포자충, 이질아메바, 쿠도아충, 톡소포자충, 원포자충
- 식품 중 식품첨가물 및 기구·용기·포장 중 이행물질 분석법 개발로 식품첨가물 안전관리 강화(12월)
- 식품 중 착색료, 유화제, 미지정 감미료 시험법 개발(11월)

- 식품용 기구 및 용기·포장 유래 미네랄오일의 분석법 확립 연구(11월)
- 식품용 기구 및 용기·포장 중 비스페놀류 동시분석법 확립(12월)
- 잔류농약 시험법 마련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
 - 신속 스크리닝(다종농약다성분) 시험법 480종 마련(12월)
 - * 미등록 농약 등 잔류농약 총 480종(누적)(생산단계 농약 분석법 항목 포함)
-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개선으로 신뢰도 제고
 - 글루코사민 등 16종 시험법에 대한 질량분석법 확립(12월)
 - * 글루코사민, N-아세틸글루코사민, 지방산, 구연산, 스쿠알렌, 식물스테롤/유리식물스테롤, 알코시글리세롤, 옥타코사놀, 카테킨, 알리인, 코엔자임 Q10, 프락토올리고당, 코로솔산, 실리마린, 로사빈, 카페인

4. 향후 추진계획

-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법 확립 및 개선 지속
 - 신규 유해오염물질 8종 시험법 마련
 - 공인미생물 시험법 개선(안) 마련
 - 식중독 세균 개별검출 키트 및 식중독 원인조사 전처리법 개선
 - 잔류농약 PLS 대응 효율적 검사를 위한 동시분석법 확대
 - 식품첨가물 및 기구·용기·포장 중 이행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마련
 - 건강기능식품 등의 적용성 향상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공전, 식품공전 시험법 개선

4

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

4-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

4-1-1	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환자용 영양식품 관리
①	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확대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민정 사무관 T.043-719-2252
윤은경 연구관 T.043-719-2262

1. 과제내용

□ 생애주기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

- 다양한 식품영양정보 제공을 위한 DB 확충 및 개인·계층별 맞춤 영양관리를 위한 체계적 영양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

※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에 대한 식품영양성분 DB 보강 및 확충, 생애주기별 영양·식생활정보 지속 제공, 개인 맞춤 영양관리를 위한 ‘칼로리 코디’ 등 스마트 프로그램 개선 등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생애주기별 눈높이 영양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개발·보급 - (유아) 영양성분 적정섭취를 위한 미취학아동 교육자료 제공(3월) - (어린이·청소년) ‘영양표시 활용’ 및 ‘결핍 영양성분 적정 섭취 유도’ 등 캠페인 실시(5월) 및	○ 대상별·매체별 눈높이 영양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개발·보급 - (유아) 어린이박람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소책자 제공(4월), 당류 줄이기 캐릭터·포스터 배포(고속도로 휴게소·프랜차이즈업체, 11월) - (어린이·청소년) 청소년박람회 당류·나트륨 줄이기 등 체험관 운영(5월), 식품안전·영양교육 활용

추진계획	추진실적
초·중·고 대상 식품안전·영양 교육 지원(연중) - (성인) 영양성분의 적정 섭취 유도를 위한 교육·홍보 콘텐츠 배포(4~10월) - (특수계층) 임신·수유부를 위한 카드뉴스(26종) 및 홍보자료 제공('17. 상반기) ○ 영양정보 제공·공유를 위한 종합 서비스 운영 -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의 식품영양 성분 DB 확대 - 칼로리코디 앱 개선 및 적색육·가공육 섭취량 자동 계산 앱 운영	단맛 미각키트 교구 지원(830개교, 4월), 찾아가는 어린이 영양교육(10회, 10~12월) - (성인) 당류 줄이기 카드뉴스 개발·배포(2종, 8월~), 가정간편식 적정 섭취유도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(12월) - (특수계층) SNS 활용 임신·수유부를 위한 영양정보 제공(20회, 8월~) ○ 식품영양성분 DB 등 인프라 정비 및 최신성 확보 - 가공식품 당류함량 자료(10,749품목) DB화 및 조리식품(250품목) 영양 성분 정보 확보 - 칼로리코디 앱 정비 및 적색육·가공육 섭취량 자동 계산 시스템 연동 완료(상반기) * WHO의 적색육·가공육 섭취 가이드라인 발표지연 → 소비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발표 후 공개 예정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개인 영양관리 프로그램 확대·개선	확대	확대

* 칼로리코디 앱 다운로드 수(누계) ('16) 552,296건 → ('17) 557,603건

3. 성과 및 한계

- 국가 식품영양성분 DB, 생애주기별 영양·식생활정보 등을 식품안전정보포털로 통합·제공
 - 영양정보의 올바른 이해 및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지원
 - * 개인영양관리 시스템인 ‘칼로리코디’ 기능 개선, 영양성분 걱정 섭취 유도 등

4. 향후 추진계획

- 개인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이 가능한 실용적 영양 정보 제공
 - 세대별 세분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
 - 식품영양성분 DB의 최신성 유지 방안 마련

4-1-1	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환자용 영양식품 관리
②	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개발·보급 기반 마련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대훈 연구관 T.043-719-2853

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윤은경 연구관 T.043-719-2262

1. 과제내용

- ☐ 특수의료용도식품 산업체 개발 지원 및 개발·보급 기반 마련
 - 의료용도식품 개발·사용실태 연계분석을 통한 제품개발 방향 제시 및 제품화 기술지원
 -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개발 지원서 보급 - 수요를 고려한 환자용식품의 영양기준 등 가이드라인 정보 제공(5월)	○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개발 지원 -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(환자용식품)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조·가공 정보집 제작 배포(7월) * 배포실적 : 28개 환자용 식품 제조업체, 한국식품산업협회, 한국제약바이오협회 - 환자용식품 수출가이드 마련(12월) * 중국, 인도네시아, 대만 등 5개국 - 올바른 환자용 식품 사용을 위한 영양관리 정보집 마련(12월) * 1,865개 상급종합, 요양병원 배포 완료('18.2월)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대상 질환별 환자용식품 제조·가공 정보집 제공으로 품질 제고 및 환자 및 보호자의 올바른 사용 유도로 개발·보급 기반 확대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저작 및 삼킴이 어려운 환자 맞춤형 식단 등 정보 개발·보급

4-1-2	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확대 및 내실화
①	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지원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황선순 사무관 T.043-719-2267

1. 과제내용

- 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 급식소 및 원장이 직접 조리원을 겸하는 가정어린이집(20명 이하)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·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 확대 및 내실화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(연중) - 센터 설치 독려를 위한 지자체 주민센터에 홍보 포스터 배포(1월) 및 SNS(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옐로우아이디 등) 활용한 홍보(연중) 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·효율적인 운영관리 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지원 수준 상향 표준화를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(연중)	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(연중) - 센터 설치 독려를 위한 홍보 포스터 배포(1월, 지자체) 및 SNS (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옐로우아이디 등) 홍보(연중) * 공익광고 147회(TV), 카드뉴스 7회, 동영상 12회, 인포그래픽 1회, 국회 전광판 홍보 120회 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·효율적인 운영관리 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지원 수준 상향 표준화를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 * 연령별 맞춤형 식단 108건, 신규 레시피 12건, 어린이 대상 교구 및 교육자료 18건, 교사·부모 대상 교육자료 9건, 가정통신문 12건 개발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센터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 및 우수사례 확산(2월) 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 거점 센터 운영(4회) -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과정 운영(6회) 및 사이버 교육 상시 운영 - 센터 우수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(4월, 7월) - 센터 현장점검을 위한 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(4월) 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배포(12월)	** ‘어린이 식단작성 프로그램’, ‘센터정보 관리시스템’ 운영관리 - 센터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 및 우수사례 확산(2월) 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 거점 센터 지정·운영(정기협의회 개최, 4회) -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과정 운영 및 사이버 교육 상시 운영(3,292명) - 센터 우수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(4·7월, 77명 참석) - 센터 현장점검을 위한 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(4월, 207개소) 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개정(11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20명 이하 가정 어린이집 지원율(%)	60	67

3. 성과 및 한계

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급식관리 지원 수혜율 확대

- ‘16년 대비 지원 어린이 32만명 증가(117만명) 및 급식소 6,986개소 증가(32,093개소)

* 센터 시설 지원율 : (‘16) 46%(25,107/54,469개소) → (‘17) 59(32,093/54,469)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 확대로 가정 어린이집 등 20명 이하 소규모 급식소까지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확대

4-1-3	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
①	영양표시 확대·개선 및 교육·홍보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신영희 사무관 T.043-719-2187

1. 과제내용

- ☐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및 표시기준 개선
 - (가공식품)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로드맵 마련
 - (외식) 자율영양표시 확대 및 표시도안 보급
- ☐ 영양표시 교육·홍보 활성화 및 대국민 인식 확산
 - 산업체를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, TV광고 등 대국민 홍보, 소비자 인식 조사, ‘영양표시 읽기’ 캠페인 등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가공식품, 조리·판매식품 등 영양성분 표시 확대 로드맵 추진 - 영양성분 표시 단계적 확대 및 면제 범위 조정 등 추진 ○ 영양표시 대국민 교육·홍보 - 영양표시 확인 등 건강식생활 인식 개선 광고 제작·송출 및 수요자 맞춤형 영양표시 교육	○ 산업체 영양성분 표시 부담 완화 및 자율적 영양표시 유도를 위한 사후관리기준 개선 방안 마련(8월) ○ 산업체, 공무원 대상 영양표시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실시 - 영양표시 담당 산업체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총4회 176명 교육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영양표시 소비자 활용률(%)	70	71

3. 성과 및 한계

☐ 혼밥족 증가 등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편의점 도시락 등을 영양표시 대상식품으로 확대

- 즉석섭취·조리식품, 시리얼류, 코코아가공품 등(입법예고, '17.12)
 - * 의무대상 : ('07) 과자류 등 9개 식품군 → ('17) 즉석섭취식품 등 16개 식품군
- 영양표시 실태 조사를 통한 체계적 효율적 영양 표시 관리
 - *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15개 품목 중 당·나트륨 등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영양 성분 함량이 높은 제품(819품목)

☐ 산업체, 공무원 대상 영양표시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실시

- 영양표시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운영(총4회, 176명)
 - * 교육 대상 : (1기) 공무원 43명, (2기) 산업체 46명,
(3기) 산업체 67명, (4기)산업체 20명

☐ 다중이용시설(지하철), 수도권 및 지방의 옥외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

-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도 및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대국민 홍보
 - * 지하철 1~4호선, 옥외 광고, 카드뉴스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

☐ 대상별 맞춤형 영양표시 활용 및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

- 피자·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표시 매뉴얼 및 대상별 맞춤형 영양표시 활용 및 제공
 - * 장소별·정보제공방식(네임택, 메뉴판 등)의 특성에 맞는 도안 제공 등
 - * 교육 대상별(어린이, 청소년, 직장인, 주부, 노인 등) 특성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해당없음

4-1-4	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
①	어린이 기호식품 제조·판매환경 개선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반경녀 연구관 T.043-719-2279

1. 과제내용

□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보장을 위한 관리 강화

- 학교주변 판매 식품에 대한 국민 안심체감도 향상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및 정책 홍보 강화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·수입 관리 강화 -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활성화(연중)	○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·수입 관리 강화 -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심사(연중) * 과채주스, 과자 등 143개 품목 -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수거 검사(6월, 10월) * 품질인증제품 80개 검사, 부적합 없음 -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(11월) * 식품 표시기준과 용어 통일
○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 - 학교주변 위생취약업소 집중관리 (연중) - 특정일 대비 특별 점검(3,4,8월) - 학원가 등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·운영(연중)	○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 - 학교주변 위생취약업소 집중관리 (358,589개소 점검, 위반 92개소) - 특정일 대비 특별 점검(3,4,8월) * 봄 개학(32,418개소 점검, 위반 13개소), 어린이날(32,514개소 점검, 위반 7개소), 가을 개학(30,884개소 점검, 위반 9개소) - 학원가 등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(83곳 지정, 2,785개소 점검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대상별 맞춤형 홍보 실시 - 어린이 안전식품 탐험대 운영(4~12월) -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정책 홍보(연중) ○ 식생활 안전관리 직무역량 강화 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교육 과정 운영(3, 8월) -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대상 교육(연 2회)	○ 대상별 맞춤형 홍보 실시 - 어린이 안전식품 탐험대 운영(4~12월) * 출범식 및 위촉장 수여(4월, 1,100명) ** 식생활 실천교육(62회), 캠페인(57회), 제조업소 현장견학(17회), 모의법정 개최(2회) -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정책 홍보(연중) * 박람회 등을 이용한 정책홍보(5월) ** 국정만화, 카드뉴스 홍보(2, 4월), 캠페인(8~9월, 1,600명), SNS이벤트(11~12월) ○ 식생활 안전관리 직무역량 강화 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교육 과정 운영(3·7월, 82명) -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대상 교육(3·4·11월) * 서울, 인천지역 교육(4·11월, 172명), 업무매뉴얼 제작·배포(3월, 3,500부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학교주변 식품안전체감도(%)	60	60.5

3. 성과 및 한계

☐ 학교주변 판매 식품에 대한 국민 안심체감도 향상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

* 학교주변 조리·판매업소 위반율 감소 : ('15) 0.05 → ('16) 0.04 → ('17) 0.03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학교주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위생취약업소 관리 강화

* 문방구 등 위생취약업소 및 부적합업소 이력점검(주기적 기록 및 집중관리)

4-1-4	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
②	초·중·고등학생 대상별 식생활 안전·영양 교육 지원 확대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민정 사무관 T.043-719-2255

1. 과제내용

- ☐ 지속적인 식생활 안전·영양 교육 지원 확대하여 어린이·청소년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 및 실천 유도
 - 영양·식생활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및 식품안전·영양 교육을 위한 중·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지원 확대
 - * 초·중·고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교재 및 교사용지침서 보급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교육부 및 시·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참여학교 수요조사(1~2월) ○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년별 교육교재 등 제작·배포(3월) ○ 참여학교 담당 영양(교)사 대상 설명회 개최(3월)	○ 교육부 및 17개 시·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참여학교 수요조사(2월) ○ 교재 활용 가이드 제공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(3월, 6월) * (대상) 참여·실천학교 영양교사 371명, (지역) 서울, 대전, 충북(4회) ○ 영양(교)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및 교구 등 제작·배포(3월~) * (교재) 초·중·고등학교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, 교육용 ppt 등 ** (교구) 미각키트, 핸드플레이트, 포스터, 실천캠페인 배너 등 ○ 학생들의 체험·참여 활성화한 실천 학교 시범운영(6월~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영양교사 대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과정 개설·운영(7~8월) ○ 식품안전·영양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(10월)	○ 영양(교)사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안전·영양 전문교육과정 운영(7~8월) * (내용) 국·내외 교육사례, 교재 활용법 등 (인원) 초·중·고 영양(교)사 164명 ○ 제6회 식품안전·영양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(10월) 및 시상(12월) * (참가) 초·중·고 18개 우수사례 (시상) 참여학교 7개, 실천학교 4개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초등학교 교육 참여 학생비율(%)	7.0	6.4

3. 성과 및 한계

☐ 식품안전·영양교육 실천학교 시범운영

- 식품안전·영양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전교생 대상 올바른 식생활 실천캠페인 등 적극 수행하는 실천학교 운영

* 시범운영 현황 : 경기, 전남, 세종 지역 41개 학교(21,533명)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체험·참여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된 실천학교 운영 확대

4-1-4	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
③	식생활 안전지수 조사·공표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반경녀 연구관 T.043-719-2279

1. 과제내용

- ☐ 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」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 수행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 환경개선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
 -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인구규모 및 생활여건에 따른 식생활 안전·영양수준 평가 실시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'17년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실시 (2~12월)	○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계획 수립 (2월) ○ '17년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위탁 사업 실시(4~12월) - 인지·실천 수준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(5~7월) * (대상) 1,736개교 초등학생 43,235명 - 안전지수 조사 설명회 및 컨설팅 (5~9월) * 설명회(권역별 10회), 컨설팅(105개 지자체) - 지자체 실적 취합 및 검토(10월) - 제출 자료 분석 및 식생활 안전 지수 결과 산출 및 평가반 운영 (12월)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수준을 확인·평가
 - 지자체의 노력 및 환경수준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·평가하고, 결과물인 「식생활 안전지수」 공표를 통해 향후 정책 추진에 환류
 - * 전국 228개 지자체(대도시 69, 중소도시 77, 농어촌 82) 구분하여 평가
 - ** 어린이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정책의 수행정도, 인지·실천수준,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공급 환경 개선정도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결과에 따른 평가(“18.1)
- 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심의(“18.2)
- ☐ ‘17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·평가 결과 공표(“18.3)

4-1-5	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
①	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이주영 사무관 T.044-201-2272

1. 과제내용

- ☐ 정책수혜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사회적 비용(의료비 등) 절감
 - 식생활·건강이 취약한 고령자 대상에 대해 사전 예방적 식생활 관리·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·확대
 -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강화로 우리 농산물 소비 저변 확대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및 대국민 바른식생활 홍보·캠페인 추진 - (어린이집) 제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영·유아 미각교육 - (학교) 초등학생 대상 “쌀 중심 식습관”교육 - (대학생) 대학교 식생활교육 관련 강의 개설 지원 - (도시민) 유통업체 문화센터를 통한 식생활교육 강좌 운영 - (기타)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활성화 - (가치확산) 바른식생활 확산을 위한 홍보·캠페인 추진	○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및 대국민 바른식생활 홍보·캠페인 추진 - (어린이집) 제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영·유아 미각교육 실시 (200개원) - (학교) 초등학생 대상 “쌀 중심 식습관”교육 실시(219개교) - (대학생) 대학교 식생활교육 관련 강의 개설 지원(15개교) - (도시민) 유통업체 문화센터를 통한 식생활교육 강좌 운영(54개소) - (기타) 지역아동센터,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실시(164개소)

추진계획	추진실적
	- (가치확산) 바른식생활 확산을 위한 홍보·캠페인 추진 * ‘가족밥상·가족사랑의 날’ 캠페인, ‘식습관 개선’ 공익광고 제작·송출 등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체험공간 지정(개소)	230	232
○ 교육기관 지정(개소)	63	59
○ 초등 텃밭가꾸기(개소)	250	368
○ 어린이집 텃밭(개소)	110	61

3. 성과 및 한계

☐ (성과) 식생활교육·체험 참여자 만족도가 4.1점으로 조사(5점 척도)

☐ (한계)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컨텐츠 부족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교육대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컨텐츠 지속 개발·보급

4-1-6	학교 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
①	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 교육 강화
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 T.044-203-6543

1. 과제내용

☐ 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교육 강화

- 학교별 「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」에 「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교육」을 반영하여 실시

☐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

- 성장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, 나트륨·당류 저감화 실천,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개선(자동출력 식재료 품목 확대) 등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단위학교 「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 교육계획 수립·추진(2월~)	○ 「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」 지침 시달(2017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, '16.12월) -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, 영양·식생활교육 강화, 염분·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제한 등 영양관리 강화
○ 식품안전·영양교육 교재 개발·보급(3월) - 식품안전·영양교육 교재를 교육지원 사업 참여학교에 보급	○ 식품안전·영양교육 교재 개발·보급(4월, 식약처 협업) - 식품 안전·영양교육 교재를 512교에 117천부 보급 * (초) 463교 110,320부 (중) 40교 4,498부 (고) 9교 1,874부
○ 「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」 개정(~12월)	○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 관련 정책자문회의(5월) 및 정책연구 실시(12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나트륨 및 당류저감화 추진(계속) - 단위학교에서의 나트륨 및 당류저감화 계획을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수립·추진,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확인 ○ 학교 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 등 추진상황 점검(12월) ○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개선으로 추가 지정된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식단표에 자동출력토록 개선(8월)	○ ‘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’ 지침 시달(2017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, '16.12월) - 나트륨 저감화 계획 수립·추진(11,143개교, 95.0%) ○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 - 영양상담실 운영(11,712개교, 99.3%),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(11,712개교, 100%), 나트륨 저감화 계획 수립·추진(11,143개교, 95.0%) ○ 추가 지정된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번호를 추가하여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학교급식 시스템 개선(8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영양·식생활교육 실시율(%) (영양교사 배치교 중 월 2회 이상 교육실시)	90	81

* 실과, 기술·가정, 체육 등 관련교과 교사를 통해 실시한 교육실적은 제외하고 작성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영양·식생활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단위학교에서의 영양·식생활교육 실시율은 전년 수준 유지

* 영양교사 영양·식생활교육 실시율(월2회 이상) : ('16) 80% → ('17) 81%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 교육 강화(계속)

4-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

4-2-1 식중독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

①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정정순 사무관 T.043-719-2104

1. 과제내용

- ☐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
 - 「식중독 대책협의기구」 운영을 통한 식중독예방 대책 수립·추진
 - 학교,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발생우려 시설 집중 지도·점검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범정부 「식중독 대책협의기구」 운영(연 3회) * 교육부, 복지부 등 10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, 민간단체 등 32개 기관 참여 ○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·점검 및 교육 실시 - 학교 급식소 합동점검 및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* 학교급식지원센터(전국 50개소) 점검 - 전국 학교장·영양사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(1~3월, 7~9월) * 학교급식 식재료, 보관 관리사항, 발생 사례별 주의 및 예방법 등 교육	○ 중앙정부, 시·도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「식중독 대책협의기구」를 통해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마련·추진(2월) * 여름철, 겨울철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운영(5.11월) ○ 집단급식소 정기점검 및 특별관리 - 개학철 대비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합동점검·수거검사(2 8월) * 식약처·교육부·지자체 협업으로 학교 급식소 11,180개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4,659개소 점검, 수거검사 500건 - 전국 학교장·영양사·조리사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(1~3월, 7~10월) * 11,747개교 학교장 영양사 414회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청소년수련시설 등 발생 우려 시설 집중관리 - 청소년수련시설 등 지도점검(4월) 및 컨설팅(연중)	○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청소년수련시설·도시락 제조업체 등 점검(4월, 3,528개소) 및 컨설팅(4만개소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(십만명당)	50	37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학교급식 식중독을 저감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을 통한 식중독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'16년 대비 식중독 환자수 감소

*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 : ('16) 3,039명 → ('17) 2,153명 (29.2% ↓)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소 지도·점검 강화
- 학교급식시설 전수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
 -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·점검 강화

4-2-1	식중독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
②	식중독 예방 홍보·교육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윤태형 연구관 T.043-719-2105

1. 과제내용

- ☐ 식중독 통계를 분석 계절별, 원인균별, 대상별 맞춤형 홍보 실시
 - 원인별, 대상자별 눈높이에 따른 참여형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홍보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맞춤형·생활밀착형 식중독 예방 홍보 - (원인균) 예방법 동영상(5종) 제작 (6월) 및 송출** (연중) - (계절별) 사례로 보는 식중독 등 카드뉴스 제공(연중) - (참여형) 생활속 식중독 예방 실천 유도를 위해 홍보물 배포(연중) * 손씻기 이벤트 및 리플렛, 조각퍼즐 등 ○ 식중독 담당자 역량강화 - 식중독 및 학교급식 담당자 역량 강화 * 원인조사 및 전문강사양성 교육	○ 원인·계절·지역별 맞춤형 홍보 - (핵심메시지) 원인균, 원인식품별 예방법 홍보동영상 5종 제작·송출 - 식중독 발생사례별 카드뉴스 22종을 제작하여 SNS 및 홈페이지 등에 제공 - 식품안전의날 행사 등에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손씻기체험, 교구 전시,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 ○ 식중독 예방 담당자 역량강화 - 위생부서 담당자 현장업무 역량 강화교육 실시 * 원인조사과정(3회, 79명), 전문강사 양성 (4회, 87명) 운영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개학철 학교급식관계자 식중독 예방 교육(1~2월, 7~8월) * 11,747개교 학교장 영양사 대상 - 사회복지시설 조리종사자 교육 (4~7월) *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대상	- 학교장·영양사 식중독 예방 특별 교육 * 봄·가을 개학시기 총 414회 교육 - 사회복지시설 급식관계자 대상 예방교육 * 급식관계자 및 조리종사자 47,047명

☐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☐ 원인균·원인식품별 예방법 실천메시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민원협업 강화

○ 계절별·대상별 맞춤형 식중독 예방 홍보로 인식개선 유도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식중독 홍보계획 수립

○ 주요 원인균별, 시기별 이슈에 따른 맞춤형 홍보

○ 식품위생 담당자, 급식종사자 등 역량강화 교육 지속

4-2-1	식중독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
③	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윤태형 연구관 T.043-719-2105

1. 과제내용

- ☐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발생 저감화
-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, 집단급식소 식품용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여부 검사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노로바이러스 집중관리 - 식품용 지하수 노로바이러스검사 * 지자체, 지방청 및 평가원에서 총 680건 - 채수장비 및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장치 보급 확대 *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장비 ○ 학교 등 비영리 급식시설의 살균소독장치 사후관리 - '12~'13년 설치한 지하수 살균(염소 및 복합살균)·소독장치, 반납(철거) 및 이전설치 된 장치에 대한 유지보수(연중)	○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 -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검사 * 총 694건 검사, 1건 검출 소독장치설치 등 사후조치 -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장비 등 검사 장비 확대 * 8개 시·도 노로바이러스 장비 구입 ○ 학교 등 비영리 급식시설 살균소독장치 사후관리 - 학교 등에 보급한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정상작동 여부 점검 * 학교 321대, 청소년수련시설 79대, 어린이집·유치원 등 사회복지시설 1,212대 사후관리(연중)

- ☐ 성과지표 : 해당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□ 집단급식소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저감

○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감소

* ('16) 3건 → ('17) 1건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에 대한 '18년 국고보조금 확정 알림
및 사업계획 제출 요청

4-2-1	식중독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
④	식중독균 추적 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윤태형 연구관 T.043-719-2105

1. 과제내용

- ☐ 신속한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식중독균 유전자형(PFGE) 분석, 유전정보 DB 운영 및 전국 네트워크 체계 구축
 - 수입·유통식품 및 농·축·수산물에서 분리된 식중독균 유전자형을 비교 분석하고 DB 관리로 원인규명 및 오염원 추적관리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식중독균 탐색조사 - 생산단계부터 주요 식중독 원인균 탐색 강화 * 연간 12,000건 모니터링 - 식중독균 분리균주의 유전자형 (PFGE) 분석 및 DB화(연중) - 타부처 보유 식중독균 공동 활용 ○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시스템운영 - 식중독균의 다양한 생물화학적 유전정보 확보 및 DB화 * 식중독균 DB(누적) ('17) 8,000건	○ 식중독균 탐색조사 - 생산(식품, 용수, 토양 등)·유통 전 (全)단계 식중독균 탐색 및 확보 * 연간 12,000건 모니터링 - 식중독균 PFGE 등 생물화학적 유전정보 DB화(1,725건) - 타부처 보유 식중독균 정보 공동 활용 협업하여 생산·유통 단계 농·축·수산물 유래 분리균주 확보 * 농산물의 병원성대장균 99, 수산물 비브리오균 3종 등 ○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시스템운영 - 식중독균 탐색조사를 통해 확보한 유전정보 분석 및 DB화 * 식중독균 유전정보 ('17년) 8,200건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식중독균 유전정보 DB 확보건수	1,600	1,725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식중독 신속한 원인규명 및 체계적 추적관리로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 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도입
-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 도입으로 전장유전체 확보 및 원인 규명을 강화

4-2-2	음식점 주방문화 개선
①	주방문화 개선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주원 사무관 T.043-719-2103

1. 과제내용

- ☐ 개방형 주방문화 확산 및 주방문화 개선 대국민 공감대 형성
 - 개방형 주방 만들기, 위생모 착용 등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 및 홍보
 - 표준설계도 보급,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한 업체 참여 유도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사업 -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(1~12월) * 모범음식점, 관광특구 및 특화거리 내 일반음식점 등 대상으로 실시 - 개방형 청결주방 시범업소 선정(4월) 및 운영 * 소규모 영세업체 지원을 위하여 100㎡ 이내의 영업장 위주로 선정 ○ 주방문화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위한 교육·홍보 - 대국민 홍보 광고 제작(3월) 및 송출(5~10월) - 주방문화 개선 콘서트 및 UCC 공모전 등 국민 참여 확대	○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-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* 3,138개소 신청, 2,395개소 평가, 710개소 지정 - 음식점 위생평가를 위한 기준수립 * 평가항목 및 기준 등 세부운영 고시(5월) - 개방형 주방시범업소 선정·운영(40개소) * 시도추천을 받아 47개소 선정하여 40개소 사업 완료 ○ 주방문화인식개선 및 실천을 위한 교육·홍보 - 열린 청결주방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영상(5종)을 제작하여 SNS 홍보 - 위생수칙이 포함된 열린 주방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 * 17개시도 및 시군구에 1,000부 배포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17개 시·도가 참여하는 '주방문화 개선 협의체' 운영(연3회)	- 17개 시·도가 참여하는 '주방문화 개선 협의체' 운영(연3회) * 시도, 관련협회 및 전문가 등 30명 참여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개방형주방참여업소(개소)	14,000	14,562

3. 성과 및 한계

☐ 음식점간 자율경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확대

○ 음식점 위생등급 적용 음식점 : 0.11%(710개소)

4. 향후 추진계획

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및 대국민 홍보 강화

4-2-3	나트륨 및 당류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
①	나트륨 저감 실천 확산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민정 사무관 T.043-719-2252

윤은경 연구관 T.043-719-2262

1. 과제내용

-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 저감을 위한 소비자 실천 환경 조성
 - 실생활에서의 저감 실천이 가능하도록, 정보전달력 향상, 저감 제품 개발 확대, 저감화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한 식습관 변화 유도 - 짭맛 미각판정 도구 및 개인별 나트륨·당류 섭취수준 자가 판단 도구 보급(1~12월) - 범국민 참여 행사(5월) 및 튼튼 먹거리 탐험대 등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(연중) -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(5월) 및 소비자 교육 강화(연중)	○ 나트륨·당류 줄이기 확산을 위한 대규모 국민 참여 프로그램 실시 - 짭맛 미각판정 도구 및 개인별 나트륨·당류 섭취수준 자가 판단 도구 지자체, 보건소, 학교,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보급(5·8월, 1,097기관, 14,600세트) - 나트륨·당류 줄이기 범국민 참여 행사 전개(4~5월) * ‘식품안전의 날’ 기념 범국민 참여 행사 개최 및 지역 대표행사 등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(10회, 3만여명 참가) - 제6회 삼삼한 요리경연대회(5월) * 저염 레시피 개발(119개) 및 요리책자 개발(삼삼한 밥상 VI) - 나트륨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(연중) * 슬로건(2,227점), 손글씨(101점), 로고송(43점), 웹툰(20점) 분야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식품 공급단계에서 나트륨 저감 - 외식·급식 식자재, 가공식품의 나트륨 저감 기술 지원(1~12월) -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소금 대체물질 적용 가이드 마련(11월) - 김치, 장류, 절임류 업체 대상 나트륨저감 기술지원 확대(1~12월)	- 튼튼먹거리 탐험대 체험프로그램 운영(3월~, 712회, 18,418명) - 면류, 샌드위치, 햄버거류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실시(5.18) - 소비자 단체 연계 지역별 나트륨·당류 줄이기 교육 실시(29회, 1,500명) ○ 식품 공급단계에서 나트륨 저감 - 가정간편식(도시락, 햄버거) 나트륨 저감화 기술 가이드 개발(12월) - 소금 대체물질 적용 제품화 평가(B2B 식자재 - 돈가스소스, 된장) - 김치, 장류 중소기업 대상 현장 저감기술 컨설팅(79개업체) * 저감제품 품질분석 지원(21개제품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나트륨 저감 제품 증가율(%)	20	19.1

3. 성과 및 한계

□ 식생활 패턴 변화, 시장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저감화 추진

○ 우리나라민의 1일 나트륨 평균 섭취량 지속 감소

* ('16) 3,890 → ('17) 3,669mg

→ 나트륨 저감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84%인데 비해 실천 노력 정도는 49.8%로 2/3 수준임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나트륨 저감 필요성 인식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방법, 저감 조리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확대

4-2-3	나트륨 및 당류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
②	당류 섭취 저감화 추진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민정 사무관 T.043-719-2252
윤은경 연구관 T.043-719-2262

1. 과제내용

- ☐ 국민의 당류 적정 섭취를 위한 당류 저감 기술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 확대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식습관 변화를 위한 당류 줄이기 인식 확대 - 당류 줄이기 소비자 인식 조사 실시(10월) -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당류 관련 교구 개발(11월) - 청소년 건강 캠프 등에 당류 줄이기 프로그램 개발 운영(연중) ○ 당류 저감 실천을 위한 식환경 조성 - 청소년 전용 이용시설 당류 함량이 적은 음료 우선 판매 권고(1월) - 요리대회 등을 통한 당류 저감 조리법 등 발굴 및 보급(5월)	○ 식습관 변화를 위한 당류 줄이기 인식 확대 - 당류 줄이기 소비자 인식도 조사 실시(10~12월, 1,500명 대상) * 결과 : 당류저감 인식도 43.0% - 학교 등 영양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당류저감 콘텐츠(교구) 개발 * 실험 및 게임 교구(저학년 2종, 고학년 2종) - 건강 캠프 등 연계할 수 있는 당류 줄이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(7~8월, 2회 53명 참석) * 미각테스트, 조리실습, 신체활동 ○ 당류 저감 실천을 위한 식환경 조성 - 청소년 수련시설 내 매점 대상 당류 함량 적은 음료 판매 권고 및 음료수 진열 가이드 배포(1월) * 청소년 수련시설 매점(164개소)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음료 판매 프랜차이즈 등 당류 저감 실천 매장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(11월) - 과자류 등 가공식품에서의 당류 저감 기술 가이드 개발(12월)	- 제1회 당당한 요리경연대회(9월) * 저당 레시피 개발(80개) 및 요리책자 개발(덜 달게 먹는 당당한 밥상 I) -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당류 저감 참여유도 및 당류 저감 가이드 마련(12월) - 당류 저감 제품 개발을 위한 제조·가공 정보집 제공(9월) * 아이스크림, 음료류, 과자류 정보집 배포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비율(%)	10%미만	9.03*

* '17년에 산출된 '15년도 당류섭취량 자료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선제적인 '제1차 당류 종합계획' 수립 후 당류 적정 섭취량 인지, 덜 달게 먹기 실천 등 국민의 당류 저감 인식 증가

* 당류 저감 인식도(%) : ('16) 42.4 → ('17) 43.0 (0.6% 증가)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어린이 대상 영양·식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범국민 참여 확대로 당류 저감 인식 제고

- ☐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당류 저감 확대 등을 통한 저감 환경 조성

4-2-4	학교급식 위생·안전관리 강화
①	학교급식 점검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
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 T.044-203-6543

1. 과제내용

☐ 학교급식 위생·점검체계 개선

- 학교급식소 연2회 정기점검, 학부모 등 민간인 참여제 운영 등

☐ 부적합 식재료 납품업체 제재조치 강화

- 위생기준 부적합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해 입찰참여 자격제한 등

☐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

- 국립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및 교육청 주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확산 유도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학교급식 위생·안전관리 강화 - 겨울방학기간 급식시설·기구에 대한 점검 및 개·보수(1~2월) - 학교급식 위생·안전점검(학부모 참여) 등을 강화 시달(1월) -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소 전체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	○ 학교급식 위생·안전관리 강화 - 개학대비 급식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(10,358개교) 및 조리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개·보수 조치(40,275백만원) - ‘학교급식 위생·안전관리 강화’ 지침 시달(2017년 학생건강증진 기본 방향, ‘16.12월) - 교육청 홈페이지에 안전점검 결과 등 공개 활성화 지침 시달(시·도 학교급식 관계관 회의, ‘17.1.12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학교장 등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교육 강화 - 학교장 등 학교급식 관계자의 급식안전 및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연수 추진 ○ 지역·계절·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위생적인 식단 개발·보급(하반기) ○ 부적합 식재료 납품업체 제재조치 강화(1월~) - 불공정 행위 업체는 입찰참여 제한기간 연장(3개월 → 12개월) 및 입찰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·운영 ○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 환경 개선 - 겨울방학 기간 급식시설·기구에 대한 점검 및 집중 개·보수 실시(1~2월) - 국립학교 운영실태 서면 및 현장 실태조사(2~3월) 및 예산확보 ○ 국가차원의 '학교급식 정책 모니터단' 구성·운영 -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(170여명), 학교급식 현장 모니터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	○ 교육청별 학교장 등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교육 실시 - 학교장, 영양(교)사, 급식관계자 대상 급식안전 등 관련 교육 실시(51,870명, '17.상) ○ 학교급식 식단작성 방법 및 식중독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참고식단 960종 개발(12월) ○ 농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'공급사 자격제한 기준' 개정('16.12.22)을 통해 불공정 행위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기간 연장 ○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 환경 개선 추진 - 개학대비 급식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(10,358개교) 및 조리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개·보수 조치(40,275백만원) - 국립학교(36교) 대상 실태조사(2~5월)를 통한 개선사항 등 도출 및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○ 국가차원의 학부모 대상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구성·운영(180명) 및 권역별 연수회(총 4회, '17.4.18~4.27), 평가대회('18.2.8)를 통해 현장소통 강화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학교수	500	507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, 학교급식소 위생·안전 관리 및 점검 강화, 불공정 행위 업체 입찰참여 제한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환경 조성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학교급식 위생·안전점검 강화(계속)

4-2-4	학교급식 위생·안전관리 강화
②	식재료 납품전 안전성 조사체계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서금현 사무관 T.054-429-4132
품질검사와 서문교 서기관 T.054-429-4121

1. 과제내용

- ☐ 학교급식 식재료(농산물)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학교급식 납품계약 농가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(3,500건) 시행(1~12월) - 납품계약 농가 전수조사 ○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취급 농산물 안전성 조사(1,500건) 시행(1~12월) - 지정업체 취급 농산물	○ 학교급식 납품계약 농가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(4,803건) 시행(1~12월) - 납품계약 농가 전수조사 ○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취급 농산물 안전성 조사(2,279건) 시행(1~12월) - 지정업체 취급 농산물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학교급식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지원(건)	3,500	4,803
○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지원(건)	1,500	2,279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성과

- 학교급식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지원(건)으로 4,803건 안전성조사 실시

-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지원(건)으로 2,279건 안전성조사 실시

☐ 한계

- 학교급식 및 식재료 우수관리업체의 농산물은 대부분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농산물임
-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식재료 우수관리업체의 중복이 다수 있음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(개선 대책)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식재료 우수관리업체지정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조사건수 하향 조정
- ☐ (향후 계획) '18년 농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(계속)

4-2-5	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
①	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
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 T.044-203-6543

1. 과제내용

- ☐ 식중독 감시 및 신속 보고체계 강화
 - 학교단위 감시체계 지속 운영으로 식중독 발생 여부 감시
 -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교육청과 시·군·구(보건소)에 신고
- ☐ 초동단계 신속대응 및 원인조사 협조
 - 식중독 발생 시 학교장 주재 대책회의,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급식대책 마련 등 초동단계 신속 대응
 -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교육청 전문가 참여 및 관계기관 협업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학교 식중독 감시 및 보고체계 운영 강화 - 학교단위의 '식중독 대책반' 구성·운영 등 '학교단위 상시 감시체계 및 신속 보고체계' 운영 강화 ○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 - 시·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관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철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강화	○ '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' 지침 시달(2017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, '16.12월) - 신속보고 체계 확립, 초동단계 신속대응 및 원인조사 협조 등 강화 ○ 2017년도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(총4회, 1.12, 3.23, 5.12, 7.13) - 학교급식 관계자 특별연수 추진,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, 학교급식 미리 사전 예방, 관계기관 합동 점검 결과 등 대책 시달 등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급식관계자 연수 등을 통하여 식중독 대응체계 정보 공유 - 학교급식 담당자 연수회 및 신규 영양교사 직무연수 실시(6월) ○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과정 운영(식약처 협업) - 식중독 예방 및 신속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식중독 원인조사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 개설·운영 ○ 영양(교)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교육 강화 - 방학기간 등을 활용한 영양(교)사 등 급식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토록 교육 실시 ○ 범정부 협업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 - 식약처, 지자체, 교육청 등 관계 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역학(원인) 조사 공동대응 및 확산방지	○ 신규 영양교사 직무연수 실시(7.27~7.28) 및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회(11.16~11.17, 187명) 실시로 직무능력 향상 및 발전방안 모색 ○ 학교급식 위생관리 역량강화 연수 운영('17.7.17~21, 총 2기, 96명) -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 증상 및 특징 이해, 식중독 대응 모의실습 등 교육청 담당자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역량 강화 ○ 교육청별 학교장 등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교육 실시 - 학교장, 영양(교)사, 급식관계자 51,870명('17.상) 대상 급식안전 등 관련 교육 실시 ○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고위급 회의(2.22) 및 실무급 회의(5.29, 11.21)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학교급식 개선 방안 협의

☐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☐ 상시 학교단위 감시체계 운영 및 식중독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식중독 확산 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

- 식재료 오염 및 김치 완제품, 폭염 등으로 인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*되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한계

※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 : ('16) 36건 3,039명 → ('17) 31건 2,298명

* 발생사례 : ('06.6) 32개교 3,613명, ('14.5) 10개교 1,163명,
('16.8) 14개교 2,029명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체계 상시 운영(계속)

4-3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

4-3-1 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

①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정형욱 연구관 T.043-719-2441
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 권용관 연구관 T.043-719-4421

1. 과제내용

☐ 비타민·무기질의 최대함량 기준 개선

- 비타민·무기질 제품의 실제 유통실태를 반영, 최대함량기준 재설정
-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근거 제출 의무화 및 승인 후 판매토록 제도 마련

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원료 확대

-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의 발굴 및 고시 등재 추진
 - 미국, 캐나다, EU 등 주요국에서 인정된 원료 중 국내 도입 가능한 원료 발굴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및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
-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고시 전환 지속 추진
 - 고시 등재 제도 개정 후, 요건이 충족된 원료 및 농진청 등 국가 기관에서 요청하는 기능성 원료 고시 등재

2. 추진실적

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비타민·무기질 최대함량기준 개선(6월) - 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 고시	○ 비타민·무기질 최대함량기준 개선 - 유통제품 실태조사 및 분석(1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원료 확대(12월) -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의 발굴 및 고시 등재 추진 -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고시 전환 지속 추진 ○ 기능성원료 재평가(12월) - 기능성원료에 대한 주기적·상시적 재평가 실시	- 영업자 대상 설명회 및 안전성 입증자료제출 요청(3월) - 비타민·무기질 일일섭취기준 재평가(8~11월) - 최대함량기준 개정고시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('18.2월) ○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원료 확대 - 기능성 원료 발굴을 위한 연구 과제 추진(5~11월) - 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(11월) * 회화나무열매추출물 등 ○ 기능성원료 재평가 - (주기적) 대두올리고당 등 19종 대상 공고(8월), 영업자 자료제출(8~12월) - (상시적)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9종 재평가 완료(12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	고시 개정	행정예고

3. 성과 및 한계

☐ 성과

- 개별인정형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

□ 한계

- 주요외국 현황, 국내 실정 등을 반영한 비타민·무기질 기준 설정 및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안전성·기능성 추가 검토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비타민·무기질 일일섭취량 재설정에 대한 기준·규격 개정('18)

- 정책연구* 결과 활용, 일일섭취량의 최소·최대함량 기준 재설정

* 건강기능식품 비타민·무기질 일일섭취기준 재평가 연구('17.8~11)

□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원료 확대 지속 추진

- 연구과제* 결과 활용 및 농진청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하여 기능성 원료 발굴

*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후보 원료 조사 연구('17.5~11)

-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고시 전환 지속 추진

- 고시 등재 요건이 충족된 기능성 원료 고시 전환

4-3-1	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
②	건강기능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

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한규홍 연구관 T.043-719-2456

1. 과제내용

- 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 기술지원
 - GMP 미지정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GMP 조기정착 기반 마련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- GMP 희망업체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 및 교육 실시 (3~11월) * GMP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(1.25억원)	○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 조기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- GMP 희망업체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(25개 업체) 및 교육(2회) 완료

- 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GMP 컨설팅 업체수	25	25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업체의 영세성으로 GMP 컨설팅 지원 업체의 지정율 저조

- GMP 컨설팅 지원 업체의 영세성(매출액 10억 미만)으로 인해 '16~'17년까지 55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, 25%(14개소)만 GMP 지정을 받음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GMP 컨설팅 지원 업체의 지정을 향상을 위해 시설자금 지원 필요

- 영세업체(연 매출액 10억 미만)의 위생시설개선 지원 자금 확보를 위해 중기예산에 편성하여 추진
 - '19년도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

* ('19) 80개소*20백만원*50%=800백만원, ('20) 86개소*20백만원*50%=860백만원

4-3-2	기능성평가센터 건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
①	기능성평가센터 건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

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김방연 사무관 T.044-201-2182

1. 과제내용

- ☐ 분양·입주기업 기술지원 본격 가동 및 관심기업 유치 지원
 - 기능성 제품개발 및 공정개선 등 입주기업 기술지원 본격화
 - 기술지원 품질 고도화를 통한 분양기업 관심 유도

2. 추진실적

- ☐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입주기업 및 분양관심기업 공동 기술개발 20과제 지원 추진(12월 까지) ○ 기술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기능 구축(12월 까지) - 건강기능식품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One-Stop서비스 지원 - 건강기능식품관련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○ 기업지원시설 기능별 공인인증기관 지정 추진(12월 까지)	○ 기업공동기술개발 22과제 지원 - 축산부산물을 활용한 조미제품 개발, 포장박스 디자인 및 설계 등 ○ 입주기업별 전담 코디네이터 매칭 완료 - 약 2,000건 서비스 지원(기술개발 지원, 애로기술컨설팅, 검사·분석 및 시제품제작 지원 등) - 산학연 협의회 개최(8회) 및 전북 권역 산학연 교류·협력 협약 및 실무협의회 구축 ○ 파일럿플랜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(GMP) 적용 사업장 지정 완료('17.9월)

☐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기업공동기술개발 지원(건)	20	22

3. 성과 및 한계

- ☐ 입주기업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지적재산권 획득, 착공공장 시설 인증, 디자인 및 시제품 출시, 투자유치 건인 등 22건의 성과 도출

4. 향후 추진계획

- ☐ 전담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컨설팅 등 지원
- 분야별 기술사(전문가)가 입주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기술을 진단 후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기업수요 적극 발굴